

할 수 있다. 전자는 정치의 과정적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치의 내용적 경계를 둘러싼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사회화' 운동은 정치의 경계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사회화를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의 외부를 부단히 내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민주주의의 내부와 외부의 지배와 저항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단히 그 경계가 재구조화된다.

특정한 시공간에서의 정치가 사회화되는가 국가화되는가하는 것은, 특정한 의제나 요구와 이해, 그것을 담지하는 세력이 민주주의의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하는 것으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집단들이나 그들의 요구는 특정한 정치세력으로 대표되게 된다(이것을 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고민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정치의 사회화,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사회화는 현실적으로는 배제된 특정한 정치세력이 내부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배제된 사회적 집단들과 그들의 요구가 민주주의 제도의 내부에서 반영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치가 지배의 헤게모니의 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국가화'의 기제들로서는 금단(禁斷), 배제(排除), 선택적 포섭(包攝)의 기제가 존재할 수 있다. 특정한 정치활동을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의사)합의에 의해서 비정치적 영역으로 유예시키는 금단,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 특정한 정치활동을 제도정치적 장으로부터 억압하는 배제, 정치와 사회의 괴리가 극대화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의 요구와 인자를 제도정치에 흡수해들이는 선택적 포섭 등을 그것이다. 이 외에도 국가, 정치와 사회의 관계를 둘러싸고, 국가가 완전히 폭력으로 일체화되어 정치가 소멸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특정한 시공간에서 국가의 폭력 그 자체로 일체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80년 광주 학살에서 보여지는 국가는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단은 '의사합의'를 창출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정치를 민주주의의 외부로 만든다. 배제는 강제적 방식으로, 억압적 방식으로 특정한 정치를 민주주의의 외부화한다. 반면에 선택적 포섭은 바로 그러한 금단과 배제가 대중의 변화된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그리하여 지배와 국가의 위기가 출현하게 될 때 특정한 사회적 정치를 내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정치의 관계에서 두 극단의 유형들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림시가 지적하듯이, 국가는 폭력으로서의 정치사회와 동의로서의 시민사회로 구성된다고 할 때, 국가가 완전한 폭력과 강압으로 통치하는 경우와 완전한 동의로서의 국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자는 국가통치세력이 민중의 동의를 전혀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후자는 강압의 필요성이 전혀 없이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가가 완전한 폭력으로 작동하게 될 때 거기에는 정치가 소멸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의 폭력성이 완전히 극복되거나 혹은 폭력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후자는 사실 '이상향'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는 현실에서 많이 나타난다. 사실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체제나 제3세계의 극단적인 군부독재, 유고와 같은 내전적 상황에서 소수파 인종에 대한 다수파 인종의 폭력통치도 그러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80년 광주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치적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 투쟁에 있어서 광주항쟁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사회화'의 최고의 형태는 정치가 사회와 일체화되는 상태(정치가 사회로부터 유리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광주항쟁에서 바로 이러한 정치와 사회의 일체화상태가 실현되었고 필자는 이를 '순수정치'라고 부르고 있다.

광주항쟁은 우리에게 국가, 정치, 사회의 관계에 대한 중대한 세계사적 경험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항쟁은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광주학살이며 다른 하나는 광주무장항쟁과 해방광주의 실현이다. 이 글의 맥락에서 광주학살의 의미는 정치가 소멸하고 국가가 폭력 그 자체가 된 상황을 의미한다. 80년 광주사건은 '본질로서의 국가폭력'이 '현실로서의 국가폭력'이 된 사건이었다. 통상 '본질로서의 국가폭력'이 '현실로서의 국가폭력'이 되지 않는다고(조희연·조현연, 2002). 지배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의 장으로서의 정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적 위기상황이나 지배세력이 피지배세력의 저항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관용을 보이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폭력으로 일면화되고 정치는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의 소멸상황, 그림사적 표현으로는 헤게모니가 전적으로 부재한 강압 그 자체로서의 국가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80년 광주학살의 상황이다. 국가가 폭력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 바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의 소멸과 국가의 폭력화에 대해서 사회와 그 구성원인 민중이 응전하느냐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통상적인 하나의 방법은 침묵, 목중, 도피 등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압도적인 폭력에 직면하여, 생존 자체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민중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굴종을 선택할 수 있다. 목중이나 순수정치로 가느냐의 기로에서 중요한 계기는 바로 폭력으로서의 국가, 평상시 동의를 갑옷을 벗어던지고 순수폭력으로서 드러난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 사실 근대권력이 '인민주권론'의 기초 위에서 있고 '주권재민'의 기초에서 있는 권력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국가가 '순수폭력'으로서 드러나는 상황도 오히려 예외적일 수 있다. 국가가 순수폭력으로 드러날 때 통상적인 상황은 그에 대응하는 목중과 순응이 된다. 여기서 광주의 위대성이 존재하게 된다. 광주는 바로 그 순수폭력에 대항하여 민중적 자위투쟁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폭력화한 국가에 대응하는 '사회의 무장적 자기조직화'가 시작되었다. 일체의 정당성의 외피를 벗어던진 국가에 대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해 버린 국가에 대하여 광주민중은 그 순수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민중자위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민중자위투쟁을 통해서 순수폭력으로서의 국가를 넘어선 바로 그 지점에 순수정치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1992년 LA사태나 2005년 11월 그루지아사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폭력으로서의 국가가 물러난 자리에 순수정치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무정부주의'적 상황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대중 속에 존재하는 약탈이나 방화 등 무정부주의적 모습들이 현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민중 스스로가 국가가 되는, 민중 스스로가 공적 규율의 주체가 되고 폭력의 기제가 필요없는, 정치와 사회가 일체화된 상태를 실현한 것이다. 여기에 광주의 또다른 위대성이 있다.

광주는 국가, 정치, 사회의 관계에서 '정치적 사회화'의 유토피아적 모습을 구현한 사건이었다. 해방광주에서는 '정치적 사회화'의 최고의 목표인 '정치와 사회의 일체화'가 실현된 궤물적 형상을 구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80년 광주에서 실현된 광주궤물은, 국가의 순수폭력에 대응하는 순수정치의 세계적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광주항쟁에서 민중의 무장투쟁으로 국가폭력을 극복하고 민중자치공간을 형성한 22일 이후 27일 진압 시까지의 시기에, 민중은 스스로가 질서의 주체가 된다. 국가적 통치기구가 부재하게 되는 것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어지러운 거리를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질서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과거 국가기구의 공무원들은 새로운 통치질서 하에서 전기, 수도 등의 지원사업도 행하게 된다. 상점에서는 식

사를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계엄군의 반격을 대비하여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경비를 서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광주' 속에서 각자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자발적으로 헌신하였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등에 대한 약탈 사건 같은 경우 1건도 없었다. 기타 일반 상점에 대한 약탈행위도 전혀 없었다(조치 카치아피카스(2002: 231)¹¹⁾). 새로운 통치 기구와 민주자위군대의 식사 등도 민중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 해결되었다. 시민군 지도부는 차량 통행증, 유류발급증, 상황실 출입증을 만들기도 하고 기동타격대를 편성하고 시민군 전체를 아우르는 통치질서를 스스로 구성하게 된다. 민중의 전사(戰士)로 변화한 시민군은 민중을 학살하는 '국가의 군대'와 달리 스스로가 헌신과 모범의 선도자처럼 행동했다. 조치 카치아피카스는 "이러한 해방된 순간에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은 자치(self-government)와 협동이라는 고유한 능력이 있음을 드러냈다"¹²⁾고 쓰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가폭력이 민중자위투쟁에 의해 극복된 공간에 정치와 사회가 원래 일체화되어 있던 본래의 모습이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 의한 통치에 대응하여 민중의 자치가 대두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통치 속에서 나타난 민중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민중자치적 도덕성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순수정치의 모습이었다. 물론 단편적인 것이었을 수 있고 일시적인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통치와 국가화된 정치를 넘어서서, 사회와 일체화된 정치, 사회와 민중 자신의 통치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앞서 서술한 금단, 배제, 선택적 포섭이라고 하는 정치의 국가화의 기제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사회의 괴리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국가가 통할하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광주에서는 정치와 사회의 괴리를 전제로 한,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의 각축을 뛰어넘어, 맑스가 파리로문에서 발견했던, 꼬문적 형상이 실현되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인 의제들을 공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는 이제 사회와 괴리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일체된 모습으로 짧은 해방광주 시기에 출현하였다. 필자는 광주항쟁은 파리로문에 버금가는 근대적인 '순수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순수정치 하에서 정치와 사회의 경계가 해소되고, 정치와 사회가 일치하는 순수한 유형의 정치가 출현하게 된다. 필자는 여기서 정치와 사회의 경계는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집단적 의제를 민중 자신이 결정하는 상황, 민중 자신이 자기규율의 주체가 되는 상황, 그리고 국가화된 정치가 소멸된 상황에서 사회 그 자체가 곧 정치가 되는 모습이 광주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사회의 일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정치의 억압적 기능은 소멸하고 정치의 협의적 기능만이 존재하는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순수정치는 국가폭력이 민중들의 자위투쟁을 통해서 극복된 시공간에서 비로서 가능하였다. 80년 광주민중들이 무장항쟁을 통해 폭력적 국가집단을 후퇴시킨 상황은, 일종의 '위로부터의 권력'이 부재한 공백상태이고 여기서 '아래로부터의 권력'의 실현체인 민중자치의 순수정치가 실현된 상태가 된 것이다. 광주항쟁은 정치가 실종된 절대폭력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의 정치적 자치가 순수하게 출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광주꼬문은 19세기 파리로문의 20세기적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광주항쟁은 배제의 동학으로 운영되던 정치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사회화'를 위한 저항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정치가 부재한' 순수히 폭력적 국가로 운영되는-정치란 지배에 대한 동의를 창출하는 계기이다-상태가 출현하였다. 극단적인 정치의

위기 상황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절대적 폭력'으로 자신을 운영하는 상태이다. 이때는 정치가 실종되며 국가의 폭력성은 순수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 사회화'를 위한 사회활동은 '절대공동체' 혹은 순수한 민중자치로 나타나게 된다. 즉 정치를 사회적 삶으로서 실현하는 상태가 구현되게 되는 것이다. 광주항쟁은 국가가 정치를 말살할 때, 어떻게 민중자치적 정치, 순수한 사회적 정치가 출현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장 순수한 국가는 가장 순수한 사회, 가장 순수한 정치를 출현시킨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4. 지배의 기획과 지식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저항적 주체성과 광주사건의 민중

이 절은 광주 사건의 주체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서술이다. 이 절에서는 특별히 광주사건에서 드러난 민중의 특성을 이전 시기의 민중의 변화와 관련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은 60년대 이후 박정희 개발독재 하에서 산업전사로 '구성'되었던 국민의 균열의 연장선 상에 존재한다. 1960년대 박정희 체제는 반공주의적 동원과 개발주의적 동원을 통해서 새롭게 위로부터의 대중들의 동의를 창출하면서 자신들의 독재체제를 안정화시키고 했다. 이것은 '대중독재론'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독재'는 일정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독재'가 될 수 있었다.

60년대에 쿠데타로 인해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반공주의적·개발주의적 동원을 통해 이러한 저항 운동의 도전을 통제하면서 지배의 동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한국사회는 경제개발의 '성공적' 진전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가고 있었다. 박정희가 추동하는 경제적 근대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개발의 환희'는 뒷전이었고, 이전과 다른 많은 문제와 모순들이 출현하였다. 근대화와 개발의 '성공적' 진전으로 새롭게 출현한 현상들은 도시문제와 도시 주거 문제, 도시의 부동산 투기문제, 외우 아파트 붕괴와 같은 부실공사문제, 도심재개발에 따른 철거 문제, 광주대단지 폭동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은 도시빈민들의 문제, 개발의 지역적 편중 문제, 1970년대 전태일 분신사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개발과 근대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수탈받는 존재로서의 노동자들의 새로운 저항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구체적인 양상을 본다면, 예컨대 1970년에는 노동쟁의가 1,656건으로 1969년에 비해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게 된다. 이처럼 70년대에는 개발이 동반하는 새로운 모순, 저항 운동의 도전에 따르는 위기 의식 등으로 인해 박정희 체제는 1960년대 말 3선 개헌 시도를 거쳐 1972년 박정희 종신 체제로서 유신 체제라고 하는 보다 '전체주의적인 억압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1970년대, 특히 1972년 유신 체제 이후 시기는 독재적인 반공·개발 동원 체제의 해계모니의 균열기로서 성격을 갖는다.¹³⁾

지배권력이 민중들을 지배에 복종하고 순응적 존재로 되도록 하는 과정은 지배의 해계모니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계모니화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지배적 집단의 요구와 지향을 보편화하여 종속적 집단이 리를 일체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과

정에서 지배의 동의적 기반, 즉 헤게모니는 지배의 '특수적' 지향이 얼마나 시대를 대변하는 '보편적' 지향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음으로 지배적 집단이 표상하고 구성하는 '집단적 정체성'에 종속적 집단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세력은, 1960년대 박정희 세력의 지배에 대한 동의를 확충하기 위한 전략은 '근대적' 개발주의적 담론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개발독재는 새롭게 개발주의를 전면화하고 동시에 그것을 이전의 반공주의적 동의 기반과 결합함으로써 지배에 대한 대중들의 수동적 동의를 능동화하고자 했다¹⁴⁾. 다음으로, 개발동원체제의 개발주의적 프로젝트는 '국민화(化)' 프로젝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화라고 했을 때, 국민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적대들을 주변화시키면서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적 정체성 속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화 프로젝트는 한 나라의 경제를 근대적 경제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 독립에 이어서 경제적 독립과 자립을 성취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국가적 목표에 전체국민을 일체화시키고 동원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민족주의에 의해서 정당화된 근대화 프로젝트가 추진하는 '국민화'는 분명 한국에서 성공적이었고, 그만큼 동의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었다. 이런 국민화 프로젝트가 갖는 헤게모니적 요소 때문에, 민중들은 일정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발프로젝트에 아래로부터 자발성을 가지고 결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70년대가 되면서, 근대화 프로젝트 속에서 보편적 이해로 비상했던 개발독재세력 및 그의 후원을 받는 부르주아지의 이해와 지향은 이제 그 보편성의 지위를 위협받게 되었다. 박정희 시대에서는 가족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희생하여야 하고 한다는 식의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한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자본가와 기업,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기업가의 논리가 경제적 민족주의에 의해서 보편적 이해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할 것으로 보편화된 근대화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개발의 과정에 다름아니고, 그것은 '국민의 계급적 분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처럼 지배적 집단의 이해의 보편화가 균열되는 것은, 개발이 진행된 70년대 초부터 전태일 분신이나 광주 대단지 도시빈민 폭동 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민중들-개발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개발이 가져오는 불평등구조의 하층민들-이 저항하게 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화와 개발이라고 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서 보편화된 지배적 집단의 경제적 이해와 지향은 이제 상층계급을 위한 '특수적' 이해이며 지향이라는 것이 점차 체득되어가게 되었다¹⁵⁾. 이것은 동시에 부르주아와 기업의 특수적 이해를 보편적 이해로 전환시키는 개발주의적 담론의 동의 창출 효과가 약화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사실 절대 빈곤 상태에서 성장의 가시화는 농촌을 기준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진보적 만족'을 주었다. 농촌의 삶에서 도시적 삶으로의 전환, 농업 노동에서 산업 노동으로의 전환은 지배에 대한 수동적 동의, 나아가 일정한 능동적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농촌 배후지를 떠나 도시 산업 지대에 취업한 '여공'들은 출신 배후지와 비교를 통해 도시적 삶에 만족하며 지배에 동의를 표하는 단계를 지나, 이제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해 회의하게 된다. 점차 개발의 '신선함'은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개발을 성취하기 때문에 강압적 권력이 정당하다는 인식도 점차 약화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개발 체제가 갖는 동의 기반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대중의 인식 지형 자체가 확대되고, 대안적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헤게모니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하던 민중들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하게 된다. '빵 대신에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층이 점차 확산되어갔다. 이처럼 새로운 저항적 존재의 출현이 바로 민중시대의 개막이다.

코뮌주의론에서의 대중과 자율주의론에서의 다중은 분명 기존의 '구조주의적' 주체 인식이 갖는 고정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포스트-구조주의'적 주체인식의 새로운 통찰들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히 계급, 인민, 민중 등으로 표현된 바의 획일성의 주체인식, 통일성으로 상징되는 주체인식을 넘어서서, 대중의 특이성과 유동성, 비고정성, 혁명적 역동성, 고유성을 내포하는 복합적 존재인식을 위한 지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¹⁶⁾. 대중론과 다중론의 표현을 빌면, 기존의 민중론은 '공통성'을 본질로 파악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이나 다중에게 민중과 다른 다른 존재론적 특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대중적 존재, 다중적 존재, 인민적 존재, 민중적 존재가 상이한 존재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중론과 다중론의 통찰을 기존의 민중론의 풍부화로 전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에 서서, 광주항쟁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특성을 3가지로 재개념화해볼 수 있다. 첫째, 광주민중항쟁에 참여한 민중들은 반독재라는 시대적 과제로 하나의 '역사적 블록'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복합적인 저항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중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 및 소수자들로 구성된 복합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제 민중 개념의 유효성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다중이건 대중이건- 대체적 개념을 찾는 노력과는 달리 민중 개념의 재해석을 통한 그 개념의 유효성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중 개념을 폐기하고 여타의 개념을 사용하는 시도 속에는, 민중을 독재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치 속에 고정화되어 있는 '반독재적 존재'로 보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민중을 반독재적 존재로 보게 되면, 독재의 과제가 소멸한 곳에 민중은 소멸한 듯이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을 특정한 하나의 역사적 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서 이제는 다른 존재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파악하는 새 개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70년대와 80년대의 민중의 역사적 구성을 고정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을 '역사적 블록'으로 만드는 계기와 그들의 저항성의 성격이 상이하지만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의 전환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민중은 본시 복합적 주체성을 갖고 있다.

민중의 다(多)중성, '다중(多衆)의 민중화(民衆化)'

단지 그러한 복합적 주체성을 간과하고 당시의 핵심적인 과제-즉 여러 주체들을 연합시키는-로서의 반독재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민중을 고정화시켜 파악하였다. 민중에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저항의 존재로서의 공통성'과 '복합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이중적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절대화 속에서 후자를 폐기하는 오류에 빠졌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80년대의 논쟁을 돌아보게 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80년대의 '인식의 급진화' 속에서 모든 개별운동들은 그 자체의 고유

성은 부차화되고 “전체 변혁운동”에의 복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도구화’하였다. ‘따로 또 같이’ 하는 90년대 여성운동의 모토도 이때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여성들 경우 ‘물을 날려준다던지’ ‘전경에 꽃을 달아준다던지’ 하는 식으로 ‘가부장적 운동질서’의 보조적 역할로 파악되기도 했다. 심지어 광주항쟁을 묘사하는 데에서도 이런 식의 인식이 드러난다. 기독교 교회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 기독교 교회 내부의 현실의 ‘독자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의 실천 보다는 전체변혁운동에의 복무로 모든 것이 인식되었다. 변혁성은 개별운동의 정체성을 극복하는데서 찾아졌다. 이는 전체 반독재운동과 개별운동의 관계이지만, 이는 민중개념의 인식에서도 정확히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실제 80년대 필자의 인식도 이러하였다.

민중을 반독재적 존재로 보는 것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을 블록화하는 시대적 과제가 반독재라는 과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상이한 요구와 이해를 갖는 존재들을 ‘연합적 존재’로 만드는 시대적 과제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민중개념의 화석화를 초래하게 된다. 개발독재에 대응했던 민중들의 경우,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저항성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70년대 말의 민중은 통상 이야기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을 넘어 다양한 존재들의 블록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광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이러한 민중의 복합적 저항주체성은 확인된다(참여자의 인적 구성 인용). 이런 점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주체는 ‘다중(多衆)적 존재’ 혹은 ‘대중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민중의 다중성(多衆性)과 대중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각자 자기 삶의 문제와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존재들이었고 그들을 특정한 역사적 배치 속에서 공통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민중을 이념화된 시각에서 노동자계급이나 특정한 집단으로 획일화하거나 혹은 특정한 지도집단으로 상징화해버리는 과정에서 이들의 다중성은 사상되고 그들의 고정화된 공통성만이 부각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부마항쟁의 경우 김원(2006)은 ‘민중·민주화운동으로 회수·수렴될 수 없는, 도시하층민의 이질성과 복합성을 드러내는 도시봉기(320)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독재에 저항하는 과정은 ‘이질적이고 중층적인 주체들이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러한 주체들이 반독재적 존재로 획일화되었었고, 그것은 ‘민중·민주화운동 담론 생산자층이 자신과 상이한, 그러나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합이 불가능한 주체들을 배제·통합하려는 정치적 기획의 일부였다’(321)고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민중 개념이 민주화운동 주제들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지배권력의 담론적 억압과정에서 민중이 특정한 개념으로 고착되어갔고 그 핵심주체들이 아닌 복합적 주체들을 타자화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중개념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70년대 말에는 민중은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중도 대중, 공중, 백성, 서민이라는 말들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모두가 다수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그 개념 속에 내포된 특권층이 아니고 비특권층이라는 요소”, “수는 많지만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서 있고 반드시 단일계층적인 것은 아니고 그 속에는 여러 계층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병존하는, 그러면서도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항하는 세력”을 민중으로 보고 있다(17). 80년대 민중개념의 계급론적 분석(혹은 고착화)을 선도했던 박현채도 그의 <민중과 역사>(1984)에서 “민중은 역사적 존재이다. 따라서 민중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 같은 것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민중이 갖는 계급·계층적인 복합성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중이 지니는 일면

적인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것으로 표현케 한다는 것이다. 대중, 평민, 서민, 억압받고 있는 계급, 소외된 사람들, 하층계급,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같은 것은 민중 구성의 변화와 함께 주어지는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민중개념의 폐기 보다는 민중개념의 재해석을 통해서 민중이 다양한 계급들, 다양한 복합적인 구성을 갖는 도시하층민들, 다양한 이질적 소수자들의 연합적 구성이었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민중은 지배체제에 의해서 상이한 방식으로 소외되고 공론의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배제된 존재들의 공통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정한 지배적 질서—독재 혹은 민주주의—하에서 억압되고 실현되지 않는 다종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갖는 다양한 주변적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70년대 말의 민중의 경우 그 공통성은 자신들의 삶을 질곡하는 파쇼적 독재였다. 이 공통성은 억압의 공통성에서 유래하는 저항의 공통성(18)을 말한다. 60년대 개발독재 하에서의 개발·성장 프로젝트 속에서 수많은 민중들은 ‘조국의 근대화의 역군’으로, ‘산업전사’로 호명되었다. 그러다가 이들은 점차 70년대를 거치면서 저항적 주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러한 저항적 주체들은 단일한 주체가 아니었으며 생산과 재생산의 전영역에서 개발독재의 모순에 의해서 고통받고 개발독재체제로부터 배제된 다양한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민중은 복합적 저항주체들의 연합이고 배제된 다종다양한 존재들의 공통이름이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민중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저항적 주체성’을 갖는 존재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민중의 출현은 바로 ‘국민화 프로젝트’ 속에서 통합되어 있던 ‘국민’의 분열에서 찾아진다. 공돌이, 공순이라는 정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개발동원체제가 부각시키는 산업역군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기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떠난 농촌적 삶과 비교되는 도시산업부문의 삶에 만족하며 일하는 ‘순응적 노동자’의 시대가 가고, 이제 비판적 의식과 반독재의식, 권리의식을 갖는 저항적 주체의 시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는 직접생산자와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subaltern)’이 점차 주체화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러한 주체화된 존재를 한국에서는 민중(民衆)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70년대 말에 민중이라는 개념은 저항운동 내부에서는 독재체제와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착취받고 수탈받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70년대 민중의 주체화란 노동자와 농민 등 하층계급과 계층들이 권력에 의해서 호명(呼名)되고 동원화된 순응적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개인에 따라서 의식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새로운 저항적 정체성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국민으로 호명되던 노동자들이 이제 그 국민 내부의 불평등성과 국민을 명분으로 하는 독재의 강압성에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1970년대에도 박정희정권이 호명한 국민은 분명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제 그 국민을 단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며, 자신의 ‘이등(二等) 국민적 지위’를 직시하고 저항하게 된 것이다(19).

이제 산업역군으로 동원되는 여공이 노동운동의 전사로(20), 박정희의 정치적 지지자였던 농민이 정치적 ‘불만’의 주체로, 나아가 동질적인 국민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분화된 계급들로 분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된다(21).

이런 점에서 저항적 주체성을 갖게 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이름이 바로 민중이다. 민중개념 자체의 출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순응의 존재에서 저항의 존재로 전환된 것을 의

미한다. 70년대 및 80년이라는 시공간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저항적 존재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민중이었다.

모든 지배와 정치질서는 특정한 민중질서를 전제로 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이다. 지배에 의해서 구성되고 호명되는 민중과 그러한 지배적 질서를 뛰어넘고 지배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저항적 주체로서의 민중이 존재한다. 70년대 말 이후 민중이라는 개념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후자였다. 지배권력은 언제나 특정한 권력기획에 의해서 민중을 순응적 존재로 통합하고자 하지만 현실의 민중은 바로 다종다양한 성격의 저항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민중의 정치적 지향 자체도 통상적인 반독재담론처럼 '전투적 반독재의 지향'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거시적 흐름에서 보면,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한편에서는 위로부터 권력의 기획에 의해 주어지고 내재화되어가고 있던 근대적 개발주의의 헤게모니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시대정신화에 따라 그 헤게모니의 약화와 권력담론의 내적 균열 속에서 임지현의 '대중독재론' 등이 지적하는 복합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박정희식 지배에 적극적으로 포섭되고, 그 헤게모니의 영향하에 있는 보수적 대중과 반대로 소수의 저항적 대중 그리고 그 회색지대의 광범한 중간지대가 점차 변화해가게 된다. 비록 근대 발전주의 헤게모니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지배적 가치로 가져가게 된 저항적 대중이 출현하고, 반대로 근대 발전주의 헤게모니를 내면화하고 있는 보수적 대중에게도 그 헤게모니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지배에 적극적인 동조자 혹은 소극적인 동조자도 소극적인 반대자로, 혹은 때로 소극적인 중립지대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서 임지현(2004, 23-4)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중을 특정 방식으로 획일화하려는 권력의 욕망이 곧 대중의 욕망이 되지 않고, 새로운 상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민주적 공통성을 만들어가려는 다중의 욕망이 권력의 욕망과 긴장하며 존재하는 복합적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인식의 제로섬'적 변화과정이었다. 한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전면에서 선 사람들에게도 박정희식 근대화적 개발주의 가치가 내재해있는 반면²²⁾, 동시에 박정희의 열렬한 추종자들에게서도 민주주의 가치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개개인의 의식세계 내에서도 복합적 심리가 공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복합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한 개인의 동의의 복합성, 대중들 사이의 정치적 태도 분화, 회색지대의 존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조희연, 2005c)²³⁾.

단지 민중은 그러한 의식과 태도의 복합성 속에서도 일정한 지배적 현실에 대한 저항적 주체성을 갖는다는데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민중의 구성의 복합성과 민중의 중요한 정체성으로서의 저항적 주체성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다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그들의 저항적 주체성을 염두에 둔다면, '다중의 민중화'라는 표현이나 '대중의 민중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 사회적 존재가 저항적 주체성을 갖는 것은 존재 자체의 특성이기 보다는 '존재의 구성적 변화'이다.

셋째, 광주민중항쟁의 주체로서의 민중은 70년대 말 이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민중과는 또다른 '예외적인 저항적 주체성'을 보여준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지배가 부여한 상상력의 지평'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는데 80년 민중의 특별함이 존재한다. 즉 광주 민중항쟁에서 존재했던 민중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에 대한 순응을 벗어던지고, 혹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에 의해서 호명된 순응된 존재성을 뛰어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저항적 주체성의' '극단'을 보여준 존재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성'으로 보면 '예외적'인 저항적 주체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민중은--그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 촉진되었건(국가권력의 예기치 않은 폭력에 의해서건)--기존의 질서로부터 '이반'하여 그 질서에 대해서 '반란의 총'을 든 다양한 저항주체들이었다.

'총을 든 민중'은 70년대 민중운동에 속한 사람에게서도조차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존재적 특징이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는--국제전화(國際戰化)된--준(準)내전 이후 민중이 총을 든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광주민중항쟁에서 민중은 지배적 질서에 대해서 '절연(絶緣)'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존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예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위(自衛)적이지만 무장투쟁은 한국전쟁 이후 소멸한 저항양식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순수폭력'으로 나타난 순간 이러한 저항양식은 홀연히 부활하였다. 사실 반공주의적 교육받은 민중은 특정한 행위양식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이 폭력이 될 때 민중은 '사회의 자기조직화'의 한 양식으로서 무장을 선택한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민중은 '순수폭력'으로서의 지배와 국가를 마주한 것이다. 여기서 순응을 선택할 것인가. 무장저항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저항적 주체성의 극단으로서의 '총을 든 민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권력에 의해 포획된 민중에서, 권력의 폭력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스스로 무장적 저항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 예외성은 '지배의 기획'과 '지식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외성이었다고 생각된다. 광주의 민중은 바로 민중 자체가 정태적인 존재성으로 파악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있다. 지배의 현실에 대응하는 '응전적인 자기구성적 존재'임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중의 '상상'은 지배의 기획과 지식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민중의 '구성적 역능'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필자는 '총을 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배의 기획이나 지식인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상적인 순응의 존재로부터 극단적으로 이반할 수 있는 존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5. 광주문제의 추이와 광주정신--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제도화의 이중성

이 절에서는 광주사건 이후 광주문제가 어떠한 배치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광주정신의 계승을 위한 노력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주사건 이후 광주문제의 억압과 '혁명적 급진화'의 동력으로서의 광주정신

광주사건 이후 87년 6월 민주항쟁 때까지 광주문제는 억압된 의제였고 금기의 의제였다. 광주학살이라고 하는 '태생적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줄곧 광주문제가 공론화되거나 정치의 장에 의제화되는 것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87년까지 광주문제는 파쇼화된 독재에 의해서 '비(非)정치'의 영역으로 강제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광주문제가 억압된 의제였기 때문에, 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스스로 혁명적 운동과 전투적 운동으로 변화해갔다. 이 시기에 광주정신은 주로 운동의 혁명화와 급진화의 정신적 에토스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광주문제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광주정신과 광주문제는 상승작용하면서 반독재 저항운동의 이슈와 정신을 급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광주문제, 즉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자체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주요이슈였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광주의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과 배상을 행하는 요구를 담고 있는 광주문제는 언제나 운동공동체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다. 반면에 군부 권력에게는 당연히 금압과 금기의 대상이었다.

“80년의 정치적 좌절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자성적 평가 속에서 70년대의 운동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비공식적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분단과 6·25전쟁을 통해 단절을 겪었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바로 이 시기에 60년대의 소시민적 민주화 운동 단계, 70년대의 포퓰리즘(Populism)적 민중운동 단계를 뛰어넘어 한국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전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변혁적인 민중운동으로 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예비하게 된다”(조희연, 1989: 1424).

8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사회의 변혁의 전망에 대한 소시민적 (혹은 뿌리부르조아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비판되고 극복되었다. 나아가 사회운동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확산되었다. 그 결과 변혁의 계급적 전망(탈자본주의적인 변혁)이 명확해졌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의 주도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변혁의 주체세력에 대한 규정과 함께 변혁의 대상에 대한 인식도 심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한국사회는 그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기초에서 볼 때 독점자본이 지배불력의 기본적인 구성원이며, 여기에 독점자본의 계급적 이해를 폭력적으로 관철하는 파시즘적 국가권력과 이러한 파시즘-독점자본의 유착체제를 비호하는 외세가 지배불력의 주요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운동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인식 위에서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극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그 전략·전술적 논의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운동의 ‘변혁운동으로 자기정립’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정신의 급진적·혁명적 계승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지향이 그런 방향으로 동결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양하였다. 온건보수주의에서부터, 저항적 자유주의, 맑스주의, 레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무정부주의, 네오-맑스주의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단지 80년 이전에 운동가들 내부에는—최소한 공개적인 수준에서—맑스주의나 레닌주의, 주체사상을 포함하여 급진주의적 지향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학살의 경험 속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투명하게 인식하면서 많은 운동가들이 급진화되어 갔고 그 결과 운동공동체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급진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반독재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대체로 급진적인 이념을 갖는 집단이 실제 투쟁에서 전투적 전략을 택하고 있었고 반독재 운동이 그러한 전투적 투쟁에 의존하는 만큼, 그들의 운동공동체 내에서의 헤게모니도 강하였다.

광주사건의 경험과 광주정신의 급진적 계승 속에서 비로서 한국진보에 급진주의가 ‘복원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복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급진주의 내지는 혁명주의적 인식과 실천의 전통이 단절되어 있다가 광주학살과 그에 대한 재해석 속에서 새롭게 급진주

의와 혁명주의가 복원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는 의미이다. 급진주의의 ‘복원적 태동’을 본 급진주의와 혁명주의는 80년대에는 운동공동체를 넘어서 일정하게 대중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87년 이전의 한국정치변동의 경로를 보게 되면 다양한 경로가 가능했었다. 이른바 ‘타협적 민주화’의 경로가 열려져 있었다. 예컨대 83년 말 유화 조치의 시행으로 인하여 한국의 정치가 안정의 길로 갈 수도 있었으며, 85년 이민주 파동에서 보여지듯이 내각제라는 제도적 전환 속에서 군부세력과 반독재 야당의 타협적 공존의 길도 가능했었다. 그러한 중요한 길목에서 반독재 야당의 비타협적 투쟁을 촉진하는 데 광주항쟁의 급진적 유산들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광주항쟁에서 ‘총을 든 민중’은 그 상징성만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이 땅의 지배적 세력에게 존재론적 위기감을 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록 그것을 진압하고 파쇼적 독재정권을 재구축하였지만 83년 이후의 유화적 조치들—아래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적 조치—이 시행되는 원인(遠因)이기도 했다.

2) 87년 광주문제의 ‘지역주의적 정치화’와 제도화의 이중성

87년까지의 시기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체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반독재타도 투쟁에 초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87년 이후의 시기는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가 복원된 상태에서는 독재의 유산을 최대한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제에 초점이 두어지게 되었다. 이제 시대적 과제는 독재 타도에서—독재의 유산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체제를 정착시켜가는—‘민주개혁(democratic reform)’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서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 하에서 왜곡되게 구조화된 국가, 정당, 시장, 기업 등 제반의 구조의 민주적 개혁을 지향하며 그것을 추동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과제에는 광주문제를 포함한 과거의 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산도 요구되게 되었다. 이를 포괄적으로 ‘과거청산’이라고 불렀다. 과거청산이란 과거의 국가 및 권력집단에 의해서 행해진 권력 남용 및 반인도주의적인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진상규명과 상응한 처벌 및 배상을 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하에서의 국가폭력이 야만적인 학살이나 인종청소, 고문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동반하였을 때²⁵⁾ 이러한 과거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중요해지고 도덕적 의무가 된다. 이러한 작업을 포괄적으로 역사청산, 과거청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일 파시즘 지배하에서의 유대인 학살의 책임이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전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체주의화된 독재체제가 민중적 저항으로 민주적 체제로 전환되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구체적 하에 책임을 갖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이 과거청산의 형태로 전개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거청산은 과거의 이슈를 둘러싼 현재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현재적 권력관계에 의해 그 범위와 성격이 결정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성(現在性)’을 갖는다. 여기서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political space for redressing the past injustices)’을 이야기할 수 있다²⁶⁾.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이란 과거 체제 하에서 자행된 범죄적 국가폭력의 문제를 정치사회적 ‘의제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87년 이후 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6월 민주항쟁으로 획득된 최소한의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면서 더 철저한 민주개혁, 그 일환으로서 더 철저한 과거청산을 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광주문제와 관련하여,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구 독재를 그대로 계승하는 노태우정부에서는 광주문제의 정치화, 광주문제가 민주주의적 정치공간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하는 것을 봉쇄·억압하고자 하였다. 노태우정부 하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과거청산을 억압하고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과거청산을 강제하려는 야당 및 시민사회세력의 '외부로부터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87년 이후 의회정치의 복원은 의회 내부에서 광주청문회나 5공 비리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 이는 의회 외부의 광주문제가 87년 이후 의회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쟁점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의 권력의 성격에 규정되면서,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88년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사과와 백담사 유배를 하는 정도로 타협되고 제약되었다.

이러한 타협적이고 미봉적인 과거청산이 제도정치권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과거청산과 독재의 과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반독재야당세력의 일부가 구 독재세력과 집권연합을 구성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탄생한 정부이다. 이런 성격 때문에, 문민정부 하에서는 광주문제에 대한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이 이전에 비해 확장되어 나타나게 된다. 문민정부의 입장에서도 광주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지향하게 된다. 여기서 김영삼 정부, 즉 문민정부에서 광주민중항쟁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정의되고 12.12사건이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정부와 달리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민정부는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법을 통해서 도모하였다. 그것이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질병, 투옥, 해직, 제적 등 각종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묘역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의 제정은 이 자체도 아래부터의 투쟁을 통해 강제된 것이기는 하지만—사실 광주민주화운동의 학살과 관련한 진상규명 및 법적 처벌은 유보한 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만을 행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이슈를 '과거청산'의 영역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과거청산의 불철저화를 의미하는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광주문제의 불철저한 제도적 해결에 대응하여, 광주문제의 한단계 높은 해결을 위한 투쟁이 아래로부터 전개되었다.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서,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형태로 법제화되어 표현되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이 법은 80년 5월 18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상정하여, 이 기간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광주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배상'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전향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이는 과거청산운동이 불철저하게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노력으로 과거청산의 수준이 높아진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 문민정부·국민정부 하에서의 과거청산 관련 입법

시기	명칭	제정	법안 내용	배경
문민정부 시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990. 8.6.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질병, 투옥, 해직, 제적 등 각종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묘역 조성 등을 추진.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80년 이후 광주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이슈였음. 노태우정부 하에서의 광주청문회를 거쳐, 보상관련법 제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95. 12.21	광주항쟁 당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함. 80년 5월 18일부터 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상정하여, 이 기간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광주학살 책임자들의 처벌을 가능하게 함.	
국민정부 시기	법 명칭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1.26	광주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책(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법.	1990년 8월 6일 공포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재규정 및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광주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었음(이전 단계의 과거청산의 상향).

이러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에서 김대중 정부, 즉 국민정부의 수립은 상당한 비약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에서는 야당 정부라는 점에서 전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구 세력과 절연에 기초하기 보다는 그것과 연합하여 성공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태생적 이중성'을 지니게 되고, 그 결과 김대중 정부의 개혁, 그 일부로서의 과거청산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채로 진행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국민정부의 복합성은 국민정부 하에서의 다양한 과거청산의 제도적 공간들이 확장되면서, 그것이 위로부터의 거시적 한계(구세력들의 다양한 저항으로 표출됨)와 아래로부터의 부단한 투쟁이 각축하는 형태로 전개되게 만들게 된다.

국민정부 하에서는 광주와 관련된 입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거청산 입법이 만들어졌다. 50년만의 야당정부가 성립함으로써 구 집권당 시기의 억압과 관련된 각종 과거청산 이슈들이 부각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과거청산의 현재적 이슈들은 구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의문사 사건의 규명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의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나아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다음으로 이전 시기에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있었던 '역사적 과거청산 이슈'를 둘러싸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청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화'의 사례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광주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0년 8월 6일 공포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재규정 및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광주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었고, 이것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광주민중항쟁 희생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국가적 기념사업으로 되는 과정은 헌법정신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²⁷⁾. 이전 시기에 '국가'유공자, 즉 정부에서 세금으로 그 공을 기리는 사람들의 범주는 주로 반공유공자, 전몰자, 경찰 및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호국(護國) 유공(有功)의 범주들은 대체로 '탄압'의 편에 서서 희생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의미하였다. 광주입법을 통해서 저항의 편에 서서 희생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것은 이제 안보를 위한 희생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정에서의 희생도 국가유공의 범주에 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질적 전환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국민정부에 이어 출현한 노무현 정부는 '과거청산 정부'라고 표현될 정도로 광범위한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졌다.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 노근리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한·일 수교회담 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 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물수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오랜 동안 요구되어온 과거청산작업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5년 5월 3일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은 포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거 국가기관으로서 인권탄압이나 독재적 탄압 과정에서 반인간적 범죄에 연루된 군·경찰·국정원 등이 자체적으로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나 부서를 마련하여 과거청산에 나섰다. 광주 5·18기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기념행사를 치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민주개혁 투쟁,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는 투쟁에서 광주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제의 하나였다. 광주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들의 신원을 받아들여 정당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는 광주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개혁의제로 존재하였다. 비록 불철저하지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개혁투쟁의 진전과정에서 점차 광주문제는 제도적 해결의 경로를 겪게 된다. 위로부터의 '수동혁명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구 보수세력의 입장에서 광주문제는 해결해야 될 최대의 '아킬레스 건'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점차-비록 불완전하지만형식적으로는-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독재에 의한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가 민중들의 저항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조건에서, 과거의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억압된 비정치들의 일정 부분을 민주주의적 정치의 영역으로 '내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문제가 민주주의의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과정에서, 광주문제의 담지자는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광주와 '혈

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김대중의 정당과 일체화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수반하였다. 광주 사건에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비타협적인 반독재 야당지도자의 탄압과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그 자신이 광주사건의 희생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주문제와 광주정신은 김대중의 정치적 행보와 운명과 관련된 식으로 표현되었다.

광주의 압도적인 정치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비타협적인 개혁자유주의정당을 굳건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한국민주주의의 중대한 병목지점을 통과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병목지점 중에서 첫 번째는 선거민주주의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정확의 과정은 이미 한국은 60·70년대부터 지속되었다). 구 독재세력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병목지점은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민주주의의 도입 이후에도 구 독재적 세력들의 재집권이 계속 될 수 있으며 선거를 통한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문제와 광주정신은 바로 민주주의발전의 두 번째 병목지점을 통과하는 중대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김대중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는 시기시기마다(예컨대 88년 4월 총선, 90년 3당 합당 이후 등)에도, 광주가 반독재 개혁자유주의정당의 지속적인 지지기반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것어 친독재 보수정당의 위기에 맞물리면서 반독재 야당정부시대, 즉 정권교체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민주개혁의 후퇴나 민주개혁의 정체(停滯)를 방지하면서 한국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와 추동력을 마련하였다²⁸⁾.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이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들을 동반하였다. 먼저 광주문제의 지역주의적 정치화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87년 이전까지 광주문제의 해결은 일부 독재의 지역적 근거지를 제외하고서는 운동공동체 내부나 대중 수준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 요구사항으로 인식되었다. 비록 이를 거부하는 친독재적 집단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87년 양김의 분열과 88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고착화된 모습으로 출현한 '지역주의적 정당질서'에서 '김대중 정당'이 광주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주문제가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반독재 개혁(자유주의)정당-김대중 당-의 정치적 의제로 인식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동반하였다. 물론 여타의 정당들이 상이한 시각에서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광주가 압도적으로 김대중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존재함으로써 광주문제가 지역의제로 왜소화되는 현상도 확대되었다. 이를 '광주문제의 지역주의적 정치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광주문제를 민주개혁의 합의적 의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요구로 왜곡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주장이 최소한 일부 지역에서 대중적 호소력을 가진 채로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역주의적 구도 속에서, 또다른 역(逆)지역주의적 동원의 결과로 김대중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나아가 김대중 정치성으로 규정되는 왜곡성을 동반하게 되었다.

둘째,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정에서 광주문제가 탈(脫)제도화적 급진성이나 제도를 뛰어넘는 급진적 에토스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들이 약화되게 되었다. 광주민주항쟁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례화되어 기념되는 이 현상은 '광주항쟁의 의례화'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필자는 이러한 민주개혁의 진전이나 과거청산 등 제도화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예컨대 광주 희생자는 3차례의 법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호국유공자와 동일하게 피해유공자로 자리매김되게 되었다. 과거 '진압유공자'라고 할 수 있는 군경들이 주로 받는 국가유공자의 지위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피해자와 운동가들이 유공자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이제 광주의 급진적 저항의 에토스마저 '대한민국의 국가주의적 에토스'로 재위치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정신은 기본적으로 '저항의 에토스'이며 광주정신은 저항의 에토스로서 작용할 때 그 빛을 발휘하게 되는데, 어떤 국가의례의 에토스로 위치지워지는 것이 갖는 딜레마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 문제는 제도화된 해결책을 지향하고 반독재 개혁자유주의정당과 연합하고 그 기반이 되는 정치적 에토스로서 작용하는데 반하여, 광주정신은 저항의 에토스로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에토스라는 점에서, '광주문제와 광주정신의 긴장'이 확대되었다²⁹⁾.

3) 민주개혁적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결합 속에서의 광주³⁰⁾

이상의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개혁 투쟁의 진전으로 인하여 과거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는 민주개혁의 과정이 진전되고 그것이 제도화의 수준으로까지 실현되는데 따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광주항쟁의 정신적 에토스 속에서 출현한-민주정부들 하에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가 전면화되면서 광주정신은 또다른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정부는 50년만의 야당정부라고 하는 성격과 다른 한편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련의 개방화정책과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정부라고 하는 성격이 공존한다.

김대중정부의 성립은, 반독재적 진보 그리고 민주개혁적 진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던 개혁자유주의정치세력이 집권세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50년만의 반독재 야당정권으로 성립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과제 실현을 위하여 미국과 IMF가 요구하는 친(親)신자유주의적 개방화정책을 전면화하게 되었다. 이는 '경로의존적'인 방식으로 이후 한국사회의 방향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IMF위기극복이라는 이름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집권 개혁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금융시장 개방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개방을 전면화하였고(물론 이는 문민정부에서부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이후 참여정부 하에서 한미FTA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외적 제약'이 아니라 '내부적 힘'이 되었다. 이것은 반독재 세력의 일부가-구 독재적 보수세력과는 민주개혁 의제를 둘러싸고는 대립하지만-한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담지세력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바로 '97년 체제'의 성격이다.

국민정부의 성립으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민주개혁투쟁을 배경으로 갖는 민주개혁세력이 집권세력이 됨으로써 한편에서는 기존의 야당적 민주개혁 의제들이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되어 일정하게 실현되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 국가권력의 책임주체로서 도전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이는 보수세력이 민주개혁적 진보세력을 '권력비판'의 형태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도덕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97년 반독재 민주세력의 집권으로 자신들의 주장하던 의제들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전화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반독

재민주정부의 집권을 도왔던 97년 경제위기는 다른 한편에서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전면적인 개방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했고 여기에 제한적인 사회정책을 도입하면서 개방화와 시장중심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국민정부 하에서는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선도적인 노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정부를 잇는 참여정부 하에서 중산층의 붕괴나 양극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민주정부 하에서의 민주개혁적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모순적 결합

물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개혁자유주의 정부들(이른바 '민주정부'로서의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개방화와 시장자유화 정책은 모순적·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민주개혁 대 반개혁'의 연장선 상에서 민중들의 사회적 요구와 이해를 제도화하는 일련의 사회정책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이 확대되는 흐름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개방화(금융시장 개방 등)·민영화·탈규제 정책, FTA 추진 등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확대하는 흐름이 공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반독재 민주정부의 성격을-경제위기 극복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추진하는-'신자유주의적 경제'와-반독재 민주화와 민주개혁의 연장선 상에서 지향하는-'민주개혁적 정치'의 모순적 결합으로 표현하게 된다. 반독재 민주정부 하에서 이 양자는 긴장을 가진 채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민주개혁적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결합'에 기초한 민주정부 하에서에서, 민주개혁적 정치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중생활의 악화가 지속되게 되고 여기서 민주개혁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민주개혁적 진보'를 지지하던 대중들이 이반하게 되었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을 배경하는(반독재적 진보. 그리고 그를 계승하는 민주개혁투쟁을 배경으로 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이 붕괴되게 된다.

여기에는 민주개혁적 정치를 확장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제어하지 못한 주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대중들의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균열시키는 구조적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적 현상을 필자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신계급사회'(조희연, 2007d)의 출현으로 표현한다. 역설적 표현이기는 한데,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의 진전으로 인하여 투명성과 절차적·정치적 민주성은 증가되었는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퇴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³¹⁾.

어떤 의미에서 87년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상태에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T.H. Marshal(1964: 84)은 20세기의 역사는 '자본주의와 시민권의 전쟁'으로 표현한 바 있는데, 이 표현을 원용하면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정점에 이른 투쟁을 통하여 반독재세력과 민중세력은 한국에 민주주의를 정립하였고, 반대로 개발독재 보수세력은 독재를 통하여 한국에 자본주의를 정립시켰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에는 민중이 정립한 민주주의와 독재와 보수세력이 정립한 자본주의의 '전쟁'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반독재세력과 민중세력은 87년 투쟁을 통해서 정립된 정치적 민주주의를 여러 분야로 확장

하고 동시에 그것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확대하고 그를 통해서 자본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확장하려고 투쟁해왔다고 한다면, 한국의 자본세력과 보수세력은--87년 투쟁을 통해서 정립된--민주주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를 자본주의의 정치적 외피(political shell)로 '최소 민주개혁'으로 왜소화하거나 혹은 형식화·무력화하려는 투쟁해왔다.

그러나 97년 체제 이후 민주개혁적 진보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유주의적 집권세력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통해서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에 응전하지 못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중도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민주주의를 절차적·정치적 민주주의로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차원을 주목하지 못하고" 시장적 경쟁강화"와 그를 위한 개방을 민주주의의 심화로 오인하고 달려감으로써"보수가 원하는 것을 진보의 이름으로 완성"(서영표, 2008)하는 역설적 상황이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포스트-독재 시기에 요구되는 '시장경제의 합리화' 그 자체 였는지도 모르며, 참여정부의 FTA추진은 지구화 시대에 요구되는 '시장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위해 보수들이 원하던 바였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 보수와 중도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차이는 없어져갔고 대중들은 점차 개혁세력으로부터 떠나갔고 그로 인해 민주정부의 지지기반(개혁적 중간층 등)이 붕괴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거대한 공세 속에서 과거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행위집단이었던 중도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주도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도정치 차원에서는 반독재 진보와 민주개혁적 진보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자유주의적 세력의 체계모니적 지위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그런데 이처럼 자유주의집권세력의 체계모니의 균열 속에서, 급진진보적 세력이 대안적인 집단으로 부상하지는 못했고 대중에게 실현가능한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 민주개혁을 최소합의로 하는 '역사적 블록(민주개혁을 공통분모로 하는 자유주의세력과 급진진보세력의 연합, 민주개혁을 매개로 하는 민주개혁적 진보세력과 대중의 연합)'은 해체되게 되었고, 대중은 보수적 방향으로 견인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붕괴한 중도자유주의적 대안을 대체하는 급진진보적 현실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수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립이다.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진전과 광주정신의 딜레마

이런 점에서 '97년 체제'의 시기에 해당하는 '1997-2007년'까지의 시기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시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87년 이후의 '반개혁적 보수 대 민주개혁적 진보'의 대립전선이 한편에 존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친(親)신자유주의적 보수 대 반(反)신자유주의적 진보'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적 집권세력은 한편에서는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진보적 세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롭게 개방화와 시장주의적 정책을 지향하는 이른바 친신자유주의적 세력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7년 체제 하에서 친신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과거 독재적 보수를 계승하는 세력과 반독재를 계승하는 개혁자유주의세력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³³⁾. 바로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진보운동에도 복합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집권세력이 동시에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모순적 상황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투쟁전선을 전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제공하였다³⁴⁾.

이러한 이중성은 바로 광주정신의 발현에서도 딜레마를 부여하고 있었다. 광주정신은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이나 그것을 담지하는 반독재 야당의 지지정서로 왜소화될 수 없는 더욱 폭넓은 것이고 더욱 급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87년 체제 하에서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혁자유주의적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정서로 유폐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 5·18정신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급진적 에토스로서 계승되거나 부활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는 급진적 민주개혁의 정신으로는 작동하였는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동반하는 새로운 모순들과 파괴적인 문제들에 응전하는 급진적 정신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97년 체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대중정부의 성립은 한편에서는 과거 반독재와 민주개혁의 의제들의 한단계 높은 실현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문제의 출현과정이라고 하는 점이다(물론 이 문제들은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도전에 의해서 구성된다). 독재와 그 유산으로 구성되는 구모순의 해결과정이며--신자유주의 불평등시대의--신모순의 출현과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광주는 분명 구모순의 해결을 추동하는 동력이었고 그 급진적 추진력이었으나, 신모순에 대응하는 급진적 정신으로 계승되지는 못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민주정부 시대가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중적 현실을 인식하고 광주정신의 급진민주주의적 계승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필자는 민주주의의 공동화 대-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통한-민주주의의 사회화의 대립을 언급한 바 있다. 광주문제 해결의 한단계 도약을 의미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었고, 포스트-민주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광주정신은 결코 구모순의 해결--즉 독재 대 반독재의 대립구도에서 규정되는 바의-반독재 및 민주개혁의 모순--로만 국한될 수 없다. 광주정신은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없다.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된 광주문제로 상징하는 의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그 의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광주가 소원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진정한 정치를 실현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한국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광주문제 자체도 철저한 해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광주정신은 한 시대의 지배적 모순에 저항하는 새로운 급진적인 저항 에토스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의 광주 5·18--새로운 급진민주주의적 에토스로서의 광주 5·18

이명박 정부의 성립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이중성을 갖는 97년 체제의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의 성립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긴장 속에서 결합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민주개혁적 정치의 모순적 결합'이 해체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그에 잘 조응하는 신보수정치(신우파정치)의 결합이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민중적 저항에 의해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이행의 도정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정치적 발전,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요구의 수용 등이 일정하게 진전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보수세력의 대반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렬했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호조가 민중적 요구의 수용을 위한 경제적 공간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자본세력과 보수세력은 한편에서는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의-제한적이거나-‘제도화’를 수반하는-민주개혁적 정치의 확장, 그 과정에서의 제한적인 사회정책의 확장(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제정)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른 한편에서는 97년 경제 위기 이후 상대적인 한국경제 호조건의 퇴조, 개방화 이후의 자본의 축적기제의 전반적인 제조정, 세계경제의 불안정 등에 의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서 계급권력의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개발독재의 전략적 지원을 받으면서 이미 크게 성장해 있는 경제적 자본가계급의 물질 기반, 강력한 보수적 언론권력의 대중적 영향력 등에 힘입으면서 반격이 성공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해보기로 하자³⁵⁾. 필자는 이명박 정부를 한국형 신보수정권³⁶⁾으로 규정한다³⁷⁾. 이것은 60·70년대의 박정희 식 개발독재를 구(舊)보수정권으로 하는 대칭규정이다. 당연히 구보수 정권과 신보수정권은 차별성과 연속성을 갖는다. 차별성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신보수는 기산업화 단계의 개발독재와는 ‘구별’되는 ‘포스트-독재 정부’이고, 또한 신보수는 반북(反北)적 보수나 냉전적인 안보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시장형 보수 혹은 신자유주의적 보수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구보수가 국가개입주의와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신보수는 시장자유주의와 개방주의를 표상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신보수는 독재정권 시대를 특징지운 ‘독재 대 반독재’, 민주화 국면에서의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세력의 집권을 의미한다. 2004년 탄핵사건이나 2006년 9월 태국에서의 군사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독재 대 반독재,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신보수의 등장은 과거의 ‘독재 대 반독재’ 구도에 대해 ‘해체적’ 효과를 동반한다. 반대로, 연속성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개발독재적 보수·반(反)개혁적 보수를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집권당으로 재복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보수는 구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를 새로운 형태로 정확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신보수는 탈규제와 시장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구보수의 ‘친기업주의’·‘친자본적 성격’을 정확히 계승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60·70년대 초기산업화 단계에서는 한국의 기업과 자본들이 스스로의 물질 기반이 취약했다. 그래서 개발독재의 막강한 국가지원을 선호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출 및 성장을 확대하는데 개입해주기를 바랐다. 박정희식 개발독재국가는 대기업과 자본이 ‘자기 발로 서지’ 못하고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성장해야만 했던 ‘원시적 축적’ 단계의 친기업주의에 부응하는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독재의 지원으로 성장한 한국의 대기업과 자본은 이제 스스로의 물질 기반을 확충한 상태에서 자력으로 중소기업과 시민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며 국가적 지원 없이도 글로벌 자본축적을 수행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대기업과 자본의 변화된 조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친기업주의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친기업적 성격과 친자본적 성격은 연속되

고 있다.

신보수정권의 출범은 시민사회 및 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현대사의 사이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경쟁과 쟁투(爭鬪)의 대상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65%에 이르는 보수 지지(한나라당 지지, 자유선진당 지지 포함)를 염두에 둔다면 그 경쟁과 쟁투의 대상이 대중에 대한 강력한 호소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1930년대 파시즘의 대두가 중간층과 자영업자층, 심지어 노동자계급 등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가능했었음을 상기할 때, 진보세력으로서도 고민을 해야 할 대목이다.

2008년 이후의 상황은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로 규정될 수 있다. 이미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민주개혁의 과제가 진전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전면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처럼 민주정부가 응전하지 못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은 신보수정권의 성립을 낳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립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신보수정권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는 ‘복합(複合)적 반(反)신자유주의적 정치’의 강화로 표현될 수 있겠다. 사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반신자유주의적 정치적·사회적 실천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료되지 않은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때문에 참여정부나 국민정부가 ‘복합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반신자유주의적 이슈들은 충분히 예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를 지향하며 이른바 ‘경제살리기와 줄푸세’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라는 이명박 정부세력의 슬로건이 드러내듯이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정권이다. 이것은 분명 60·70년대의 ‘파쇼적 보수’와는 다른 것이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중들의 수준에서 그 문제점과 모순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기조는 이미 국민정부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예컨대 문민정부에서의 세계화 국정기조의 등장과 우르구아지 라운드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관통하여 이러한 기조는 정부와 정당의 기조로 보다 광범위하게 삼투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개혁적 정치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복합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개혁적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기조 간에 긴장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양자 간에 긴장과 모순이 없어지면서, 신자유주의적 기조는 더욱 전면화하고 대중들의 수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광주문제와 광주정신의 긴장’이라고 하는 딜레마를 벗어나게 해준다. 민주정부가 표상하는 ‘민주개혁적 정치’는 광주문제를 포함한 민주개혁의 과제를 실행한다는 ‘진보성’ 때문에 그 민주정부 하에서 새롭게 제기되는-신자유주의적 불평등 문제를 포함하여-문제들에 대하여 광주정신의 급진적 계승을 제약하였던데 반하여, 이제 신보수정권은 광주정신의 저항적 에토스가 새로운 모순을 대면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중의식의 급진화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 없다’

향후 신보수정권 하에서의 투쟁은 한편에서는 민주화 20년,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성취한 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한 ‘방어적 투쟁’이 상당 부분 중요시될 것이다. 그러나 방어적 투쟁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주의세력의 재해게모니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올 때 현

재와는 다른 상황을 형성하여야 한다. 최소한 자유주의세력의 단독체계모니는 균열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단계 높은 사회진보를 위한 반신자유주의적 정치와 여타의 급진화 투쟁이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진보세력의 개입지점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사회의 한단계 높은 사회진보를 위해서는 대중의 급진화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의 급진화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년 간의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단계에서 한단계 높은 사회(적) 민주주의로 가는(민주주의의 사회화)와 사회진보로 가는 병목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병목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보다 급진화된 민중이 출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한국민주주의의 사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과 사회진보의 최대의 병목지점을 규정하는 대중의식적 조건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강남사람은 계급의식이 투철한데 강북사람이 계급의식이 없다'라고 표현한다³⁸⁾. 박정희식 선진화와 친기업적인 신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신보수정권이 대중, 그 중에서도 노동자계급까지를 포획하는 것이 바로 현시기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진보의 최대의 병목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형성한 '계급적 역관계'의 틀 내에서 성취할 수 있는 민주개혁과 사회진보의 한계지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준 토양과 그 토양 위에서 누적된 투쟁을 통해서 6월 민주항쟁이 형성한 '계급적·사회적 역관계'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성취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87년 이후의 민주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계급적 역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포스트-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진보를 추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광주 5·18정신도 새롭게 급진적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앞서 양극화, 고용불안정 등의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참여정부가 취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사실 이러한 사회정책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 시행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2007년 초 필자와 최장집, 손호철 교수 등의 진보논쟁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위기'는 참여정부 통치주체들의 주체적 한계에 기인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미 개발독재를 통해서 거대하게 성장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의 강고한 힘에 기인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진보논쟁). 비록 개발독재는 물러갔지만 개발독재의 강력한 국가적 지원에 의해서 성장한 자본가계급과 다양한 계급적·사회적 보수세력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정치적·시민사회적 기제들을 통하여 '부르주아적 지배'에 도전하는 위협적 요소들을 무력화하면서 이 땅의 보수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정작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서 고통받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정작 투철한 계급적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변형된 반공주의'—과거의 수평적인 대결적 반공주의에서 '체제우월론적 반공주의'로—에 의해서 그 계급적 각성이 질곡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같은 과제를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로 인식케 하면서 대중들이 새로운 시장경쟁에 순응하면서 경쟁력 제고를 향하여 달려 나가도록 촉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효과가 존재한다.

정작 이러한 현실의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계급과 계층들은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식과 계층의식이 없는데, 반대로 최대의 수혜자 계급과 계층은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 저항하고 자유주의적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옹호하는 진보정당은 사표심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상층 계급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는 정당을 잘 알고 적극 지지하는데 노동자들과 하층계급은 자신들의 계급적 정당을 잘 알지 못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현존 계급적·사회적 역관계의 의식적 내용이다. 바로 이러한 의식적 조건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내지 않는 한, 신보수 정권시대의 새로운 모순들이 현재화되더라도 그것은 진보적 지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한단계 높은 사회진보를 실현하고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를 반신자유주의적 사회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급진화된 대중주체들이 출현해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에 대해서—스스로 세금을 내는 위치가 아니면서도—'세금폭탄'이라고 인식하는 대중들이 존재하는 한 반신자유주의적 사회국가로 가는 길은 요원할 뿐이다. 이전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에 저항하는 분노한 노동자, 농민, 다양한 하위주체들이 출현하지 않는 한 '민주개혁'을 뛰어넘는 진보를 성취하기가 어렵다. 신보수정권에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파괴적 결과에 대응하면서 반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국가를 상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급적·정치적 의식을 확보해 내야 하고 이 점에서 새로운 급진적 에토스가 필요하다. 광주 5·18정신의 영감이 필요하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³⁹⁾.

광주정신의 급진적 부활과 계승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광주의 정치적 지향 자체도 변화되어야 한다. 반독재를 계승하는 반독재 개혁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한국민주주의의 '역류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몇 번 역류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차단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정치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반독재 개혁자유주의적 정치성만으로는 신자유주의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

광주 민주항쟁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독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80년대 광주정신은 더 높은 수준의 급진적 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등—를 상상하고 추진하는 에토스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민주개혁 국면에서 그리고 민주정부 시기에 광주정신은 제도화의 동력—더욱 확장된 과거청산이나 민주개혁의제들의 제도적 구현 등—으로 한계지워졌다. 그러나 이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에 광주정신은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급진적 에토스로 부활해야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불평등 시대의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와 이해가 민주주의의 내부에 실현되어 더욱 인간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으로 재충전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광주항쟁이 대결하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분명 독재에 의해서 억압된 것이고 광주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획득되었지만 그 민주주의는 우리의 이상적 기대에 반하는 형태로, 즉 사회적 요구를 다 실현하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현실로서 존재한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로서의 민주주의 간의 괴리를 우리는 언제나 대면하고 있다. 여기서 여기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급진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데 급진민주주의의 정신이 존재한다. 광주519의 핵심정신이 민주주의였다고 하면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의 지향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진보를 촉진하는 세력의 구성과 경계가 달라진다. 반독재 운동을 계승하는 개혁야당의 경우 민주정부의 수립이전에는 민주개혁적 진보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이제 그 일부는 이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에 진보적 주체로서 한계를 가진

다. 민주개혁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반독재 지역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는 제도정치가 보수패권체제로 후퇴하거나 상대적으로 타협적인 반독재 야당의 해체모니 하에 머무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때로 민주개혁의 후퇴, 위로부터의 민주개혁에 의한 지배의 안정화에 저항하면서, 민주개혁의 확장을 촉진하는 마지노선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불평등 시대·신보수정권 하에서 어떻게 새롭게 포스트-민주개혁 국면에서의 진보적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독재 개혁야당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진보의 동력을 제공하던 광주 5·18의 정치적 지향이 이제 변화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반독재 야당의 사회경제적 개혁주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철회의 위협'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시대 반신자유주의적 정치를 적극화하는 세력들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7. 요약과 맺음말

필자는 먼저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 혹은 '급진민주주의'가 갖는 함의와 그것의 민주주의론적 의미를 서술하였다. 급진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잠재적인 '평등의 원리'-1인 1표주의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은-를 급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배제와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현실의 민주주의는 이상적 민주주의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형태의 정치적 배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과 공존하면서 존재한다.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체도가 아니라 사회적·계급적 각축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역사적·현재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을 통해서 현실의 민주주의를 부단히 재구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부단히 공동화되고 허구화된다. 이러한 공동화에 대립하는 지향을 '민주주의의 사회화'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사회구성원(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들의 요구와 정치의 괴리가 극복되면서-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다층적인 탈독점화와 평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필자는 광주사건의 민주주의론적 재규정을 시도하였다. 독재에 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적 정치'를 회복하는 과정인데, 이 회복된 정치를 둘러싸고 '정치의 국가화' 대 '정치의 사회화'를 위한 각축이 전개된다. 정치의 국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장이 국가화된 지배에 대한 동의를 창출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반대로 정치의 사회화는 반대로 앞서 서술한 대로 정치를 사회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즉 정치가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정치가 사회적 주체들의 직접적인 자기통치가 되도록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및 민중들의 요구와 괴리된 정치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1980년 광주에서는 국가가 일체의 '정치'를 말살하고 '순수폭력'으로 드러났다. 정치가 소멸되고 국가가 폭력 그 자체로 일체화된 준전시적 학살폭력에 대응

하여 민중들의 무장자위투쟁을 전개하여 국가폭력을 극복한 상태에서 '정치와 사회가 일체화되는' 상태를 실현하였다. 이를 필자는 순수정치로 개념화하였다. 여기서 정치와 사회의 경계는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집단적 의제를 민중 자신이 결정하는 상황, 민중 자신이 자기규율의 주체가 되는 상황, 그리고 국가화된 정치가 소멸된 상황에서 사회 그 자체가 곧 정치가 되는 모습이 광주에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1871년 파리코뮌과 80년 광주코뮌은 근대의 정치공동체의 두가지 세계사적인 전형사례였다.

다음으로 필자는 광주민중항쟁의 주체의 성격을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광주민중항쟁의 민중은 '지배의 기획과 지식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외적인 저항적 주체성'을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일면화된 민중개념을 성찰하면서, 필자는 민중이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저항주체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점, 민중은 지배체제에 의해서 상이한 방식으로 소외되고 공론의 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배제된 존재들의 공통이름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민중의 출현은 바로 '국민화 프로젝트' 속에서 통합되어 있던 '국민'의 분열에서 기인하는 저항적 주체성의 출현에서 그 핵심특징이 찾아져야 한다는 점, 나아가 광주 민중항쟁에서 존재했던 민중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에 대한 순응을 벗어 던지고, 혹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에 의해서 호명된 순응된 존재성을 뛰어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총을 든 민중'으로서 자신을 드러냈다는 점, 이는 '저항적 주체성의' '극단'을 보여준 존재, 즉 '예외적인 저항적 주체성'을 보여준 존재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필자는 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광주문제가 제도화된 정치적 의제로 변화되고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이 진전되면서 광주정신의 딜레마를 지적하였다. 광주사건 이후 87년 6월 민주항쟁 때까지 광주문제는 억압된 의제였고 금기의 의제였다. 87년까지 광주문제는 파소화된 독재에 의해서 '비(非)정치'의 영역으로 강제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광주문제가 억압된 의제였기 때문에, 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광주항쟁의 정신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스스로 혁명적 운동과 전투적운동으로 변화해갔다. 이 시기에 광주정신은 주로 운동의 혁명화와 급진화의 정신적 에토스로 작동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광주문제가 '과거청산'의 핵심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법적·제도적 해결을 위한 궤적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광주 사건에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비타협적인 반독재 야당 지도자의 탄압과 '혈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고 그 자신이 광주사건의 희생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주문제가 광주정신은 김대중의 정치적 행보와 운명과 관련된 식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광주문제의 지역주의적 정치화라고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광주정신은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이나 그것을 담지하는 반독재 야당의 지지정서로 왜소화될 수 없는 더욱 폭넓은 것이고 더욱 급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87년 체제 하에서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그 과정에서의 김대중 정당의 지지정서로 유폐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정에서 광주문제가 탈제도화적 급진성이나 제도를 뛰어넘는 급진적 에토스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들이 약화되게 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의례화되어 기념되는 이 현상은 '광주항쟁의 의례화'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문제가 광주정신의 긴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은 민주정부들-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정부는 50년만의 야당정부라고 하는 성격과 다른 한편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련의 개방화

정책과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정부라고 하는 성격이 공존한다. 즉 민주정부 하에서 '민주개혁적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모순적·이중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바로 광주정신의 발현에서도 딜레마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주 5·18정신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급진적 에토스로서 계승되거나 부활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는 급진적 민주개혁의 정신으로는 작동하였는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동반하는 새로운 모순들과 파괴적인 문제들에 응전하는 급진적 정신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립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이중성을 갖는 97년 체제의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의 성립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긴장 속에서 결합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민주개혁적 정치의 모순적 결합'이 해체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그에 잘 조응하는 신보수정치(신우파정치)의 결합이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보수정권의 출범은 시민사회 및 민중진영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현대사의 사이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경쟁과 쟁투(爭鬪)의 대상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광주정신의 급진적 부활과 계승이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반독재를 계승하는 반독재 개혁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한국민주주의의 '역류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몇 번 역류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차단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정치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반독재 개혁자유주의적 정치성만으로는 신자유주의 불평등 시대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 이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에 광주정신은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급진적 에토스로 부활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불평등 시대의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와 이해가 민주주의의 내부에 실현되어 더욱 인간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력으로 재충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우리는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라는 새로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것은 급진민주주의론적 시각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공동화 대. 민주주의의 사회화'의 새로운 각축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광주정신의 재해석과 전환도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민주주의의 비상(飛翔)에서 광주가 어떻게 재도약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서 광주는 신자유주의 불평등 시대의 새로운 진보적 형상을 입어야 한다.

광주 5·18정신은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복원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외부에 존재하던 많은 억압된 사회적 정치를 민주주의의 내부로 만드는데 중요한 정신적 에토스로 작용하였다. 이제 신자유주의 불평등 시대/신보수정권 시대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많은 의제들은 민주주의의 외부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광주 5·18정신은 이제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에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의 에토스로 남아 있어야 한다.

독재의 유산, 민주개혁, 특히 정치적 개혁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외부는 대단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민주주의의 외부는 팽활하게 남아 있다. 오히려 '민주적이고 투명한' 신계급사회의 작동원리는 형식적인 민주성과 투명성으로 신계급사회적 현실에 의해서 배제된, 그 목소리가 민주주의의 내부에 들리게 할 수 없는 많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을 더욱 '민주적'으로 배제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해결의 에토스로서 작용하던 광주 5·18정신은 이제 민주주의 자체의 급진적 확장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

수정권 시대의 민주주의는 진보시키는데 중요한 에토스로 작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중요한 인식론적 과제는, '당사자'들에 의해 독점될 필요도 없이, 광주라는 지역에 한정될 필요도 없이, 광주 518정신은 해석의 독점을 넘어, 특정한 해석의 주체도 없이, 모두에게 열려진 자산으로 존재해야 하고 부단히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필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다. 광주 518정신의 급진성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급진민주주의가 되자!

<참고문헌>

- Buci-Glucksmann, Christine. 1980. *Gramsci and the State*, trans. by D. Fernbach,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Cho, Hee-Yeon. 2003. "Political Sociology of Kwagöch'öngsan in South Kore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6, No. 1. June. pp. 11-49.
- Hall, Stuart, 임영호 옮김. 2007.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한나래출판사.
- Harrison. 1993. *Democracy*, London: Routledge;
- Hardt, M. and A. Negri, "Adverntures of the Multitude: Response of the Authors", *Rethinking Marxism*, Vol. 13, No. 34, Fall/Winter 2001.
- Harvey, David, 최병두 옮김. 2007, 『신자유주의』, 한울.
- Hirsch, J. (1993). "포드주의적 보장국가와 신사회운동",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분과 편, 『국가와 시민사회: 조절이론의 국가론과 사회주의 시민사회론』. 서울: 녹두.
- Hirsch, J. (1995). *Der nationale Wettbewerbsstaat-Staat, Demokratie und Politik im globalen Kapitalismus*. Berlin.
- Jessop, B. (1988).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s*. Cambridge: Polity.
- Jessop, B. (2002). *The Future of the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 Laclau and S. Mouffe. 김성기 외 옮김, 1990,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터.
- Marshall, T. H., 1964,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Y: Doubleday and Company, Inc.
- Potter, E., 김경민 외 옮김. 2001. 『경쟁론』. 세종연구원.
- Poulantzas, Nicos, 박병영 옮김, 1994, 『국가, 권력, 사회주의』. 서울: 백의.
- Tarrow, S., 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Thompson, E.P. 나종일 외 옮김. 2000. 『영국노동자계급의 형성』 (1)(2). 창비사.
- 강원택. 2008. "계급성 뚜렷한 경제·물질주의적 우파다". 한겨레신문. 3월21일.
- 강준만, 2002. 《한국현대사산책》 1~3권. 인물과사상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1999.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백산서당.
- 강준만. 2007a. "조희연: 민중의 분노·위협이 대안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 5월호
- 강준만. 2007b. "개혁·진보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월간 인물과 사상』 12월호.
- 고병권·이진경 외, 2007. 『소수성의 정치학』. 그린비.
- 고병권·이진경 외. 2008b. 『코문주의 선언-우정과 기쁨의 정치학』. 교양인.

고세훈. 2008. “한국형도 신보수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일 뿐”, 한겨레신문. 3월 14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18광주민중항쟁』,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2001, 『5·18민중항쟁사』.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김동춘. 2001. “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인권과 평화』.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김무용, 1999, “한국현대사와 5·18 민중항쟁의 자화상”, 학술단체협의회 편, 앞의 책

김보현. 2006.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유진, 2002, “민주주의이행기 과거청산의 동학”, 조희연 편,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김지선, 《좌담 : 노동운동과 나》(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2002년 11월 21일.

김창진, “광주민중항쟁의 발전구조-무장투쟁과 ‘민중권력’”,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김창진, 2001, “시민의 저항과 무장항쟁”,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사』,

김호기. 2008. '이명박 정부와 사회통합적 세계화'. <사회비평> 봄호

김홍명·김세균, “광주5월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 풀빛.

나의갑, 2001, “5·18의 전개과정”,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민중항쟁』,

네그리, 안토니오, 마이클 하트, 윤수중 옮김, 2001, 『제국』, 이학사.

노영기, 2005, “5·18항쟁과 군대’에 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5(1).

노중기, 『한국의 노동체제 변동, 1987-1997년』, 『경제와사회』 36호, 1997/겨울호.

무폐, 상탈, 이행 옮김, 2006,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문부식, 2002,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광기의 시대를 생각함』, 삼인.

박명림. 2005. “한국헌법과 민주주의: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창비-시민행동 공동심포지엄, 2005. 7. 15, 프레스센터.

보비오, 노르베르토. 1998. 『제3의 길은 가능한가 - 좌파나 우파나』. 새물결.

박찬승, 1997. “선언문·성명서·소식지를 통해 본 5·18”,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18 광주민중항쟁』,

박현채. 1984. “민중과 역사”, 『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 한길사.

서영표. 2008. “그래도 희망은 있다”.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9478>

손호철 (2007). “‘두려움의 동원’ 정치를 넘어서자”. 『레디앙』 1월 31일.

안승국 (1999).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와 포스트포드주의”. 『국제정치논총』, 39(3).

오유석, 1999, “외곽지역의 항쟁으로 본 5·18 민중항쟁”,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오폐, 클라우스, 1985, “신사회운동: 제도정치에 대한 도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이론 분화 편, 1993, 『국가와 시민사회』, 녹두.

이세영. 2006. “‘민중’개념의 계보학”, 『우리안의 보편성』. 한울.

우드, 엘린 메익신즈 우드, 손호철 옮김, 1993, 『계급으로부터의 후퇴』. 창비.

윤수중, 2001,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진보평론』 9호, 가을호.

이병천 (2007).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이병천 편. 『세계화시대 한국자본주의』. 서울:한울.

임지현, 2004. “‘대중독재’의 지형도 그리기”. 임지현·김용우 편, 『대중독재 :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김원. 2006.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 부마항쟁을 중심으로”. 이상록·장문석 편.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 대중독재와 박정희 체제』. 그린비.

일리, 제프. 유강은 옮김, 2008. 『The Left 1848-2000. 미완의 기획, 유럽 좌파의 역사』,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1987-1995』, 경남대출판부.

임지현. 2004. “대중독재의 지형도 그리기”, 임지현·김용우 편, 2004,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전남사회문연구소 편, 1988,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황석영 기록, 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정일준. 2007. “민주화 20년과 포스트 87년 체제의 전망. 제10회. 비판사회학대회. 연세대 백양관.

정해구, 2001, “군작전의 전개과정”,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중항쟁사』, 고령.

조정환, 2003, 『아우또노미아-다중의 자율을 향한 네그리의 항해』, 갈무리.

제습, 밥, 이양구·이선용 옮김, 1985, 『자본주의와 국가』, 돌베개.

제습, 밥, 유범상 외 옮김,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한울아카데미.

조현연, 2008, “진보의 혁신적 재구성과 재창당에 관한 몇가지 쟁점 비판”, 5월 5일. 레디앙.

조희연. 1989.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한울.

조희연, 2001,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도서출판 나눔의집,

조희연. 2001. 『5·18과 80년대 사회운동』,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민중항쟁사』, 도서출판 고령.

조희연, 2002, “‘과잉’과거청산인가 ‘과소’과거청산인가: 문부식 씨의 ‘우리 안의 폭력’ 논의에 대한 재성찰”, 『계간 경제와 사회』, 한울.

조희연. 2003. “정치사회적 담론의 구조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현대사 속에서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동학(3)』, 함께읽는책.

조희연. 2004. “저항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급진화’와 ‘대중화’의 긴장을 중심으로”. 조희연 편, 2004,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동학』, 함께읽는책.

조희연.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조희연, 2004,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 『역사비평』 67호, 여름호.

조희연 (2005a). “‘8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그 원인과 대안의 탐색”. 『시민과 세계』 8호, 11월.

조희연. 2005b. “‘반공규율사회’형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의 노동자계급의 ‘구성’적 출현--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이종구 외, 2005,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 참조.

조희연. 2005c. “박정희 체제의 복합성과 모순성-임지현 등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겸하여”, <역사비평> 70호, 2005년 봄호.

조희연. 2006d. “지구촌 민주주의와 국민국가 민주주의의 대안적 재구성 원리 탐색-지구촌 민주주의론 서설”. 조희연 편.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 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 읽는책.

조희연, 2006b,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급진적 열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디앙 11월 1일.

조희연. 2006d. “장외(場外)정치, 운동정치와 ‘정치의 경계 허물기’-비합법전위조직, 재야운동, 낙선운동, 광주교문”. 신정완·조희연 외, 2006, 『우리안의 보편성』, 한울.

조희연 (2007a). “‘지적’의 올바른과 ‘진단’의 오류”. 『레디앙』 1월 25일.

조희연 (2007b). “‘제도정치 중심주의’ 대 ‘사회중심주의’“. 『레디앙』 1월 25일.

조희연 (2007c). “‘신보수’, 진보세력에게 좋은 조건인가?”. 『레디앙』 2월 5일.

조희연, 2007, 『박정희시대와 개발독재체제』, 역사비평사.

진보정치연구소 (2007). 『사회 국가, 한국 사회 재설계도』. 서울:후마니타스

조희연 (2007d). “한국 민주주의의 병목 지점과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월간 인물과 사상』 11월호.

조희연. 2008a.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 <계간 동향과 전망> 72호, 2008년 봄호.

조희연 편. 2008b.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 한울.

조희연. 2008c. “서구-과거와 같고도 다른 ‘한국형 신보수 정권’”. 한겨레신문. 3월 7일.

조희연. 2008d. “‘한국만의 보수’는 재구성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4월 4일.

조희연. 2008e. “‘헤게모니 균열’의 문제설정에서 본 현대한국 정치변동의 재해석-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의 재해석에 기초하여“. <마르크스주의> 9호, 2008년 봄호.

조희연. 2008f.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의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 <진보평론> 35호, 2008년 여름호.

조희연 편. 2008.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민주주의-‘정치적 독점’의 변형을 중심으로』. 한울.

조희연·김동춘 편. 2008.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정치적 독점’의 변형을 중심으로』. 한겨레.

조희연·조현연, 2002,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희생: 총론적 이해”,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최장집, 1993,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최장집 편 (2005). 『노동없는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서울:후마니타스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서울:후마니타스.

최정기. 2002. “한국의 정치변동과 사법적 처벌의 변화”.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희생』. 나눔의 집.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최정운, 1997. “절대공동체의 형성과 해체”,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 카치아피카스, 조지, 2002, “역사 속의 광주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2(2),

칼 플라니, 1997, 『거대한 변환』, 민음사

칼 플라니, 홍기빈 옮김,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책세상

허성우. 2007. “한국 민주주의 20년, 개혁주의 젠더정치학의 성과와 한계”.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6월 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홍성민. 2008. “‘보수’지만 ‘보수’일 수만은 없다”. 한겨레신문. 3월 28일.

『황해문화』 2002년 겨울호.

- 1) 광주학살과 광주항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1985),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1997)(2001) 참조. 이 글은 광주민중항쟁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서술은 논의 상 부분에만 한정된다.
- 2) 상탈 무폐(2006)는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 관한 문제’(23)에 대해서, 보편적 자유와 권리 등에 기반을 두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인민주권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적 전통이 경쟁하고 긴장을 가지면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근대민주주의를 논할 때 그것의 특징이 두가지 상이한 전통 사이에서 표출된 것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근대사회의 정치적 형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과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시, 그리고 인민주권 등의 사상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적 전통이 있다(15)”.
- 3) 필자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의 연구팀들과 함께 급진민주주의의 이론적 정립과 급진민주주의 관점에서의 한국민주화와 아시아 민주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조희연·김동춘 편, 2008; 조희연 편, 2008 참조).
- 4) 여기서 계급적·사회적 투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주의적으로 협애화된 계급적 투쟁 만이 아니라 광의의 계급적 투쟁, 즉 사회적 투쟁이 정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맑스가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자 간의 계급을 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배와 피지배집단의 투쟁, 즉 광의의 사회적 투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 5) 인간의 사회적 삶 속에는 구성원들 간의 경쟁·대립·적대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무폐는 C. 슈미트의 논의를 빌어 적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면 적대는 사회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무폐, 2006, 178). 바로 이러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대립과 경쟁, 적대가 바로 다양한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인 것들이 제도화된 정치 내에 얼마나 수렴되느냐 그것이 어떤 정치적 과정으로 ‘가공’되는가하는 점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경쟁·갈등·적대하는 세력들의 공존의 프레임이 되어 근대 이전의 ‘살육적 적대’를 ‘적대적 경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7) 부치-글루크스만이 그람시를 빌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치는 곧 헤게모니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다”(Buci-Glucksmann, 1980, vii). 이때 헤게모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과 폭력에 의해서 특정한 정치적인 것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장에 표현되고 각축을 통해서--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어느 일방이 대표하는 요구와 이해가 주변화되거나 타협·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 9) 조희연(2006d)dptj ‘정치의 국가화’의 3가지 유형 및 4가지 사례를 설명하였는데, 첫째 ‘정치의 국가화’를 위한 금단의 기제가 작동하는 조건 속에서 사회의 정치화를 위한 행위들이 ‘비합법정치’의 형태로 표출된 경우이다. 둘째 배제의 기제에 대응하는 ‘정치의 사회화’의 시도들은 ‘장외정치’라고 할 수 있는 60·70년대 재야운동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다음 셋째로 선택적 포섭의 기제에 대항하는 사회적 정치의 모습은 시민정치라고 할 수 있는 낙선운동과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둘째와 셋째의 ‘사회적 정치’를 ‘경계정치’라고 부르고 있다. 경계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제도정치의 경계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그 경계 외부에 있는 ‘장외정치’가 제도정치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제도정당들이나 의회 공간들이 ‘대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단체들이 제도정당

의 기능을 대행하며, 제도적 대의기능을 시민사회 기구들이 수행하는 '대의의 대행'현상을 의미한다. 넷째가 바로 1980년 광주에서 이루어졌던 '순수정치'이다.

- 10)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서술은 조희연(2006d)참조.
- 11) 광주에서의 '질서'와 약탈·방화 등의 부제를 광주시민들이 너무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배가 부여한 소유권질서에 적응했기 때문이고 만일 급진적인 계급의식을 가졌더라면 '약탈적 재분배' 같은 행위나 급진적인 재분배 같은 일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민중자위투쟁의 과정에서 피어난 단기적 쏘몰의 특성, 그리고 신속하게 구성된 민중자치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 등이 어우러져서 나타난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2) 그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세계역사의 두 사건이 수천명의 민중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발적 능력을 보여 주는 독특한 신호탄이 되었다"(228쪽)고 말하면서, 파리코뮌과 광주코뮌의 유사성을 "1.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대중조직의 자발적 출현, 2. 아래로부터 무장된 저항의 출현, 3. 도시범죄 행위의 감소, 4. 시민들 간의 진정한 연대와 협력의 존재, 5. 계급, 권력 그리고 지위와 같은 위계의 부재, 6. 참여자들 간의 내적 역할 분담(internal divisions)의 등장"(229쪽)으로 정리하고 있다.
- 13) 1970년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3권(인물과사상사, 200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1970년대 전반기의 정치사회변동》(백산서당, 1999) 참조.
- 14) 필자는 수동적 동의와 능동적 동의를 구분한다. 단순화시켜 이야기하면 지배에 대한 민중의 동의는 수동적(마지못해 하는) 동의가 있고 능동적(적극적) 동의가 있다. 순수한 강압에 의한 폭종과 순수한 자발적 동의의 사이에는 많은 변이(變異)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그림시가 이야기하는 지배의 강압적 계기와 동의적 계기에서 순수한 강압과 순수한 동의는 존재하지 않고 현실에서는 '강압적 동의'와 '동의적 강압'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문제는 동의의 계기로서의 강압이 민중들에 의해서 어떻게 수용되는냐 하는 것이다. 수동적 동의는 능동적 동의에 비해서 강압의 계기가 강하고 대중들의 자발성이 약한 경우를 의미한다(조희연, 2004,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 {역사비평} 67호, 여름호).
- 15) 민중신학, 민중사회학, 민족경제론, 분단사학 등 인문사회과학에서의 진보학문의 부활도 같은 사례가 될 수 있다.
- 16) 대중은 유동적 존재이고 흐름 그 자체이고 혁명적 역동성의 존재이며, 우리가 보는 고정적인 대중의 특성은 대중이 고정화되어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포획된 존재상태임도 잘 드러내고 있다. "대중의 흐름이 특정한 방식으로 응고되었을 때, 남성, 민족, 계급 등의 물질 지층화가 나타난다"(고병권·이진경 외, 2008b: 50)는 것이다. 네그리에 따를 때, 다중(대중, multitude)은 통일된 실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며, "다중은 결코 단일한 사회적 존재(a single social body)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Hardt, M. and A. Negri, 2001: 243).
- 17) 전자의 표현은 안병직 교수, 후자의 표현은 당시 대표적인 민중론자들이었던 한완상 교수의 표현이다. 이세영(2006: 307-8)에서 개인용.
- 18) 공통성은 "특이한 개별자들 간에 차이들을 무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감으로써 지니게 되는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네그리, 하트, 2001). 자율주의와 코뮌주의에 따를 때, 개별성의 양상을로서의 다중과 대중이 부단히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욕망은 해방적 힘으로 상정된다. 다중의 역능은 개별성과 차이들의 역능이기 때문에, 다중의 역능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별성과 차이가 보장되어야 한다.
- 19) "국민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다중'을 단일한 의지와 욕망을 지닌 통일된 인민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이었다"(임지현 38).
- 20) 한 노동자의 말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저는 그냥 노동 운동을 알게 된 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이것밖에 잘할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구요. 노동 운동이 저한테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건데, 갈등의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많은 활동가들이 옆에 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다가 1, 2년 하다가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이념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면, 저는 삶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삶은 그대로인데 왜 내가 떠나야 되냐, 그런 게 제 주제였어요. 물론 사회주의나 이런 거 꿈꾸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구요. 그리고 저한테는 세상을 보게 되는 눈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앞으로도 뭐 죽는 날까지 그냥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지선, 《좌담 : 노동운동과 나》(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2002년 11월 21일).
- 21) 박정희 개발동원체제는 "국민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960년대 후반에 역설적으로 국민을 상징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민족주의적 상징 정치'가 정책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조희연, 2007, {박정희 시대와 개발독재체제}, 역사비평사, ???쪽). 박정희체제는 개발동원체제의 해게모니의 균열에 응전하기 위하여, 혹은 그것을 예방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것에는 도덕적 훈육국가, 민족주의적·국가주의적 훈육국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실시되었다(조희연, 2007, {박정희시대와 개발독재체제}, 역사비평사, 4·5장).
- 22) 김보현(2006)은 저항엘리트 조차도 반공주의, 개발주의 및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 23) 임지현(2004, 23)은 이러한 점을 적절히 '지배에 포섭된 저항과 저항을 낳는 지배 등의 복합적 현실'(임지현, 2004: 23)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24) 어떤 의미에서 인식과 실천의 '절적 비약'이 있었는데, 그 계기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성찰에서 길어올려지

- 는 급진적 저항의 에토스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사회운동의 주제, 인식적 기초, 대상, 동력, 방법 등에 대한 반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인식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 70년대까지의 사회운동이 소시민적 운동관, 포퓰리즘적 운동관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이다. 예컨대 억압적 정치권력에 대한 양심적 비판이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있었을 뿐,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경제체제 자체의 변혁에 대한 전망과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대중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체제변혁적 투쟁으로 전화시킬 목적의식적 전위가 또한 부재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이 대중들의 혁명적 진출과 변혁역량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때, 문제는 대중을 지도할 전위의 형성과 그러한 전위와 대중의 균건한 결합 여부인데, 이점에서의 역량부족이 사회운동의 근본한계라는 것이다. 셋째, 80년 봄의 패배는 노동계급 등 주력군의 미성장에 그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기층민중, 특히 노동계급의 성장과 그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반성이 있다. 즉 70년대까지의 사회운동이 주로 학생, 지식인, 일부 선진적인 기층민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계급운동이 되지 못하였으며, 주력군이 미성장한 상태에서의 방어전적 성격 이상을 떨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70년대 사회운동의 추진 '동력'이 갖는 계급적 한계를 가리킨다. 넷째, 군부독재체제를 지원하는 외세에 대항하는 '반외세자주화'역량이 결여되었다는 반성이다. 특히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비호 때문에 70년대 사회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미국에 대한 소시민적 환상'이 깨어짐으로써, 광주사태는 민족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중의식과 주체적인 역량을 확보해내는 것이 80년대 사회운동의 핵심적 과제로 인식되었다"(조희연, 1989: 15).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인식의 급진화와 혁명화는 광주가 남긴 유산이기도 했으며 80년대 사회운동가들이 광주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이러한 변화이기도 했다.
- 25) 73년 피노체트 정권이 아옌테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부통치를 실시한 이후 3,000여명이 고문 등으로 살해되었고 10만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6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군부정권 하에서도 '좌익색출'이라는 이름의 '더러운 전쟁'(dirty war)로 실종자만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74년 인도네시아가 포르투갈 퇴각 이후 동티모르를 점령한 후 총 80만의 인구 중 20여만명이 살해되었다.
 - 26) 통상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면 '정치적 기회구조'(Tarrow, S., 1994)가 될 것이다. 아래부터의 변동이나 위로부터의 변동이나와 같은 변동의 구조적 성격은 정치적 기회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 27) 이처럼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명예회복되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유공자가 되고 5.18묘역이 국립묘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문부식 시인이 '기억의 국가화'라는 견지에서 비판하였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문부식(2002); 조희연(2002); 『황해문화』 2002년 겨울호.
 - 28)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민주개혁의 과제들이 국가를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화의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제들은 더 높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집단에서는 불철저하다고 비판하였지만,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과잉'과거청산이라고 비판하였다.
 - 29) 모든 역사적 계승은 '당사자'가 중요하지만 계승이 당사자에 의해 '독과점'될 때 계승은 협애화되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 30)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라는 개념들이 정치체제의 변화나 노동체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이한 의미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필자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사회적 행위와 관계, 갈등을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인데, 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87년체제는 한편에서 민주개혁이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는 체제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舊)체제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작용하면서 민주개혁의 철저한 전개를 제약하는 체제"이며 그런 점에서 87년체제는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된 민주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힘과 그것을 제약하고 구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타협적 재편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힘이 각축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6월 민주항쟁으로 상징된다면, 후자는 6·29선언으로 상징된다. 그런 점에서 87년체제는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교직(交織)된 체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조희연, 2005). 박명림(2005)은 헌정체제의 관점에서 87년체제를 "대통령제 권력구조 및 3권분립과 선거주기의 불일치(교착상태 및 분할정부 지속), 법치국가관념의 강화(사법국가로의 진행예측 결여와 정치의 사법화 강화), 대의민주주의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의 폭발적 발전 예측 결여(참여와 대의의 충돌 빈발), 사회국가관념의 결여(노동복지), 탈냉전 및 세계화 상황에서의 대비 전무(영토조항 및 국가보안법체제 지속, 이주노동자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질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진보적 시민사회론의 입장에서 보면, 87년체제는 구권위주의체제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결합되어 있는, '개혁의 공간'과 개혁의 한계를 동시에 내장한 체제였다고 할 수 있고, 87년 이후 민주개혁운동의 프레임이 설정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의 입장에서 87년체제는 87년 개정노동법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민주노조운동의 형식적 권리와 공간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았으면서도, 복수노조 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의 규제적 장치들이 공존하는 불안정한 체제를 의미한다(이에 관해서는 노중기, 1997와 임영일, 1998 참조). 그런데 정일준(2007)은 '87년 체제'는 없으며 오히려 97년 체제가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을 설명하는데 더 규정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87년 체제'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 김호기 교수도 "87년 체제라는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산업화 시대에 대응하는 '61년 체제'처럼 경제체제 측면에서의 단절과 전환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87년 체제를 순수히 정치적인 변동으로 보고 97년 체제를 사회경제적 구조변동으로 보는 방식보다는, 87년 체제의 이중적 성격을 주목하고 87년 체제에서 작용하는 두가지 갈등적 힘에서 97년 체제의 성립으로 보수적 힘이 강화되게 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이를 필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으로 표현되고 87년 체제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를 공적·정치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힘이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하면, 97년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엄호' 속에서 자본주의의 힘이 민주주의의 확장을 저지하고 그 급진적 의미를 주변화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체제였다고 규정한다.

- 31) 한편에서 민주개혁의 진전으로, 수동혁명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민주주의적 정치가 확장되고 광주분제를 포함한 비정치적 영역이 민주주의의 내부화하는 것과 함께, 포스트-개발자본주의화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모순이 이러한 민주개혁적 정치를 재구조화하게 된다. 즉 민주개혁을 통해서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에 진전을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적 정치의 주체로서의 민중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의 조건에 규정되면서 정치적으로 포섭되면서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비정규직의 문제에 의해서 고 통을 받는 민중들은 자신의 비정규직의 의제가 민주주의적 정치의 내부에서 토론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적 정치의 외부에서 운동을 통해서 의제화해야 한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 32) 여기서 당연히 과거 독재적 보수·반개혁적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보수적 정치세력과, 반독재 진보와--민주개혁적 진보의 일부로서 민주개혁 국면에서 '민주개혁의 급진화'투쟁을 선도하였던--급진진보·좌파 세력의 해계모니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후자가 '국민정치'의 수준에서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 33) 이는 개발독재가 파쇼화하면서 자유주의적 세력들이 독재로부터 이탈하면서 반독재적 진보에 급진적인 반독재적 진보와 자유주의적인 반독재적 진보세력으로 구성되게 된 것과 유사하다.
- 34) 필자는 가끔 "대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운동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규제를 행사하는 민주정부 하에서 의 마이너스와 민주정부의 정치적 안정화 효과에서 발생하는 플러스를 상쇄하면 +일까 -일까"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또한 "신보수정권이 사회적 규제를 풀어서 탈규제화하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책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플러스와 신보수정권 하에서의 정치적 불안정화 효과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를 상쇄하면 +일까 -일까, 그리고 그것을 민주정부 하에서의 상황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대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좋은 상황인가"라고 묻는다.
- 35)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서술은 조희연(2008a) 참조.
- 36) 신보수(new conservative)라고 할 때 통상 두가지 용례가 있다. 첫째 신보수라고 할 때 80년대 이후 영국의 대처(Thatcher)정부나 미국의 레이건정부와 같이 이전의 상대적인 진보개혁정부--영국의 경우 노동당 정부 혹은 미국에서는 카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기업친화적인 정책, 신성장정책을 주도하던 정부를 지칭하는 경우이다(B. Jessop(1988)은 이러한 신보수정권의 핵심특징이 신성장주의이며 이는 과거의 복지 국가의 '1국민프로젝트'를 해체하고 '2국민프로젝트'의 출현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미국의 부시 정부와 같이 보수당 정부 중에서도 이라크전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세적 개입전략'을 구사하고 가족 가치 중시, 낙태반대, 동성애 반대 등과 같이 '기독교 근본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흐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주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대안부제의 상황에 돌입함으로써--자본주의에 대한 계급적·정치적 제약들이 대거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시장근본주의적 지향이 더욱 세계화되고 글로벌 자본축적이 더욱 강화되는 조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60·70년대의 사회민주주의적 계급정치에 대한 보수의--국민국가적 지형에서의--정치적 반격의 성격을 띄고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부시정부는 네오콘적 신보수와 지구적 신자유주의와 공세적 군사주의의 결합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네오콘의 군사주의적 공격성은 네오콘적 보수의 중요 특징이기는 하지만 9·11사건과 같은 계기적 요인에 의해서 강화된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신보수'라고 할 때의 '신(新)'은 60·70년대의 개발독재적 '보수' 혹은 '파쇼화되었던' 보수, 즉 구 보수와 구별된다고 하는 한국적 의미를 담고 있다.
- 37)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둘러싸고 한겨레신문에서 지상논쟁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60·70년대의 개발독재적 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신보수정권'이라고 규정하였다(조희연, 2008c, 2008d). 이에 대해서 고세훈(2008)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보수'라는 개념을 더구나 '신'보수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보수를 '대외적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대내적으로 유기체적 일체성을 추구하는 지향'으로 규정하고 박정희정권이나 이명박 정부를 보수로 규정하는 것--더더군다나 '신'보수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강원택(2008)은 이명박 정부는 과거 냉전형 보수와는 구별되는 '계급적 속성을 띠는 경제적 우파와 물질주의적 가치의 결합'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홍성민(2008)은 이명박 정부의 복합적 성격을 논하면서, 특히 '감성의 정치'가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60·70년대의 정권과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변화의 측면과 불변(不變)의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0년대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언제나 신정권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그 논쟁 참여자들에게는 두가지 시각이 교차했던 것 같다. 하나는 '불변(不變)론적' 시각 혹은 정서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정권의 구조적·계급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엄청난 변화를 지적하는 '변화 강조론'이다. 필자는 계급본질적으로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과 정권이 작동하는 방식과 성격변화를 동시에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성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환원론적 서술만이 존재하지 차이를 드러내는 '분석(分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38) 이 부분을 둘러싸고 필자와 강준만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에 대해서는 조희연(2007d), 강준만(2007a, 2007b) 참조. '강남사람은 계급의식이 있고 강북사람은 계급의식이 없다'는 표현에 대하여, 강준만(2007a)는 '강남-강북의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조희연은 민중의 분노와 위협을 동원정치의 동력으로 쓰자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희연(2007d)은 '한국사회가 87년 이후 2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단계를 거쳐 왔는데 한단계 높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병목지점에 도달해 있고 이를 위해서는 '87년 6월 민중항쟁적 대중'이 보다 '급진적 대중'으로 전화되고 그를 통해 보수의 강고한 저항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강준만 교수는 노무현 정부--혹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진보세력--은 대중에게 다가가는데 어떻게 대중과의 소통에 실패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9) 한단계 높은 사회진보를 성취하기 위한 대중의식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보수적 언론권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즉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제 독재적 유산을 옹호하고 민주개혁을 반대하는 '반(反)개혁지'일 뿐만 아니라 계급적·사회적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옹호하는 새로운 '우파 계급지(階級紙)'로서의 성격을 지배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조희연, 2007d). 대중들은 강력한 평등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양극화와 비정규직화, 사회경제적 삶의 하락 등에 분노하면서도 그것을 신개발주의적·신시장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일종의 '신보수적'--의식으로 경도되고 있으며 이른바 조중동으로 상징화되는 보수적 계급지(紙)의 매일매일의 '계급적·정치적 교양'을 받으면서 신개발주의적·신성장주의적 비전에 경도되는 것이다.

(제3부) 오후 3시 50분 - 6시 00분

‘다른 비판의 눈’으로 본 5·18민주화운동(II)

* 발표 :

1. 코뮌주의적 시각에서 본 5·18: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조원광 '수유+너머' 연구원)
2. 자율주의적 입장에서 본 5·18: '광주민중항쟁과 제한권력'
(조정환 자율평론 상임강사)
3. 아나키스트적 시각에서 본 5·18
(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 토론 :

신종화(전남대), 이성백(서울시립대), 김정환(서강대 대학원)

* 사회 :

백원담(성공회대)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이진경(서울산업대 교수)·조원광('수유+너머' 연구원)

1. 혁명, 혹은 항쟁의 일차성

80년대를 통과한 모든 시간에 항상적 긴장을 제공했고, 그 긴장 속에서 사회를, 민중이라고 불리던 소수자들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사유하게 만들었던 것의 한가운데에는 '광주항쟁'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때 '광주'란 결코 하나의 고유명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일반성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혁명과 운동, 새로운 삶의 꿈을 지칭하는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 이름으로 불러내어지는 것들, 그 이름과 함께 배회하던 유령들, '원혼'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전투적이고 너무도 능동적인 유령들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무력으로 무장한 국가권력을 동요시켰고, 그 동요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창출해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동요의 진동 속에서, 그 진동의 만들어낸 삶의 공간에서 산다.

그 거대한 동요를 통해 광주항쟁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이 되었고, 전사들의 무덤은 '국립묘지'가 되었다. 변혁을 꿈꾸던 사람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혹은 그것을 제끼고 몰래 찾아가던 그곳을 이제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월이면 찾아가 참배한다. 올해의 기념식은 더욱 그러했다.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들어서고, 대중들은 경찰들의 담에 밀려 그 바깥에서 대치하는 상황처럼 망월동 묘지에서 역설적인 것이 또 있을까?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해석되고 전파되던 '광주의 진실'은 어느덧 표준적인 해석에 의해 역사 속에 자리잡게 된 듯하다. 군부독재의 폭력적 탄압과 그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무참한 폭력에 의한 희생이 일반적 해석의 색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거룩한 희생과 비극적 이미지 안에서 광주시민은 저항은 군사적 폭력에 대한 '반작용(reaction)'으로 위치지워진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 그것이 광주항쟁을 요약하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듯하다.

그러나 정말 광주항쟁은 군사적 폭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된 것일까? 사실은 처음부터 반대가 아니었을까? 10.26이후 계속되던 전국적 투쟁이 "군사정권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라는 패배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중단되었을 때에도, 그에 반응하듯 계엄령의 확대로 군사정권이 공세를 펼치던 시기에도, 광주지역만은 이전과 다름없이, 아니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투쟁을 펼쳤다는 사실이 "왜 하필 광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광주지역의 투쟁이 군사적 행동보다 먼저였고, 투쟁이 권력보다 일차적이었다는 것이다. 군사적 폭력은 그러한 투쟁에 대해 가해진 반작용적(reactive, 반동적!) 폭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광주항쟁은 반동 아닌 능동적 힘이었고, 2차적인 게 아닌 1차적 힘이었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진 폭력의 희생자라는 비극 이전에, 군사정권보다 먼저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능동적 운동이었다. 당황한 군부에 의해 어떠한 은폐도 없이 가해진 군사적 폭력의 참혹함조차 이 능동적 투쟁의 강력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전체 인구 80만 중 30만이 시위에 참여하고, 그 맨손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완전무장한 공수부대 정예병력 2만이 투입되는 사태를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단지 이것만은 아니다. 예전에 맑스는 '무엇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질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광주항쟁이야말로 "무엇을 위해 싸웠나"보다 "어떻게 싸웠나"가 더 중요한 경우를 보여 준다.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투쟁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투쟁이 확대되면서 민주화는 물론 '전두환'이란 이름도 잘 모르는 시민들, 심지어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마저 동참한 투쟁이었다. 상인들은 빵과 음료수를 주었고, 시장의 행상 아주머니들은 김밥을 싸다 날랐다. 부상자들에게 수혈할 피가 모자라자 헌혈 행렬이 잇따랐다. 서로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세계가 출현한다. 이것이 무장한 공수부대를 맨손의 시민들이 몰아낼 수 있게 했던 놀라운 힘의 비밀이었을 것이다.

가령 최정운처럼 이러한 세계를 '공동체'라고 명명하는 것은¹⁾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 공수부대에 의해 자행된 '인간 존엄성의 파괴'와 이에 대한 분노와 결단이, 어쩌면 '종교적 합일'의 느낌마저 느끼게 하는 '절대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21일까지 진행된 항쟁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는 도청을 수복한 뒤 해방구가 형성된 상황에서 최종진압에 이르는 과정을 주목하는 통상적 해석에 비해, 참혹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공수부대와 싸워 승리한 광주항쟁의 '비밀', 그 거대한 힘의 비밀을 주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일종의 목시적 '이념'이 되었던 것인지, 바타이유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고양된 합일의 감정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총으로 무장하는 순간 와해되기 시작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좀더 난감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소유물을 아낌없이 내주고 나누던 것이 사실이지만, 공수부대를 내쫓는다는 직접적인 목표 말고는 공유된 어떤 목적도 없었고, 지속가능한 어떤 안정적 형태나 조직은커녕 어떠한 정체성도, 외연적 경계도 없었으며, 너무나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질적인 채 그대로 연결되며 확장되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명명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개인들간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개인들이 대중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 동화되면서, 분리되어도 만나는 즉시 다시 결합하는 일종의 집합적 신체가 구성되었던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흐름'이라는 말 이상으로 '집합적 신체'라는 말은 강조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광주에서 출현한 '그것'은 공동체라는 어떤 안정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을 상정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촛불집회의 대중처럼 단순히 '흐름'이라고만 말하기엔 너무나도 강력한 상호인력과 접착력, 일체감과 지속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특성이 소멸하면서 결합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더해지거나 이탈하면서 흘러가고 강력한 적을 만나면 절단되고 흩어지지만 다른 흐름과 만나면 다시 거기에 흡수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흐름인 동시에,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강력한 결합력과 일체성을 갖는 집합적 신체였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이를 일단 '흐름의 구성체'라고 명명하자. 여기서 굳이 구성체(formation)라는 말을 사용하려는 것은, 애초에 맑스가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랬듯이, 그 말이 대중의 흐름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떤 형태(form)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계속되어간다는 점을, 하지만 하나의 형태를 이루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형태를 형성(formation)하는 과정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지칭하는데 유용하리

1)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1999.

라는 생각에서다.

우리는 이 흐름의 구성체가 광주항쟁의 '일차과정'을 형성한다고 믿는다. 이 일차과정이 21일까지의 상황 전체를 특징짓고 있었고, 이것이 광주항쟁의 일차적 힘이고 놀라운 진행의 '비밀'이라고 믿는다. 공수부대가 밀려나간 뒤 이 흐름의 구성체는 명시적으로는 해소되지만, 사태를 '수습'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할 때조차도, 그것은 사태를 규정하는 일차과정으로서 지속되었고, 이것이 사태를 단지 '수습'하고 '문제없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차적 힘이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광주항쟁에 대한 모든 '평가'나 해석에서 일차적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흐름의 구성체와 비인칭적 특이성

1) 감응과 전염

도청에 집결하여 목숨을 걸고 공수부대와 대결하던 광주사태의 '마지막 장'은 "패배가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으며, 그 패배 속에서 영웅은 죽고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어떤 가르침이 남는다"는 고전적 비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만큼 투쟁의 이유나 목적, 방향 역시 뚜렷하다. 그러나 21일 이전, 광주항쟁의 첫째 국면은 정말 총칼 아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각자가 투쟁에 참여한 동기는 이처럼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이해하기 어렵다'. 가령 전옥주와 함께 시위대의 선전방송을 이끌었던 차명숙의 증언이 그렇다.

".....광주도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호기심도 많은 때였어요.....18일 오후쯤, 그 때부터 구경을 하러 다녔어요. 구경하니까 옆에서 빵도 주고 그래서 먹고 그리고 재미도 있었어요. 아무튼 나는 재미있었어요.....광주로 오는 길 다 막았다 그리고 차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²⁾

알다시피 당시 선전방송은 단지 참여를 선동하는 무기였을 뿐 아니라, 시위대의 투쟁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고, 이런 점에서 첫째 국면의 항쟁에서 핵심적인 지도부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엄군이 '모란꽃'이란 이름으로 간첩으로 몰던 차명숙은 이 시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인물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증언은 적이 당혹스럽다. "구경하다가 빵도 주고 재미도 있고 해서" 참여했다는 것이다. 목숨을 건 결단과 너무도 대비되는 색조의 가벼운 이유다. 어떤 이념은 물론 군사독재나 민주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거리가 멀다.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나타난 증언자들을 대충 분류해보면, 이는 단지 차명숙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표1>³⁾은 학생들이 대개 '이념적인' 이유로 참여

2) 박병기 엮음, 『5.18 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p. 218.

3) 이 표는 한국현대사연구소에서 1990년에 발간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기록된 증언자들을 필자가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념적 참여]는 증언자가 과거 정당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독재 종식이나 신군부 타도 혹은 민주화 같은 명확한 운동권의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 증언자들이다. [무이념적 참여]는 시위참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 이외에 명확한 동기나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했음에 반해, 무장조직이나 학교 바깥의 시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나아가 여러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 정도는 군부독재의 종식/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해석들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이념적 내지 정치적 동기에 상응하는 어떤 '목적'과는 다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투쟁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다.

<표 1>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나타난 증언자들 성향 분류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 48명)	무장 조직 활동 (총 41명)	시민항쟁 1 (학내) (총 26명)	시민항쟁 2 (학외) (총 98명)	선전활동 (총 21명)	총계
이념적 참여	24명	3명	26명	9명	12명	74명 (31.76%)
무이념적 참여	21명	37명	0명	60명	7명	125명 (53.64%)
방관	3명	0명	0명	27명	2명	32명 (13.73%)
적대	0명	1명	0명	1명(+1인 불분명)	0명	2명 (0.86%)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 이들은 “인공도, 6.25도 겪었지만, 저런 놈들은 처음 본다.”는 한 노인의 절규처럼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참여한 것일까? 차명숙의 증언은 ‘목적’보다는 오히려 투쟁이 진행되는 양상 자체가 그를 투쟁으로 끌어들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빵을 나누어 준다”에서 중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나누어준다’는 것일 게다. 그리고 ‘재미’라는 말은 두려움보다는 무언가 사람을 잡아끄는 ‘흥미’와 ‘매력’을 뜻하는 것일 터이다.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를 공유하고 함께 나눈다는, 결코 흔하지 않은 사태가 주는 어떤 ‘재미’가 그를 투쟁으로 잡아끌었을 것이다. 투쟁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투쟁의 방식이, 투쟁의 과정이 진행되며 나타난 어떤 면들이 그들을 잡아끌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무언가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감하게 하는 것은 단지 목적이나 이념 같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적인 투쟁의 경우에 개인들의 공감을 야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것이다. 광주항쟁의 경우 공수부대의 참혹한 폭력이, 그 폭력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 폭력에 대한 분노의 공감이 이러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분노만으로는 투쟁에 나서게 하기 힘들다. 그러한 폭력은 일차적으로 공포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공포를 이기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만 분노는 투쟁으로 인도한다. 다음의 증언은 이를 잘 보여준다.

1980년 들어 들뜨기 시작한 분위기는 운동권 활동도, 조직활동도 안 해본 나를 자연스럽게 시위에 참여하게 했다....다치는대로 치고 발로 걷어차고...‘저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러 올랐지만 당장은 도망치기에 바빴다.....시민들이 주춤하고 뒤로 물러섰다. 내가 외쳤다. “저것은 공포탄이다. 아무 상관없으니 밀고 나가자!” (현사연, 295쪽, 위성삼 증언)

이념적 해석들이 발견되지 않는 증언자들이다. [방관형]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구경만 한 증언자들입니다. [적대형]은 시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증언자들입니다.

4) 김두식,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5.18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5.18기념재단, 2007, p. 499.

그렇다면 무엇이 공포를 이기게 하는가? 하이데거라면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보는 결단을 통해 그 공포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⁵⁾ 이는 극도의 참혹한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투쟁에 참여한 것을 설명하는 데서 비슷하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나중에 보겠지만, 도청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결단’을 한 사람들, 아니 무기를 내놓으라는 ‘수습위원’들의 요구에 무기를 들고 계속 싸울 것인지를 아니면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고심해야 했던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데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거대한 힘을 만들어냈던 21일까지의 항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결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개인적 상황이 되면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투쟁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가령 다음의 증언이 그렇다.

나는 너무 무서워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서서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쾅하고 뒷덜미를 잡았다....그 일을 당하고 그 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실업야구를 보다가 순간 전기가 나갔다. MBC방송국이 불에 타고 있다고 했다....사람들 틈에 끼여서 가고 있는데...계속 사람들이 불어났다. 나도 그 대열을 따라 운암동 고가도로 부근에 가니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나는 가두방송을 하는 전옥주의 앞에 서서 각목을 휘두르며 길을 터주었다.....처참했다. 숨이 팍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거기 있던 사람들은 분을 이기지 못해 쾅쾅 우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공수부대에 이를 갈았다. 그 광경을 나를 참지 못하게 했다. 공수부대를 다 때려죽이고 싶었다.(현사연, 403~404쪽, 김영봉 증언)

증언자가 혼자서 공수부대의 폭력을 대면해야 했을 때, 혹은 그 폭력으로 예상되는 죽음을 떠올렸을 때, 그는 “무서워서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각목을 들고 전투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다. 이는 김영봉 개인에 특별한 경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누구나 횡행하며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다음의 증언은 반대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서슴없이 선두에 서던 사람이 혼자가 되었을 때 대면하게 되는 공포의 감정을 잘 보여준다.

어느 누구 하나 선뜻 차 선두에 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출발은 더욱 늦어졌다. 나는 서슴지 않고 최선두로 나아갔다....그런데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이게 웬일인가 나 혼자만 온 게 아닌가? 그렇다고 혼자서만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 역시도 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현사연, 225쪽, 구성주 증언)

여기서 공포를 이기는 것은 죽음과 대면하여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있는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라면 이를 좀더 개념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것이다. 그는 감정(sentiment)을 야기하는 감응(affect)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기쁨의 감응과 슬픔의 감응이 그것이다. 기쁨의 감응이란 나 아닌 다른 것과 만남으로써 나의 힘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감응을 총칭한다. 신명이나 희열 등은 모두 기쁨의 감응에 속하는 감정이다. 슬픔의 감응이란 반대로 만남

5) 『존재와 시간』, ##

을 통해 힘이 감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응의 총칭이다. 분노는 물론 공포나 불안, 두려움은 모두 슬픔의 감응에 속한다. 개인이 대중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힘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것처럼 힘의 증가로 인해 야기된 긍정적 감응이 개인적인 공포나 불안의 감응을 초과할 때, 공포를 넘어서 투쟁으로 나서는 게 가능하게 된다.

요컨대 공포의 감응을 넘어서는 것은 그와 상반되는 개별적인 기쁨의 긍정적 감응이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 아니면 서로 공감하는 비슷한 신체들이 만남으로써 발생하는 힘의 증가가 개별적 공포를 넘어서는 감응을 야기하는 경우다. 특히 공감하는 대중들과의 만남은 개별적인 신체들의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 감응의 비약적 증가를 야기한다. 대중과 더불어 개인은 죽음의 공포마저 쉽게 넘어서나. 여기서 후자가 전자를 포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광주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두 후자와 결부되어 있다.

...무분별한 군인들의 행패를 보니 기운도 없고 몸이 아파 곧바로 화순으로 왔다.....시위 차량이 많아 도로는 차의 왕래가 어려웠다. 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시위대원 한 사람이 "지금 광주에서는 군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당신도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했다. 나는 시위대를 보는 순간 굉장히 신이 났고...(현사연, 320~321쪽, 신만식 증언)

군인들의 행패는 분명 분노를 야기했을 터이지만, 그것은 증언자로 하여금 기운이 빠지게 했다. 그러나 시위대를 보는 순간 "굉장히 신이 났고" 그 신명의 감정이 공포를 쉽게 넘어서게 했다.

시내에서는 이미 산발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1백~2백 명 정도 되는 소규모의 시위대가 10여 군데 있었다. 시위대는 이리 밀리고 저리 물리다가 시위대끼리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럴 때면 서로 반가움에 함성을 지르면서 합쳐지곤 했다. 이렇게 해서 규모가 1천 명에 달할 만큼 커진 시위대였지만 군인들이 쫓아오면 꼼짝없이 밀리곤 했다.(현사연, 784쪽, 천영진 증언)

이 증언은 개인만이 아니라 시위대라는 집합체의 경우에도 공포의 집합적 감응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감응 역시 물리고 분리되며 약화되면 공포가 더해지고, 다른 시위대를 만나 "반가움에 함성을 지르며 합쳐지"면 공포가 완화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직접 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밥을 해주거나 헌혈을 하는 것 등 투쟁을 원조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 역시 그들이 무언가를 행하고 함께 한다는 기쁨에서 이루어지고 확산된다. "밥을 해준 아낙네들은 비인간적인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것들을 몰아내는데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바람이 나서 밥을 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같았다."⁶⁾

광주항쟁에서 개인들이 대중이 되고, 대중은 더 큰 대중이 되는 것은 이런 만남을 통해 대중적인 감응이 전염되고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 전염과 전파의 속도가 아주 빨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빨랐던 것은 폭력적인 사태가 극심했기에 분노의 감정이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대중적인 시위가 광주 전역에 확산되어 있었기에 대중들이 어딜가나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중이 개인보다 빨리 달려왔기 때문이고, 감응의 전염이 결단의 시간보다 앞질러 왔기 때문이다.

6)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10쪽.

이러한 감응을 통해, 감응의 공유를 통해 개인들의 경계가 소멸되면서 대중이라는 집합적 신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대중들의 투쟁이 확산되면서 전염된 감응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신명이나 기쁨의 감응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분노 역시 확산되고 전염된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투쟁하는 대중들의 감응은 결코 단순하지도 단일하지도 않다. 그러나 분노의 전염이 투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보다 신명과 기쁨의 감응이 더 강하고 빨랐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차명숙이 '재미있다'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믿는다. 기쁨의 감응이 전염되면서 개인들을 '공동체'라는 말로 명명하고 싶게 하는 하나의 집합적 신체로, 집합적 구성체로 만들어갔다는 것을 다음의 증언은 아주 잘 보여준다.

문] 그럼 어떤분이 먼저 하자고 그런거예요?

답] 인자 동네에서 서로 마음이 들뜬게 너도 나도 다 동의가 대기가 마련이제. 사람이 극도에 당하면 저기 온다 그러면 마음이 다 동의가 되기 마련이여. 그래갖고 너도 나도 다 한 통일이 되제, 누가 먼저 하자하고 누가 먼저 선동하고 그런 뭐가 없어. 다 동의가 되기 마련이여. 그래갖고 동의가 되면 자동적으로 쌀 얼마 갖고 와라 그 소리도 안해.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다 그냥 자기 집에 있는것이 아까움이 없어.7)

'들뜬 마음', 그것은 힘의 증가가 야기한 마음의 상태, 기쁨의 감응을 표현한다면, '동의'는 '공감'의 상태를, 이질적인 개인들을 하나의 집합적 신체로 만들어주는 감응의 공유를 표시한다. 이러한 감응의 공유는 "누가 먼저 하자고 선동하고 그런 뭐가 없"이 "자동적으로" 확산된다.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가 원인지 누가 시작한 것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물론 슬픔의 감응, 공포의 감응도 이처럼 전염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전염되는 순간 대중을 개인들로 분리한다. 따라서 전염은 거기서 끝난다. 그러나 기쁨의 감응은 분리된 개인조차 끌어당겨 모으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로 더 강하게 퍼져가며 더욱 커지는 방식으로, 소위 '포지티브 피드백'의 방식(수확체증의 방식)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응은 흩어진 다음에도 남아서 다시금 개인들을 대중으로 모이게 하고, 다시금 투쟁에 나서게 한다. 수백명의 학생들에서 시작한 시위가 3~4일만에 30만이라는 거대 군중으로 늘어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다.

감응의 전염을 통해 "자동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성체, 마치 물이 지형이나 장애물을 우회하면서, 혹은 끓기면서도 합류하듯이 전염되는 감응을 통해 다시 만나고 합류하며 비약적으로 상승한 대중의 흐름, 그리고 그 대중의 거대한 힘, 그것이 21일 공수부대를 몰아낸 '비밀'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영웅적인 결단이나, 그런 영웅들의 비장한 정서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잊게 만드는 기쁨의 감응과 결단보다 너무 빨리 다가오는 대중적 전염의 힘이 그 거대한 힘을 형성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전염적 구성체를 형성하면서 대중들이 공유했던 이러한 감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투쟁의 '비밀'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비밀'을 모른다면, 그 투쟁을 뒤이어야 한다는 생각 또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우리는 놀라운 힘으로 승리했던 광주항쟁의 '일차과정'을, 이전의 상황에 대해 근본적 단절을 야기한 일차적 요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7) 김혜선, 정근식, 『항쟁의 기억, 세 개의 시간』,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 2000.

2) 비인칭적 특이성

개인이 아닌 집합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 통상 개인들은 집합체로 조직되고, 그 조직이 부여하는 지위에 따라 역할을 할당받는다. 지위와 역할에 따라 권한과 권리, 의무가 주어지고, 개인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전체 조직체를 작동시킨다. 이는 하나의 합목적적 조직이 아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기업가, 도지사, 의사, 대학생 등등의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부합하는 역할이 있다. 운동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운동을 위해선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은 개인들을 지위와 역할에 따라 분배하고 움직이게 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이 아닌 곳에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지위와 그것을 맡은 자로서의 자신의 이름이 따라가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적절한 활동이나 지위를 확보한다. 대중운동의 경우라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흐름은 조직에서 흔히 사용하는 체계화된 지위의 체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중운동의 경우에도 지도자와 지도부는 따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지도자의 '이름'이 지도자 없이도 대중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그런데 5월 12일 이후의 광주항쟁과정에서 형성된 집합적 신체는 이와 달리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없거나 혹은 반대로 기존의 그것을 지우면서 구성되었다. 이는 사실 반은 이미 군사정권에 의해 조건 지워진 것이기도 했다. 5월 17일 계엄확대에 따라 전통적 운동권 지도자들이 검속되거나 도피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적 리더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들불야학이나 광대의 멤버인 대학생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고, 윤상원 역시 구속되지 않고 광주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어떤 사건이나 투쟁에서도 그들의 지위나 이름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윤상원이나 박남선, 김종태 등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표면으로 부상하고 또 사건의 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5월 22일 이후였다. 그 이전에 그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일개 시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전통적인 리더들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가진 명망이나 권위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위나 명망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 단지 군사정권이 사전에 정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투쟁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흐름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곳곳에서 출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투쟁의 흐름을 주도하고 지도했지만, 대개는 지도자를 자임하지도 않았고, 지도자로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대개는 지도자로서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선 어떤 사람이 목소리 높여 외치며 사람들을 지도했고,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신원도,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란 점에서 '비인칭적 인물'이다. 이는 누구도 주어진 상황, 주어진 조건에서 대중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다음의 증언은 비인칭적 인물의 자리에 섰던 '어떤 사람'들의 기억이다.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공수들을 광주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외쳤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한참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며 외치다 공원으로 가서 집결했다. 그때 한 시민이 연설을 했다. "지금 광주에서 죄없는 시민이 공수들을 철수시키고 광주 시민의 자유를 회복합니다."(현사연, 242쪽, 정영동 증언)

"공수부대가 우리 부모 형제들을 학살하고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전

두환의 집권을 쳐부숩시다. 전두환이를 쳐부숩시다." 나의 외침에 시민들은 너나할것없이 트럭에 올라탔다.(현사연, 216쪽, 최치수 증언)

'...최루탄 가스가 사라지고 다시 물러들게 되자 내가 시민들에게 외쳤다. "여러분, 데모는 우리가 했는데 저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데모대들이 차를 대라고 해서 차를 댔고, 최루탄을 쏘니까.....앞으로 데모하지 않는다고 협상하러 갑시다.....공수대 지휘관으로 보이는 대위에게 말을 걸었다."(현사연, 656쪽, 김승철 증언)

두 번째 증언자인 최치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다. '어떤 고등학생'의 외침이 사람들을 싸우기 위해 트럭에 올라타게 했던 것이다. 김승철은 당시 20살의 운전기사로서, 나이로나 신분으로나 아니면 '이름'으로나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을 설득해 공수부대 지휘관과 협상을 시도한다. 이들만이 아니라 당시 광주 전역에서 벌어졌던 투쟁의 리더들은 모두 통상적인 '리더'의 지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투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아닌, 말 그대로 평범한 '어떤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차명숙도 그랬지만, 그과 함께 선전 방송을 담당했으며 후일 광주의 대표적인 리더로 지목되는 전옥주(본명 전춘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광주 사람도 아니었고, 남성 아닌 여성이었으며, 신원도 불명확했다.

이런 식으로 당시 투쟁에 나선 광주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사실상 그런 비인칭적 주어로서 나름의 위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다. 분명 모두가 리더였던 것은 아니다. 리더들을 따르는 이들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주에서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각각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사리판단을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적절한 투쟁의 방향을 찾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혹은 무언가 상황이 요구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전옥주와 차명숙의 경우는 신원이 불명확한 30대와 20대 초반 여성일 뿐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대담함과 남다른 언변은 순식간에 그들을 광주의 '수괴'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시민군을 조직하고 편성한 문장우는 전과자였다가 군 복무시절 상관을 폭행하는 등 역시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현장에서 가지는 지도력과 설득력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의 방위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18일 이후 형성된 저 흐름의 구성체는 지위나 이름에 따라 활동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름을 지우고 지위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그렇기에 누구나 투쟁을 이끄는 '어떤 사람'이라는 비인칭적 주어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구성체였다고 해야 한다. 지위나 이름을 지우며 형성되고 움직이는 이 구성체를 '비인칭적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혁명을 '이름 없는 혁명'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무명의 혁명, 비인칭적 구성체에서는 투쟁을 이끌고자 하는 누구도 어떤 지위에 있는 인물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역으로 기존의 어떤 지위나 경력도 그것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도록 보장해주지 못했다. 30만 대중이 싸운 4일간 이전에 허명을 갖고 있던 지도자, 혹은 이전에 지도적 지위를 갖고 있던 지도자가 단 한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누구나 지도할 수 있었고, 또 누구나 지도자였다! 만약 누군가 나서서 "누가 주도자야?"라고 물었다면, 모두가 "내가 주도자요"라고 나설 게 틀림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5.18 이후 사태를 만들어가는 이 흐름의 구성체에서 군부가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 지도부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실제로 무수한 리더가 존재했던 것이다. 덕분에 언제

어디에서 시위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여러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했고, 이에 여러 리더가 요구되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다. 그 수많은 리더들이 뜨고 집에 따라 소규모 집단들이 구성되고 해체되기를 반복했다.

게다가 복수의 리더들은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수한 리더의 공존이 시위대의 장점이 되었고 공수부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혼자서는 결코 공수부대에게 저항할 수 없었지만, 함께 함으로써 그런 힘을 이룰 수 있었다. 주먹밥을 싸서 만들어준다든가 집집마다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내놓는다든가, 환자를 이송한다거나, 차량시위대를 조직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바로 이런 무수한 복수의 자생적 리더들을 통해 가능했다. 리더가 복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채워나갔다. 가령 정무근은 어떤 상황에서 헌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 결과 헌혈운동의 리더가 되었다.

나는 순간 '피가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울러 누군가 헌혈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헌혈! 헌혈! 을 외쳤다. 그 말을 듣고 평소 안면이 있던 기명서가... 우리는 헌혈버스에 올라탔다...방송을 했다 '시민 여러분 헌혈합니다!!'(현사연, 828쪽, 정무근 증언)

요컨대 지위와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들어섰고, 준비되지도 않았고 예상되지도 않았던 이질적인 능력들이 모여들면서 각각의 장소마다 고유한 사건을,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 하는 능력으로 그 상황에 참여했고, 운전은 하는 사람은 운전 하는 능력으로, 밥을 하는 사람을 밥을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환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 참여했고, 그 사건을 함께 만들어낸 것이다.

"시내 여기저기에서 시위에 참가하고 돌도 던졌다. 아주머니들이 길거리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김밥을 나누어주고 있었고, 거리는 여기 저기 최루탄이 터져 있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매웠다.....술집 여자들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늘어서 있었다."(현사연, 464쪽, 김행주 증언)

서로 다른 특이적 능력이나 특이적 활동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냈으며, 그러한 상황을 주도하는 흐름을, 흐름의 구성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질적인 요소들이 특이점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특이점들의 분포를 통해 흐름의 양상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특이적 활동, 특이적 능력들이 모여들며 그때마다의 흐름, 그때마다의 구성체의 특이성을 형성했던 것이다. 돌리츠처럼 특이성(singularity)을 특이점들의 분포에 의해 정의하고, 스피노자처럼 복수의 요소들이 한데 모여들며 하나의 사태,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것을 '특이적인 것(the singular thing)'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⁸⁾ 광주항쟁의 첫째 국면에서 출현하여 그 국면 전체를 관통해갔던 이 흐름의 구성체야말로 특이적 구성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광주항쟁에서 대중의 구성체의 리더들은 이런 특이적 구성체의 특이점이었다. 그들은 서로 촉발하

8) 이에 대해서는 이진경, 「코뮌주의와 특이성」, 「코뮌주의 선언」, 교양인, 2007 참조

면서 더 분명한 특이점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리더들의 분포 내지 배치가 그때마다의 시위대 전체의 성격과 투쟁의 양상을 규정했다. 군사적 공격으로 그 중 한 두 개의 특이점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다른 '어떤 시민'이 새로운 특이점을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각각의 특이점들은 다른 리더, 다른 특이점의 부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과 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했고 촉발했다. 이 대중-구성체의 리듬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이질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광주의 이 대중적 구성체는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지위에 따라 역할이 부여된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라, 특이점들의 분포가 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이적 구성체가 될 수 있었다. 상황과 국면에 따라 다른 리더들이 부상했고, 그때마다 시위대의 성격은 달라졌으며, 투쟁의 양상 또한 달라졌다. 공수부대는 이 급속하게 변신하는 이 가변적인 다양체의 유연성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항쟁의 기간 대중의 구성체가 특이적 구성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위나 이름이 지워지고 그 대신 말 그대로 비인칭적 특이점들이 언제 어디서든 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위에 할당된 권리나 권력이 작동하는 한, 대개는 그런 지위에 있지 못한 '비인칭적' 인물이 자신의 능력을 사건의 흐름을 규정하는 특이점으로 관여하게 하기는 아주 곤란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특이적 구성체였기에, 어떤 누구든 특이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지도자가 되고 사건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대중의 구성체를 특징짓는 비인칭성과 특이성은 하나의 동일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8일 이후 지수적 속도로 성장하며 형성되어간 광주항쟁의 이 대중적 구성체를 '비인칭적 특이성'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흐름을 이룬 물이 그렇듯이, 흐름의 구성체는 기존의 것들을 지우며 간다. 지위도, 이름도, 주어진 자리와 할당된 역할도 모두 지워버린다. 그리고 그 지워진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고 피어나게 한다. 물론 기존의 것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거나 무력해지는 것은 아니다. 최정기가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 무장시위대는 그것이 원래 맺고 있던 미시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작동했다.⁹⁾ 하지만 그 네트워크는 애초에 수행하던 지점과 전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애초의 기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 가령 황금동의 성매매 여성들이 맺고 있던 사적 네트워크는 헌혈운동을 조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양동시장의 행상아주머니들의 요리 솜씨와 미리 확보하고 있던 재고는 시위대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덕분에 시위대에게 "먹을 것은 언제나 넉넉했다."(현사연, 254쪽, 정홍섭 증언)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네트워크와 자원이 적극 활용되지만, 그것 역시 거대한 흐름이 기존의 장소와 역할, 지위를 지워버린 곳에서 새로운 재배치되고 재구성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흔히 하듯이 혁명을 기존의 권력을 전복하여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기존의 질서를 근본에서 전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혁명'이라는 말에 부합하는 게 아닐까? 기존의 모든 것을 지우고, 기존의 모든 것이 다르게 기능하고 다르게 작동하게 하는 새로운 배치 속으로 이행하는 것. 다음 증언에서 '민주화'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

9) 최정기, 「광주민중항쟁의 지역적 확산과정과 주민참여기제」, 『5.18민중항쟁의 정치, 역사, 사회3』, 5.18기념재단, 2007, pp. 224-225.

을까?

가끔씩 아주머니들이 시위차가 지날 때마다 빵, 음료수, 김밥 등을 올려주었다. 법원 앞을 지날 때는 법원 직원이 수고한다면서 음료수를 주고 박수도 쳐주었다. 처음에 나는 민주화가 어떤 것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민주화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항쟁기간에 내 호주머니에는 5천 원짜리 하나가 들어있었으나 쓸 데가 없었다. 돈이 있어도 필요치 않았다.(현사연, 448~449, 임병석 증언)

이러한 변화는 애초에 투쟁의 결정적 발단이 되었고, 투쟁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노마저 다른 것으로 바꾸어놓기도 한 듯하다. 가령 다음과 같은 김행주의 증언은 광주가 만들어낸 구성체가 중국에는 그 분노라는 틀마저 흘러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요 며칠간 군인이라면 이가 갈리고 죽어도 시원찮을 것 같더니, 며칠 동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주그리고 있는 것을 보니 무섭고 미운 생각보다 안쓰럽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거뒀다. 당시 군인들에게는 가게에서 조차 물건을 팔지 않을 때였다.....모아진 돈으로 빵과 우유를 구해 나눠주었다.(현사연, 464쪽, 김행주 증언)

이러한 '마음'이 단지 김행주에게만 발견되는 개인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단지 전투적 자세의 불철저함이나 투쟁을 흐리는 모호한 동정이라고 일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마음'이 단지 예외적인 어떤 한 사람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혁명이 원한이나 분노에 머무는 '부정'의 힘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건설하는 '긍정'의 힘을 안다면, 기존의 것들을 지우는 혁명적 흐름 속에서 기존의 분노나 원한마저 지우고 넘어서는 양상이 출현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사실이라면, 광주에서 대중의 투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갔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방구의 딜레마

1) 수습대책위와 결기대회

항쟁은 승리했다. 끔찍한 폭력을 자행하던 공수부대가 대중들의 힘에 의해, 그 거대한 흐름에 의해 밀려나고 퇴각했다. 광주는 말 그대로 '해방구'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 혁명운동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눈앞에서 적은 사라졌지만, 그렇기에 대중적 투쟁의 흐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 사라진 적들은 광주시를 포위하고 주변지역과 절단하여 고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더욱 거대한 무력으로 치고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해방구를 지키고 해방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전 국면과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일 것이다. 도시의 일부 거점을 방어하고 있는 군대를 공격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중의 투쟁이 더는 지속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새로이 무장하여 치고 들어올 적으로부터 해방된 광주를, 광주 시민을 지키는 방어적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해방된 상태에 어떤 안정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어떤 조직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런데 항쟁 전체를 지도한 안정적인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조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지도적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안정적인 지도부를 형성했던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지도부를 조직하기 위해선 신뢰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이전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명망, 이력 등이 일차적인 근거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첫째 국면에서 대중적 구성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핵심적인 요소들이 소멸되고 그 혁명적 사태 이전의 준거들로 되돌아감을 뜻한다. 그것은 해방의 힘을 창출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게 분명하다. 해방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해방적인 힘을 제거하며 해방 이전의 관계에 기대야 하는 딜레마가 등장하는 것이다.

더구나 광주항쟁처럼 운동의 조직적인 지도부가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태는 더욱더 곤혹스럽게 된다. 혁명적 흐름에 의해 지워진 기존 질서의 요소들이 새로운 질서의 조직화를 자임하고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홍남순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이를 아주 잘 보여준다.

21일.....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깨진 유리조각, 부서진 차, 총을 가지고 다니는 시민,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걱정을 했어요. 22일부터 광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습활동에 나섰어요.....여야를 총동원하고 사람이 죽으니 의사도 불러야 합니다.....변호사도 부르고, 신문사/방송국도 불러야 해요. 그러자면 돈이 있어야 하니 사업가도 부르고, 군인/경찰/관리 다 불러 함께 수습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얘기하자 모두들 내 말이 맞다고 했어요.(현사연, 197쪽, 홍남순 증언)

실제로 공수부대가 철수한 다음날, 공수부대로부터 피로 탈취한 도청에서 새로운 질서의 조직자를 자임하며 나선 것은 부지사와 "목사, 신부, 변호사, 관료, 기업주 등" 기존 질서의 지배자들이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수습대책위원회'였다.¹⁰⁾ 이전에 대중적 구성체에 의해 지워졌던 지위와 이름이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조직하는 원리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지워졌던 이름과 지위, 신원을 드러내고, 그것에 따라 '주어진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게 된다. 다음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들에게 학생증을 보여주며 도청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 도청에 들어가서는 지휘자부터 찾았다. 젊은 청년 한 명이 나왔다.....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제서야 재수생이라고 고백했다. 그가 바로 김원갑이다. '이 문제는 재수생이 앞장서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대학생이 먼저 민주화시위를 했고 지금의 상황도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수생이 내가 책임자로 일을 수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학생지도부가 정식으로 구성될 때 까지 내가 일을 맡아보마.'.....학생대표가 되었다.(현사연, 203쪽, 김창길 증언)

10) 황석영, 앞의 책, 141쪽.

22일 이전에는 광주의 리더들에게 지위나 신원을 묻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재수생'이 문제가 되고, '대학생'이 나타나 권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광주항쟁의 기간 동안에는 누나 집에 피신해있던 김창길이 '대학생'을 표시하는 증명서로써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던 사람에게서 지도적 지위를 빼앗고 자신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지도자'가 된 것이다. 22일 이전에는 지위지고 필요하지 않았던 이름이 사람을 신뢰하는 조건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22일 이후 광주에 최초로 나타난 조직화시도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혁명의 성과를 남기려는 방어전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광주의 대중-구성체가 없었던 것 마냥 되돌리려 했다. 22일 도청 수복 후 초기에 등장한 두 개의 조직체(시민수습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모두 '수습'이라는 명칭을 걸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단지 '수습위원회'에 한정된 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가령 건달이었지만 시위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조성환의 증언에서 보듯이, 지위나 이름의 확인은 적지 않은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지위와 이름의 회복, 그것은 이름을 지움으로써 가능했던 폭발적 움직임이 점점 사라짐을 의미한다. 전옥주의 구속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그때까지 대중운동을 지도한 명실상부한 지도자였던 그가 갑자기 신원을 의심받고 빨갱이로 몰려 시민들 자신에 의해 구속된 것이다.

그러나 22일 이후의 사태를 이러한 측면만으로 이해한다면, 사태를 너무도 단순화하는 것이고, 혁명적 투쟁을 끝어온 대중적 구성체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당장 투쟁해야 할 적은 가시적인 영역에서 사라졌지만, 거대한 투쟁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감응적 구성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이전 시기와의 감응적 연속성 속에서, 도청 분수대 앞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중집회가 그것이었다. "이들의 분노와 상황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분명하고 올바른 것이었으며, 도청 안의 수습대책위원회의 초론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분수대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공감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었다."¹¹⁾ 이는 '시민결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정례화되어 두 번째 국면 내내 지속되면서 대중적 구성체나 혁명적 투쟁을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수습위원들을 규제하는 장치가 되며, 항쟁파가 수습파를 공략하고 약화시키는 토대가 된다. 예를 들면

부지사 정시체가... "광주 시민 단결합시다"고 2번 외치자 2번 모두 시민들이 따라 외쳤다. 다시 "광주시를 보호합시다"하자, 정적이 흐른 뒤에 단상을 향해 병 한 개가 날아갔다.(현사연, 701쪽, 장세경 증언)

정시체 부지사가 장휴동 씨와 같이 분수대 위에 올라가 "총기를 무조건 반납하고 투항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시민들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장휴동 씨가 연설할 때 나는 분수대 위로 뛰어올라가 마이크를 뺏어들고 울부짖었다.....그들은 모두 쫓겨 내려가고 도청 앞 광장은 성토장으로 변했다.(현사연, 206쪽, 김종배 증언)

보호를 앞세워 광주를 정상화하려 시도한 기존의 리더 정시체 부지사에게 병이 날아가고, 적절한 대책 없이 무기를 반납하자고 주장하던 장휴동은 마이크를 빼앗긴다. 결기대회는 명망가들이 아닌 이름 없는 민중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비-인칭적 특이성을 갖는

11) 황석영, 앞의 책, 144쪽.

흐름의 구성체였으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집단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감응과 리듬의 구성체'였다. 22일 이후 해방광주는 이처럼 이전 시기 대중적 구성체의 감응을 이어 계속 투쟁하려는 힘과 그 대중적 구성체를 무화시키고 광주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힘이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이룬다.

2) 감응의 연속성과 단절

그런데 실제 진행된 사태는 이보다 더 복잡하게 꼬여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5.18 이전부터 5월 18일의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운동이나 광주지역의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22일 이후의 상황을 기존의 지배계급이나 지도적 인사층의 수습위원회와 대중적 구성체의 대립을 통해 이해하려 한다면, 사회운동권이나 학생운동권의 리더들이라면 의당 지도적 인사층의 수습위와 반대로 투쟁적인 입장에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던 조비오, 송기숙, 명노근 등은 양심적 민주인사였고, 광주 운동권의 지도자들이었으나 수습적 수습의 논리로 일관하였음은 잘 알려진 바다. 학생수습위원회의 경우에는 대개 학생운동권 출신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온건파' 내지 '투항파'로서 사실상 지도층 인사들의 수습위와 훨씬 더 가까웠다. 그리고 기존의 조직력과 운동경험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했기에 사태는 훨씬 더 어렵게 꼬여갔다.

학생운동권이나 사회운동권의 운동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그간의 투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고 갔을까? 무엇이 운동권 활동가들을 투항파와 항쟁파로 갈라놓았던 것일까? 항쟁파와 온건파를 갈라놓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21일까지 투쟁과정에 참여했는지 아닌지, 그 거대한 대중적 구성체가 만들어낸 혁명적 감응을 경험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었다고 보인다. 즉 그 투쟁의 감응, 흐름의 감응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 감응에 의해 투쟁을 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투쟁이란 무모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피해나 희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감응의 차이를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은 MBC방송국의 화재에 대한 다음 두 사람의 증언이다.

곧 MBC방송국의 2층, 3층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순식간에 까맣게 그슬렸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수많은 시민,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전두환은 물러가라', '독재타도' 등을 외쳤고, 뒤늦게 달려온 소방차는 시민들의 환호성에 접근도 못하고 모두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현사연, 663쪽, 김용철 증언)

'아아! 불이 타오르는데도 이 어둠의 거리여, 이 질곡의 세상여, 언제쯤 어둠이 짝 벗겨진 광명한 천지가 오려는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마음으로는 줄곧 기도를 하고 있었다.(현사연, 188쪽, 조비오 증언)

MBC방송국의 화재는 그것이 잘했건 잘못했건, 혹은 방화건 아니건 21일까지의 국면에서 주요한 사건이었다. 김용철의 증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고양감에 들뜨게 만들었다. 하지만 20일까지 대중적 흐름의 구성체에 참여하지 못했던 조비오 신부에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었

다. 그는 시위대의 행동도, 환호하는 그들의 감응이나 감정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광주에 대중적 구성체는 기쁨과 해방의 고양감에 가득한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질곡의 세상'이자 '어둠의 거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비오 신부가 해방광주 국면에서 온건파가 되어 '수습'에 주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는 다만 조비오 신부나 몇몇 사람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현대사료연구소에서 나온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서 <1.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학생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장은 각종 수습위원회와 항쟁위원회 참여자와 22일 이후 도청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증언을 실고 있다. 총 48명의 증언이 실려 있는데, 그들의 성향과 18일부터 21일까지의 활동상황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표 212>와 같다.

<표 2> 도청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성향과 18일~21일까지 활동 상황 분류

	활동없음	소극참여	적극참여
항쟁파(총 21명)	0명	2명	19명
온건파(총 18명)	12명	4명	2명
혼합형(총 9명)	1명	3명	5명

이 표에서 보듯이 항쟁파는 대부분이 18일부터 21일까지 투쟁에 적극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온건파는 반대로 대부분 그 시기에 활동이 없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 사실 대중들이 무기를 들고 국가의 군대와 대결하겠다는 것은 통상적 감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하고 어이없는 태도다. 18일부터 21까지 진행된 투쟁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감응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태도, 그 감응이 바로 공수부대를 몰아내고 광주를 해방구로 만든 것이다. 시위나 투쟁이 총을 들고 직접 무장을 하는 사태는 매우 드문 것이다. 광주시민들의 경우에도 총칼과 장갑차 앞에서 맨손으로, 혹은 몽둥이나 차량으로 대항하다가 군대가 발포하면서 그에 대항하기 위해 총을 들게 된 것이다. 발포 행위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 아마도 투쟁은 거기서 소강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참혹한 죽음을 넘어선 이 거대한 감응적 구성체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굴복하기보다는 대항하기 위해 총을 찾아나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이 총을 든 과정은 어떤 비약이나 과장도 없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총이라는 살상무기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 단절이나 깊은 골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연히 총에 접한 사람은 총을

12) 이 분류는 통상적인 분류와는 조금 다르다. 통상적인 분류는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소속인 사람들을 항쟁파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온건파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런 분류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좀더 넓은 범위의 분류기준을 세웠다. 첫 번째 항쟁파는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소속이거나, 총기 회수에 반대했거나, 무장한 채 외곽 경계 업무를 담당했거나, 최후까지 남아 있었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다. 최후까지 남아있음이 포함된 이유는 '죽어도 저항해야 한다' 와 '일단 살아야 한다'가 당시 항쟁파와 온건파를 구획하는 주요 논점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온건파는 총기회수에 적극적이었거나, 총기와 관련 없는 일에만 종사하다 26일 도청을 빠져나갔거나, 질서회복과 수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사람이 속한다. 혼합형은 이 둘이 섞여 있는 이들도다. 18일~21일 활동분류에서 활동없음은 게임군을 피해 피신했거나 방관한 이들도다. 적극참여는 시위대에 여러 형태로 합류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거나, 무장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다. 소극참여는 방관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참여로 분류할 수 없는 이들도다.

들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들었을 뿐이며, 상황에 따라 누구든 총을 들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이러한 사태, 이러한 감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든 대중이란 너무도 멀고 위협스런 존재였을 것이고, 머지 않아 닥쳐올 군대의 무력 앞에 무모하게 노출된 비합리적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필사적으로 말리려고 했던 것일 게다.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충심이었을 것이다. '공수부대를 몰아냅시다' 대신 '이성을 회복합시다'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1일까지의 혁명적 감응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심은 이전에 자신들이 겪어온 모든 것을, 거대한 기쁨과 열정으로 받아들였던 그 모든 감응을 포기하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권유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항쟁파와 온건파의 차이는 도덕성이나 이성적 판단의 차이라기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표상적 감응의 차이였다. 온건파가 자신이 관여했던 항쟁 이전의 감응에 따라 무모한 죽음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면, 항쟁파는 대중적 구성체를 형성했던 그 강렬한 감응을 해방된 광주의 재조직화에 강하게 반영하려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온건파가 처음부터 상황을 막강한 무력 앞에서 패배와 죽음이 예견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저항해봐야 아무런 승산이 없다. 그러니 무기를 반납"(현사연, 193쪽, 조비오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적의 공격 앞에서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이며, '피해를 늘이지 않는 것'으로 설정된다. "2천명 죽었으면 됐어,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어?"라며 항쟁파를 비판하는 송기숙 교수의 생각 역시 이와 동일했을 것이며, 항쟁파의 비난을 받으면서 마지막 날까지 도청에 나타나 고집스레 무기를 버리고 빠져나가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던 김상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항쟁의 시기와 분리된 감응의 인물들이 수습위를 장악하고 조직적인 활동의 주도권을 쥐게 된 반면, 감응의 연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오랜 기간 저지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회수에 나선다. 무기회수는 대중적 구성체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결과로 귀착된다. 22일 이후에도 혁명적 투쟁의 감응의 연속성을 가진 '비-인칭적 인물'들, 이름 없는 자들은 총을 들고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에게 총을 들고 있는 것이란 감응의 연속성 속에서 대중적 구성체의 일부로서 지속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총을 내려놓는 것이란 반대로 대중적 구성체에서 분리된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앞에 떠는 이전의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 그들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

반면 회수에 반하여 총을 계속 들고자 하는 사람도 이제는 총을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예전의 감응에서 분리되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총을 들고 싸울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상황과 대면하게 된다. 이러한 대면은 그를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을 예상하며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총을 계속 들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아무리 혁명적 감응을 강하게 체험했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패배가 분명하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

13) 이점에서 우리는 총을 들게 됨에 따라 총을 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깊은 심연이 만들어지면서 절대공동체의 일체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최정운 교수의 평가(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8)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심연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무기를 내려놓으려는 수습파의 요구 앞에서 정말 무기를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인지를 '결단'해야 했던 상황에서였다고 생각한다.

고 싸우는 비장한 비극이었다. 이런 점에서 총을 들고서도 종든 싫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온건파의 정세인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에게 다시 공포가 찾아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총을 든 사람들, 그들은 결코 흔히 볼 수 없는 비극적 영웅임이 분명하다.

결국 무기회수는 혁명적 감응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마저 대중적 구성체에 분리된 개인으로 만들었고, 그러한 분리를 모든 사람들로 확산하고 일반화했다. 총으로까지 나아갔던 거대한 자연발생적 흐름은 이제 개별화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위축되고 대중적 흐름에서 분리되게 된다. 그들을 휘감아 하나로 묶어주던 리듬이, 흐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처음 10만에 육박하던 시민들은 5차 대회에서는 5천 명 정도로 줄어든 것(현사연, 877쪽, 김태정 증언)이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항쟁과 항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무기회수로 이미 대중적 구성체가 치명타를 입은 이런 조건 위에서였다. 지도부를 장악했지만, 사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넘은 다음이었다. 따라서 광주 항쟁의 비극은 적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전사들을 거대한 대중적 구성체로부터 분리하여 개인화시키고, 그 개인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대면하면서 “때로는 패배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느끼며 목숨을 건 결단을 해야 했던 상황, 그것이 바로 고전적인 형태의 비극이 작동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율주의 입장에서 본 5.18: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조정환(자율평론)

1. 머리말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총칼이 민중의 항쟁을 영구히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청에서의 죽음은 미래의 삶을 향한 투신이었으며 실제로 5월 항쟁은 무력진압과 상황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는 힘으로 오래 살아남았다. 진상규명, 학살자처벌, 피해자 보상 등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5.18은 살아남은 사람들과 새로운 세대들의 운동(이른바 ‘5월 운동’)으로 지속되었다. 1987년 6월에 5월 운동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항쟁으로 다시 불타올랐고 7년여 전에 제기되었던 개혁의 요구를 성취했다. 그러나 그것이 5월 운동의 끝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그것은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지속되면서 한국사회 재구성의 동력으로 기능했고 전 세계적 사회운동에 상상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1997년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에 대한 불철저하고 미온적인 처벌과 동시에 5월 운동은 급격히 그 힘을 잃기 시작했다. 5월 운동은 종료되었고 이제 5.18은 기억과 기념의 문제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돈다. 매년 개최되는 5.18 기념행사의 의례적이고 관료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사실로서 증언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5월 운동은 종료되었는가? 5월 운동이 종료된 것이 사실이라면 종료된 그 운동은 누구의 어떤 운동이었는가? 그렇다면 종료되지 않은 다른 5월 운동이 남아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운동인가? 그것은 5월 항쟁의 어떤 요소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것이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문제이다.

문제를 이렇게 설정할 때, 5월 항쟁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는 흔들린다. 1980년의 5월 사건은 폭도들의 난동이었는가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었는가 민중들의 항쟁 혹은 봉기였는가? 이 문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타협적으로, 즉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법인(法認)하고 민중항쟁으로 시인(是認)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 논쟁 자체가 5월사건 속에 내재하는 균열들을 징후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항쟁’으로 종합됨으로써 이 균열은 일단 봉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집권한 개헌주의 세력에 의해 이 봉합이 5월 운동을 실제적으로 종료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전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균열들은 실재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 실제로는 봉합될 수도 봉합되어서도 안 될 성격의 것으로 커져 있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었다. 1990년대에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본격화와 심화는 1980년 5월 민중의 균열을 확대하여 더 이상 민중으로 포섭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성의 형성을 재촉했다. 그런 만큼 그것은 민중의 민주주의로는 풀 수 없는 새로

운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간과되거나 억압되었고 5월의 기념제화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 5월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역사적 재서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우선 봉합된 그 균열을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의 파장은 단순히 그 균열들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균열들에 대한 철저한 탐구는 민중이란 존재 속에 투입되어 있는 또 다른 균열에 대한 이해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 다른 균열의 발견이야말로 이미 완료된 과거로서 5월을 이해하지 않고 현재 속에 지속되는 과거이자 현재를 찢고 들어오는 도래로서 5월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것은 '다른' 5월 운동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 5월사건 속에 내재하면서 그것을 아래로부터 규정한 역량, 즉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의 항쟁 자체를 뿌리에서 추동한 역량을 발견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제정된 모든 것의 준원인¹⁾인 제한권력을 발견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제한권력을 발견한다는 것은 제정된 권력의 한계 너머를 투시하는 일을 의미한다. 제정된 권력들은 무엇을 전개하고 무엇을 봉합했는가?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배제했는가? 이 문제들의 제기를 통해 5월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우리는 5월 운동의 미봉적 종료와 박제화가 펼치는 정치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자본의 예외독재로서의 신자유주의는 5월 항쟁을 가져온 군사적 예외독재로서의 권위주의와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는 정치를 재연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면서 5월 운동을 전개해온 많은 부분이 자본의 예외독재로서의 신자유주의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전향은 우연적이고 예외적인가? 아니면 그 속에 어떤 필연성이 있는가? 5월 항쟁과 5월 운동은 권위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대체하기 위한 운동에 지나지 않았는가?

아마 그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주의를 요구한 5월 운동은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해 주는 것으로 귀착되었는가? 이러한 귀착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갈등들에 의해 구성되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5월 사건을 되돌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유신헌법에 대한 세 가지 태도와 세 가지 유형의 권력경향을 식별할 수 있다. 하나는 전두환이 이끌었던 호헌권력이다. 또 하나는 김대중과 김영삼에 의해 대표되었던 개헌권력이다. 이 둘은 제정된 권력에 기초하는 흐름으로 1992년 이후 서로 접근하고 통합된다. 5월 운동은 두 번째 권력, 즉 개헌권력의 헤게모니 속에서 전개되었다. 개헌권력, 특히 1998년 김대중의 집권은 운동으로서의 5월 운동을 종료시키는 분기점이 된다.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흐름과 교차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가시화, 비가시화를 반복하는, 그러나 결코 두 번째 흐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세 번째 유형의 권력을 확인하는 것이며 역사에서 그것의 구성적 우선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5월 22~27일 사이에 나타났던 자치공동체에 의해 표현된 권력, 즉 제한권력이다. 이 세 번째 권력의 특성과 그것의 분화와 진화를 좀더 명백하게 묘사하는 것, 이것이 이 글의 초점이 될 것이다.

1)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옮김, 한길사, 180~189쪽 참조. 원인이 어떤 사건들을 야기한 물체적 조합이라면 준원인(quasi-cause)은 그 사건과 비물체적 인과를 맺는 다른 사건이다.

2. 신자유주의와 광주민중항쟁

노동거부와 자치를 주장한 1968혁명은 서구에서 케인즈주의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다. 자본의 금융화와 이에 기초한 자본의 전 지구적 이동(이른바 '세계화')이 서구에서 노동의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으로 구체화됨에 있어 1974년의 세계공황과 석유위기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이것은 석유달러의 금융화를 촉진하여 IMF를 거대권력으로 만들었고 아시아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달러 가치 상승, 이자율 상승, 유가상승의 3대 압력을 가하게 된다. 외채에 의지하여 급격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던 박정희 정부는 이로 인해 수익성 위기와 무역적자라는 이중의 곤란을 겪는다. 이것이 1970년대 말에 나타난 외채위기의 정체이며 국가주도의 발전주의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만든 사회역사적 조건이다.²⁾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가 취한 대응은 무엇이었던가? 1979년 4월에 나온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공격을 통해 국가주도 발전주의를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그 방책이었음을 시사한다. 그 방책의 첫 번째 부분은 임금인하와 정리해고이며 두 번째 부분은 농산물 가격의 인하이다. 첫 번째 부분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하에서지만 고용의 안정을 경험해온 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급격한 불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농가의 소득 하락으로 농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의미했다.

주지하다시피 유신헌법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연임제한 철폐를 통한 장기집권, 그리고 긴급조치권을 통한 비판봉쇄 등을 성문화하여 박정희 일인독재를 합법화하는 것이었다. 정치체제가 과잉억압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박정희 체제를 감내하고 또 때로 협력하기도 했던 것은 발전주의적 성장이 가져다주는 최소한의 안정과 부분적인 생활 향상이었다. 그러나 발전주의의 종식과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은 성장의 이 반사효과를 사라지게 하고 삶의 질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경제안정화 시책은 자본의 안정을 위해 민중에게 불안정을 강요하는 적대적이고 불균형적인 시책이었기 때문이다.

즉각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저항이 폭발했다. 그 저항의 선봉에 여성이 섰던 것은 1960~70대의 산업이 경공업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었고 이것이 여성 노동력을 이용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대표적 투쟁인 1979년 4월 YH 노동자 투쟁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폐업에 맞선 여성들의 투쟁이었다. 또 이 이행기에 군수산업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군수산업이 집결되었던 경상 남부지역에서 저항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에서 시작되어 인근 마산창원으로 확산된 부마항쟁이 그것이다. 이 일련의 투쟁들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는 뇌관이 되었다. 정리해고와 폐업에 대항하는 투쟁은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던 광업에서도 폭발했다. 1980년 4월 사북과 고한에서 전개된 광산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것이다.

이 다양한 투쟁들의 요구는 경제적 요구들에 기초하면서도 점차 유신헌법 철폐라는 정치적 요구로 모아졌다. 이로 말미암아 박정희 정부의 붕괴라는 상황에서 호헌인가 개헌인가 제헌인가를 둘러싼 투

2)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공감, 24~33쪽 참조

쟁이 핵심적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은 유신헌법의 철폐가 너무 때 이른 요구라고 평가하면서 12.12 호헌 쿠데타를 주도한다. 국가주도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을 보장할 법적 무기로 유신헌법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유신헌법의 수호, 즉 호헌은 이미 신자유주의를 의미하게 된다.

다중이 새로운 헌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 일파가 호헌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평화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폭력적 억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미국이 동조하고 있었음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요컨대 “한국인들은 정치체제의 자유화를 원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경제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었다.”³⁾ 미국이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배후에서 재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광주항쟁이 진압된 지 3일 후인 1980년 5월 30일 글레이스틴 대사는 미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네이션스 비즈니스> 6월호에 보낸 기고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의 급성장에서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경제로 변모할 것”이며 “한국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는 강력한 중앙통제 경제에서 시장의 힘에 의지하는 자유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⁴⁾ 이 기고가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광주에서의 항쟁이 시민군의 무장봉기로 전환된 날인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한국의 계엄군이 광주 항쟁을 무력 진압하는 문제를 승인했다. 군사적 결정이 이루어진 바로 이 자리에서 반핵운동으로 인해 갈 곳을 찾고 있던 미국의 핵발전 설비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을 확장하는 것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존 무어 미 수출입은행장이 이 해 6월에 방한하는 문제도 승인했다. 이 회의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 즉 자본의 계급투쟁의 문제임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 몇 시간 뒤인 5월 23일에 서울의 글레이스틴 대사는 박충훈 총리에게 ‘단호한 폭동진압 조치’를 취할 것을 충고한다. 그리고 워싱턴의 호딩 카터 국무부 대변인은, 카터 행정부가 ‘남한에서 안정과 질서의 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며칠 뒤인 5월 31일 카터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이익이 때로는 인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⁵⁾ 자본의 안정, 자본주의 국가의 안보와 질서, 자본가의 수익이 인권보다 우위에 서는 일이, ‘때때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기초원리이자 항상적인 사태라는 사실을 여기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도청에서 학살당한 민중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존 무어 수출입은행장은 서울을 방문해 미국의 전력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기술을 한국에 팔았다.⁶⁾ 캘리포니아 지역 농업 관련 산업은 남아도는 쌀 64만4천 톤을 팔면서 톤당 1백 달러씩 가격을 올렸다. 당시 한국으로 밀고 들어온 미국 상품이 원자력과 쌀에 그친 것만이 아니다. 아메리칸 홈 인슈어런스 그룹과 판 아메리칸 항공 또한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⁷⁾ 이러한 사태진전을 볼 때 “미국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 축적구조가 한국

3) 출판되지 않은 카치아피카스 발제문 「신자유주의와 광주민중항쟁」의 요약문,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71> 참조(강조는 인용자).

4) 같은 글(강조는 인용자).

5) 같은 글(강조는 인용자).

6) 미국원자력학회 한국지회장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거친 이중재에 따르면, 한국에 원전이 도입된 것은 1978년 고리 1호기 때부터다. 그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원전을 도입하게 됐다. 당시는 원전 기술력이 전혀 없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모두 전수받았다.”고 말한다. <http://blog.hankyung.com/ksk3007/18760>

에서 시작된 것은 바로 1980년 광주항쟁의 진압이었다.”는 카치아피카스의 진단은 광주에서의 학살과 항쟁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부가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도입한 것을 고려하면 광주항쟁에 대한 진압이 신자유주의의 ‘시작’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무력 진압이 신자유주의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통과절차였음은 분명하다. 광주의 민중들은 표면의식에서는 권위주의 정부, 유신헌법, 계엄군에 대해 싸웠지만 몸과 정동으로는 이미 신자유주의화에 맞서 싸우는 전위투사로 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중을 넘는 새로운 주체성으로 생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3. 1980년 5월 전후 호헌의 논리학과 그 실천

앞서 말한 것처럼, 박정희 정권의 붕괴 이후 유신헌법과 발전주의 독재에 대한 세 가지의 입장과 태도가 나타난다. 호헌과 개헌과 제헌이 그것이다. 호헌적 입장은 전두환에 의해 대표되었고, 개헌적 입장은 김대중, 김영삼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렇다면 제헌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이 과연 있었는가? 제헌적 입장의 비가시성은 그것이 부단히 개헌적 입장에 의해 대의되고 또 그것으로 환원되곤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생운동조차도 기본적으로는 개헌적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부산, 마산, 사북, 고한, 광주의 민중들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의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면 즉각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딱지가 달라붙곤 했다. 제헌적 입장은 바로 폭도들의 난동으로 불리는 이 직접행동적 우발점들에서 간헐적으로 가시화되곤 했던 것이 아닐까?

유신체제는 이중의 의미에서 독재적이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부르주아지의 계급독재였을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적 입헌주의의 원리들, 특히 권력분립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독재적이었다.⁸⁾ 이러한 체제의 유지를 위해 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최고의 권력집단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이 이중의 독재체제는 일종의 내전질서이다. 여기에서는 전쟁이 정치를 대신하며 예외가 일상으로 된다. 계엄과 긴급조치는 유신체제의 이 전도된 상황을 합법화해주는 것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헌법의 중심에 공백이 생기자 11월 2일 군부의 상층급 장성들은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방부에서 비밀회합을 갖고 박정희 독재체제의 법적 근거로 되어온 유신헌법을 폐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⁹⁾ 이때 유신헌법의 조기폐지에 반대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었다.¹⁰⁾ 유신헌법의 폐지와 개헌을 통한 민선정부 수립의 노선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으로 대표되는 당시 군부의 주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호헌적 입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역관계를 강제적으로 뒤엎는 것, 다시 말해 군사 쿠데타였다. 마침내 12월 12일 좌천설이 나돌고 있던 전두환은 하나회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강경파를 포섭하여 개각을 하루 앞두고 기습적인 쿠데타를 감행한다. 그러나 이날의 쿠데타로 국가권력 전체가 호헌적 입장의 수증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12.12는 구직업주의자 중심의 고위장성을 배제하고 하나회 중심의 신직업주의자 중심의 소장 장

7) 카치아피카스, 앞의 글.

8) 칼 슈미트, 『독재론』, 김효전 옮김, 법문사, 1996, 17쪽.

9) 5.18기념재단 엮음, 『5.18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심미안, 2007, 14쪽.

10) 같은 책, 14쪽.

성들이 군권력을 장악한 사건으로, 이후 전개될 일련의 다단계 쿠데타의 첫 번째 단계였다. 1980년 4월 14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함으로써 국내의 정보권력을 독점하는데, 이것이 집권을 위한 쿠데타의 두 번째 단계였다. 셋째 단계는 5월 17일 전두환의 측근을 중심으로 소집된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괴남침 위협 주장에 근거하여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임시국무회의에서 강제적으로 통과시켜 권력을 실질적으로 신군부의 휘하에 둔 것이다. 5월 22일 신군부는 미국의 승인하에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을 승인된 공권력으로 정립했는데 이것이 쿠데타의 네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되고 8월 16일 최규하를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야시킨 후 9월 1일 직접 대통령 자리에 올라 행정권력을 장악한다.¹¹⁾

이 일련의 과정이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미국이 바라고 또 승인했던 바의 과정이었음은 앞에서 말했다. 한국에 신자유주의는 자유와는 정반대의 것, 즉 계엄과 독재의 폭력적 연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군부 우위의 전쟁질서를 지속시키는 것(권위주의)이 표면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발전(신자유주의)과 모순되는 듯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시장이 국내시장보다는 직접적 세계시장을 의미하는 한에서, 그리고 시장으로의 신자유주의적 권력이동이 바로 국가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국가권력과 신자유주의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정치에서의 독재가 경제에서의 자유화의 이면이자 조건이었던 셈이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박정희가 시작하였으나 일시 중단되었던 경제안정화 시책을 계속한다. 이중적 의미에서의 정치적 독재는 경제적 자유화와 긴밀히 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했다. 경제 자유화가 곧 자본에게 무한정의 축적과 착취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이후의 시책들을 통해 입증된다. 대외시장 개방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은 한국으로 자유롭게 유입되었고 한국시장은 세계시장의 일부로 뚜렷이 편입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3저(유가, 물가, 금리)라는 우연한 조건들과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은 호황을 누리게 되고 전두환 정권은 군사적이고 전쟁적인 예외지배에서 정치적인 정상지배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것이 1983년 말부터 1985년까지의 정치적 유화국면을 규정짓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유화국면은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지배를 가능하게 만들기보다 그에 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운동을 사회 전체에 넘쳐흐르게 했다. 이에 호헌적 입장은 야권 일부와의 야합을 통해 내각제 개헌이라는 준호헌적 보수대연합을 시도했으나 1987년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대중적 도전에 직면하여 실패하고 4.13 호헌조치라는 반동으로 기운다.

4. 개헌의 논리학과 그 실천

그렇다면 1980년 5월 전후에 개헌의 논리와 실천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앞서 말했듯이 개헌적 입

11) 이와 같은 다단계 쿠데타론은 손호철 「광주민중항쟁의 재조명」, 마크 피터슨 「광주는 전두환 집권의 다단계 쿠데타였다」, 정해규 「광주민중항쟁 연구」, 이상우 「군부와 광주와 반미」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5.18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127쪽 참조

장은 10.26 이후 일시적으로 한국 지배계급의 주류입장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개헌을 관리하기 위한 과도정부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12.12 쿠데타로 개헌입장의 주도권은 다시 호헌입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부마항쟁과 그 여파로 나타난 박정희의 죽음은 김영삼과 신민당에게 집권과 개헌의 호기로 다가왔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회의원직 제명, 가택 연금 등의 탄압을 받았던 김영삼의 신민당은 비상계엄의 해제와 과도기간의 단축을 주장하면서 집권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후보 지명문제에 몰두했을 뿐 오랜 발전주의 통치의 고통에, 설상가상으로, 신자유주의화의 고통까지 겪고 있던 민중의 불만과 해방에의 요구를 대의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결국 김영삼은 전두환이 주도한 일련의 쿠데타에 밀려 제5공화국 정권 하에서도 가택 연금과 정치적 탄압을 면하지 못한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망명, 구속, 연금 등을 겪으면서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던 김대중은 1980년 3월 1일 복권된 직후 “나는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결코 대통령 후보 지명경쟁에 뛰어들지 않겠다. 우리는 우선 민주주의를 다져야 하며 대통령 후보 지명문제는 잠시 미루어 놓아야 한다”¹²⁾고 하여 민주주의 문제를 당시의 핵심 의제로 제기한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유신독재에 대항한다는 것, 부르주아 입헌주의를 회복한다는 것, 다시 말해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것을 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달성할 다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개헌적 주장도 역시 전두환의 단계적 쿠데타에 밀려 어떠한 기회도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김대중은 광주민중항쟁을 김대중의 내란음모사건으로 분석한 전두환 정부에 의해 내란주모자로 몰려 사형이 선고되었고 세계 각국 지식인들의 구명운동으로 형집행 정지되어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해야 했다.

당시 개헌적 입장이 이처럼 정당이나 정치가의 수준에서만 표현된 것은 아니다. 개헌론적 정치가들에 대한 감금과 탄압으로 인해 개헌적 입장은 역설적으로 당시의 재야세력과 학생운동에 의해 대리되었다. 재야의 국민연합은 반독재-민주화를 운동의 초점에 놓음으로써 정치가적 개헌입장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어떤 민주화인가(형식적 민주주의인가 실질적 민주주의인가)를 둘러싼 분열이 재야 운동 내부에 잠복하고 있었지만 개헌입장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면 될수록 이 쟁점이 표면화되기는 어려워지고 반독재공동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계엄철폐와 유신세력 퇴진 요구가 그것이다.

이렇게 민중의 요구를 대의하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들이 자생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생활상의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시 학생들은 총학장 퇴진, 어용폭력무능교수 퇴진, 재단비리 척결, 시설 확충, 학생회 부활 및 학내언론 자유화 등의 학내요구들을 제기했다. 노동자들도 자본에 대항하여 투쟁했는데 그 투쟁들의 압도적 다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의였다. 휴폐업이나 정리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들에는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의 징후들이 짙게 묻어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처럼 생존권적이고 경

12) 같은 책, 28쪽.

제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쟁형태가 직접 정치권력과 격돌하는 격렬하고 폭발적인 모습을 띠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헌적 입장도 개헌적 입장도 민중을 대의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사북탄광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동국제강, 인천제철 노동자들의 파업도 지역적, 경찰과의 충돌, 파괴, 방화 등의 정치적 투쟁형태들을 보여주었다.

민중들의 이러한 투쟁들은 개헌적 입장과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0년 봄 서로 분열하면서 경쟁하고 있던 개헌적 정치세력들은 민중들의 이러한 투쟁을 대의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아니, 이들은 호헌세력의 탄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능력조차도 보여주지 못했다.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이 개헌적 입장은 시민수습위원회와 학생시민수습위원회의 형태로 재출현한다. 하지만 무기회수와 반납으로 시민군의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계엄군의 관용을 얻고자 한 이 입장은 계엄군의 포위와 공격 속에서 인간적 존엄을 걸고 싸우는 민중들을 설득할 수 없었고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민주시민투쟁위원회에 길을 비켜주어야 했다.

5. 제헌적 주체성의 구성과 독자화: '폭도들'의 권력

그렇다면 1980년을 전후한 상황 속에서 호헌세력이나 개헌세력으로부터 독자적인 제헌세력을 식별할 수 있는가? 호헌세력은 민중을 대의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민중을 지배하고자 했다. 그러면 개헌세력이 민중을 대의했는가? 개헌세력은 민중에 대한 대의를 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고 민중을 집권의 동력으로 동원하는 데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민중을 대의하는 일은 학생운동과 소규모의 급진적 정파운동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탄압으로 정치세력화되기 힘든 조건에 있었다. 1980년 전후 민중의 폭발적 직접행동의 원인이 이 대의불가능성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대의불가능성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직접행동들은 자율적인 것이었지만 민중들이 곧장 정치적 자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처음에 민중들은 호헌적 세력에 대한 반대와 개헌적 세력에 대한 지지(탄압과 차별의 중지)를 통해 개헌세력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대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광주민중항쟁조차도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5.18 항쟁이 5월 17일 계엄령의 전국 확대와 김대중 구속을 계기로 폭발했던 것, 그리고 민중들의 초기 요구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보여준다. 여기서도 역시 투쟁의 급진적이고 자율적인 형태와 요구의 개헌주의적 성격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발견된다.

그러나 투쟁은 점차 제헌적 능력을 더욱 구체화하면서 마침내 제헌주의를 개헌주의로부터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에서 폭발한 항쟁은 5월 22일에 이르러 분명한 두 가지 노선으로 분화된다. 하나는 시민수습위원회와 학생수습위원회(내의 협상파)를 통해 보여지는 개헌주의 노선이고 또 하나는 학생수습위원회 내의 투쟁파를 기초로 하여 이후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로 발전하는 제헌주의 노선이다. 주권이 저항하는 다중을 살 가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죽어도 좋은 존재로 취급할 때 개헌주의는 주권의 우선성을 승인하면서 관용과 선처를 구할 명분(무기회수와 반납)을 찾았던 반면, 제헌주의는 다중의 저항과 생명의 우선성을 단호히 천명하면서 저항하는 다중의 생명

을 짓밟는 주권을 무효로 선언하고 주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노선의 움직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22일 낮 12시 30분경 관료, 변호사, 목사, 신부, 기업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5.18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최한영)가 구성된다. 이들의 요구사항과 제안은 1) 사태수습 전에 군을 투입하지 말 것 2)연행자 전원석방 3)군의 과잉진압 인정 4)사후 보복 금지 5)부상자, 사망자 전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6)전일방송을 즉시 재개하여 사실을 보도할 것 7)이상의 요구가 관철되면 무장해제한다 등 일곱 가지였다.¹³⁾ 이 요구사항들은 항쟁이 발생하게 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인 원인의 해결보다 더 이상의 피해발생을 제거하고 사태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없애고 상처를 치료하지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이 요구사항들을 관통한다. 여기에는 '계엄철폐'나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과 같은 5월 18일 항쟁 초기의 개헌적 요구들마저도 들어 있지 않다.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는 공포이며 그 요구들의 성격은 주권의 관용에 대한 호소이며 그 목표는 계엄군으로 표현되는 주권권력의 과잉에 대한 비판을 통해 주권을 순화하는 것이다. 이 개헌주의적 흐름은 민중항쟁을 기존의 제정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압력 도구로 사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기존 권력을 합법적 주권으로 승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군의 무장에 대한 도덕적 부정을 통해, 거리의 다중들은 시민이 아니라 폭도이며 그들의 행동은 저항이 아니라 난동이라는 주권의 지각양식을 정당화해준다. 개헌주의는 이미 인간이 아닌 자들의 목소리, '주권은 죽었다'는 그들의 초인적 부르짖음의 정치적 새로운 해독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투쟁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공포에 기초한 개헌주의의 득세는 투쟁의 예봉을 꺾고 그것을 기울게 만드는 것으로 기능했다. 관용에 대한 호소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선무장해제를 주장하는 계엄군의 요구만이 받아들여져 적지 않은 무기들이 회수되고 반납되었기 때문이다. 개헌주의는 이렇게 투쟁의 기운을 꺾으면서 일반수습위원회와 학생수습위원회로 분화, 확대된다. 일반수습위원회는 계엄군과의 협상과 대중에 대한 설득을 담당하고 학생수습위원회는 실질적 대민업무를 담당했다. 수습위원회는 이제 일종의 하위정부로서 시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위치짓는다. 시민군으로 결집된 시민들은 결코 권력 주체로 될 수 없고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계엄군이 진압을 위한 총정작전을 구체화한 후 한미간에 진압의 일시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수습위원회는 5월 23일까지 전체 무기의 절반수준인 2천 5백 여 정 of 카빈소총, M16, 권총 등을 회수했다.¹⁴⁾

그러면 무엇이 이 개헌주의의 득세를 저지하고 흐름을 역전시켜 제헌주의의 주도성을 살려냈던 것일까? 흐름을 역전시킨 과정에서 박남선, 윤상원 등 특이한 개인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박남선은 골재를 채취하는 차량운전수로 유동 삼거리에서 200여명의 시민군을 조직한 후 시민군 상황실을 맡고 있었다. 그는 수습위원회의 회유에 의한 무기반납 움직임에 맞서 자신의 허락 없이는 무기를 내주지 말라는 무기반출금지명령을 내린다.¹⁵⁾ 학생운동 출신으로 들불야학을 통해 노동운동에 투신한 윤상원은 수

13) 같은 책, 177쪽.

14) 같은 책, 180쪽.

15) 송기숙 교수의 회고록에는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날이면 혹시 나올지 몰랐던 학생회 간부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달리 지도부가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제 불었던 임시라는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점을 의논하기 위해서 조용한 데가 없느냐고 했더니 그들은 도청 별관 지하실이 좋다고 했다. 당시 어마어마하게 소문이 났던 폭약이 쌓여 있던 곳이다. 학생

습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가라앉고 있던 투쟁을 다중들의 총의회의인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를 조직함으로써 다시 고조시켜냈다. 또 윤상원은 항쟁기간 동안 투사회보를 제작하여 투쟁의 의지를 결집시켰고 내외신 기자들에게 투쟁의 대의를 설명해 냈다.

이 특이한 개인들의 활동이 시민군에 내재하던 제헌적 잠재력을 기폭시킴으로써, 광주의 '폭도들'은 수습위원회의 개헌주의적 흐름에 의한 투쟁의 침식을 극복하고 호헌파에 맞설 힘을 만회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는 23일부터 매일 오후 2시 시민들과 민중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정치적 집단지성과 집단의지를 생산하는 다중 자치의 공간이 되었다.¹⁶⁾ 그리고 박남선이 지도한 시민군은 시민들이 스스로를 권력주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군사 조직으로 기능했다. 이렇게 하여 도청에 자리잡은 민주시민투쟁위원회는 이른바 '폭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혁명적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어갔다. 1980년 봄에 정치가적 및 시민운동적 개헌주의 세력 아래에 잠복하여 활

수습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김동원 교수도 같이 갔다. 그곳은 어둡침침해서 폭약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무더기만 크게 보였다. 두어 트럭 분량이었다. '임시' 문제는 간단하게 결론이 났다. '임시'를 떼어버리고 그대로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박남선이라는 사람이 따로 상황을 설치했는데, 우리 말을 잘 듣지 않으니 그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도록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나는 예상대로 생각 것이 생겼구나 싶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거기까지는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어떤 사람인데?" "꽤 열심히 싸운 사람 같은데 자기 동생이 이번 싸움에 죽었다는 것 같습니다." "직업은 무엇이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별로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권총을 차고 다니며 설치합니다." "한번 만나는 보겠네마는 거기까지는 내가 깊이 관여하기 곤란할 것 같네. 그러나 총들은 하지 말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만"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자 학생들은 기대에 어긋난 것 같았으나 나는 나대로 시민군 지도부를 학생들이 맡아야 한다는 점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으므로 그들 사이에서 해계모니가 자연스럽게 조정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다소 총들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 운동의 기본 흐름에 따라 올바른 지도부가 탄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렇게 되면 나는 여태 느끼고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박남선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한번 만나보고 싶었으나 그가 어디를 가고 없어 그때는 만나지 못했다."

(<http://altair.chonnam.ac.kr/~cnu518>, 강조는 인용자)

16) 당시의 직접민주주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이러하다: "노동자, 시민, 학생, 가정주부 등 각계각층 사람들이 분수대 위로 올라가 계엄군의 만행을 성토하고 앞으로의 수습대책을 토론했다. 또한 그때 파악된 피해상황이 보고되었으며 장례준비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http://altair.chonnam.ac.kr/~cnu518/data/data1_42.html) 또 다른 기록: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부터 운집한 5만여 군중이 도청앞에서 전두환 화형식을 비롯한 성토를 시작하며 대대적인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 결기대회에서 어느 한 서점에서 제작한 전두환 화형식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 대회에는 계층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참가하였다. 대회가 한창 진행중인 16:30분 경부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시민들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비를 맞으면서 대회를 지켜보았다. 한편 계엄분소에 다녀온 수습위는 계엄사측으로부터 약속 받은 8개 사항을 인쇄한 '계엄분소 방문협의 결과보고서'라는 전단을 배포하였다. (중략) 시민수습대책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생, 청년들에 의해 '제2차 민주수호 범 시민결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 이름을 결기대회라는 딱딱한 용어를 피해 '자유성토포대회'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대회는 도청 광장과 금남로 그리고 인근 도로를 꼭 매운 1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피커 소리가 끊기기도 했는데, 주최측은 도청에서 방해한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결기대회 도중 마이크가 자꾸 꺼져버렸다. 그때는 앰프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기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정보원이 도청으로 들어가 방송시설을 분해해서 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http://www.v518.org/sub3/03-04.html>)

동하던 제헌주의 세력이 분명한 형태를 갖고 나타난 것이다.

6. 제헌권력의 양상과 특징

마침내 자신을 권력주체로 구성한 광주의 '폭도들'은 누구였는가? 5월 21일 최초로 편성된 120명의 시민군 대부분은 공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목공, 구두닦이, 웨이터, 일용품팔이 노동자들이었다. 예컨대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은 골재채취 차량 운전사였으며, 기동타격대장 윤석루는 자개공이었고, 경비대장 김화성은 식당종업원이었다. 특히 기동타격대의 경우 영세기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무직자가 23명으로 전체 82%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학생 2명(7%), 중산층 2명(7%), 농민 1명(4%)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⁷⁾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한 충정작전 개요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충정작전 개요에는 작전이 행사되는 두 가지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첫째는 소요이고 둘째는 폭동이다. 소요는 "학생 및 사회 집단이 의사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법질서가 위협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여기서 위협되는 법질서가 유신헌법에 기초한 법질서임은 물론이다. 이 때 진압책임은 경찰이 지며 작전은 수세적 저지에 머문다. 설득과 봉쇄 및 저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작전의 목표는 소요의 확산 방지와 자진 해산이다. 이 때 사용하는 장비는 방석모, 방석복, 방패 등 자기보호를 위한 것들이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 경찰이 아니라 계엄군이 파병되었고 방석모, 방석복, 방패 등이 아니라 장갑차, 헬기, 기관총 등이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광주의 항쟁주체들이 소요 행위를 하고 있는 '학생 및 사회 집단'으로 파악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계엄군은 광주항쟁을 둘째의 경우, 즉 폭동으로 파악하면서 작전을 전개했다. 그러면 충정작전 개요는 폭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폭동은 "다중의 집단이 사회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도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진압책임은 군과 경찰이 진다. 작전의 성격은 공세적이며 작전의 목표는 분쇄와 주모자 체포를 위한 돌격, 와해, 재집결 불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화기를 최대한 이용하며 와해 후 체포를 위해 진압봉을 휴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¹⁸⁾

소요를 일으키는 학생 및 사회집단은 그 행동이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국민/민중이다. 이들은 치안의 대상이지만 전쟁과 살상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폭도화한 다중의 집단은 어떠한가? 이들은 법질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으로, 즉 설득을 통해 법질서 속에 다시 포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체포하고 분쇄해야 할 대상으로, 즉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된다. 위험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 집단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법질서로 포섭될 수 있는, 다만 비정상적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인 민중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치안의 대상이기보다 전쟁과 살상의 대상이다. 어느 누구에 의해 대의되지도 못하며 현존하는 법질서와 주권질서의 외부로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 이들은 이미 민중이 아니라 다중이다.

17) 이정로,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 『노동해방문학』 1989년 5 월호

18) 1988년 11월 11, 14, 15일의 광주특위 문서검증 시 국방부 제출 자료인 <충정부대장 회의록>. 5.18 기념재단, 앞의 책, 428쪽에서 인용하여 재구성함.

항쟁의 과정에서 민중들은 다중들로 전환된다. 시민상태가 자연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야 할 것은 이 자연상태로부터이다.¹⁹⁾ 광주의 다중들은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거부한다. 병역과 세금을 거부하며 자신들을 분명한 제한적 주체성으로 명명한다.²⁰⁾ 투사들이 된 이 다중들은 스스로를 투쟁적 자치의 주체로 구축한다. 광주에 투쟁과 삶의 공동체가 출현한 것은 다중이 자신을 제한적 주체성으로, 내전의 주체로 구축한 바로 이 순간이었다.

계엄군과의 전쟁을 위한 협력은 분업적으로 전개된다. 청년들이 전위에서 계엄군과 맞서 싸울 때 여성들은 보도블록을 공급하며 공사장 인부들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구해온다. 젊은 여성들은 다친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와 간호를 담당하며 아주머니들은 김밥, 주먹밥, 음료수 등을 준비한다.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죽음과 주검 그 자체를 통해 계엄군과 국가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산 자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공동체의 감정을 생산한다.

카치아피카스는 투쟁을 통해 형성된 이 공동체를 코원으로 부르면서 1870년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 코원이 등장했다고 해석한다.

지난 2세기동안 민중들의 자발적 통치능력을 보여주는 두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871년의 파리코뮌과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이다. 파리와 광주에서 비무장 시민들은 각자의 정부에 맞서 도시의 통제권을 장악하였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려는 중무장세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민중권력을 유지하였다. 봉기한 수만 명의 민중들은 전통적 형태의 정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체한 민중권력의 기관을 창출하였다. 해방의 시기동안 범죄율은 급감했고, 민중들은 그 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대와 연대의식을 서로에 대해 느꼈다.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군이 수도인 파리를 점수하려 이동하자 파리코뮌이 일어났다. 프랑스 정부의 무기력한 항복과 프로이센의 진무 공작에 파리 시민들은 격분했고, 3월18일 파리 국민방위군(National Guard)이 상대적 무혈쿠데타를 통해 파리의 통제권을 장악했다. 정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코뮌 전사들은 프로이센 정복자들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군에 맞서 70일간의 항쟁을 계속했다. 그들은 파리 방어와 일상생활을 관리할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했고, 선출된 민중의 대표들은 해방된 도시를 통치했다. 마침내, 압도적 군사력으로 봉기는 진압되었고, 수천 명이 "유혈의 1주일"로 불리는 시가전에서 전사했다. 군대의 화력이 수십 배나 증가된 한 세기 후에,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다. 외국의 정복군이 도시로 진격하지 않았지만, 광주의 시민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국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정예 공수부대에 의해 광주시민에 대한 끔찍한 잔혹 행위가 벌어지자, 수천 명의 민중들이 군대에 맞서 싸워 그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냈다. 그들은 해방공간을 6일간 유지했다. 해방광주에서, 매일 열린 시민집회에서 수십 년 간 억눌린 민중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광주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했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 즉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를 창출했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파리코뮌이 진압된 같은 날인 5월27일 광주코뮌도 군대에 의해 진압당했다.²¹⁾

19) B. 스피노자, 『국가론』, 김성근 옮김, 서문당, 2001, 제2장 참조

20) 5월 21일 광주세무서 방화는 광주 민중이 더 이상 국민이 아님을 선언한 사건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정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도로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세무서 양쪽에 2명의 공수가 거중자 세로 서 있었고, 시민들이 함성을 지르며 세무서 쪽으로 몰려가자 공수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총을 쏘아댔다. 그때 세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것을 보고 흥분한 시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방을 튼튼히 해 놓으니 오히려 국민의 가슴에 총뿔리를 겨누다니! 세무서도 필요없다. 불질러 버리자고 소리쳤다. 나는 그 곳에 있던 청년들을 규합하여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군용트럭에 붓고 불을 붙였다. 나와 청년 1명이 트럭을 몰고 후진해 가다 세무서 건물 앞에서 뛰어내렸다. 세무서 건물에 불이 붙자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세무서 안에 있던 공수들이 M16을 난사했다. 주위는 총소리, 비명소리로 순식간에 이수라장으로 변했다." (구술 : 문장우, 현사연 조사),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5&page=69

카치아피카스에 따르면 파리와 광주에서 일어난 두 봉기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1.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민중권력기관의 자연발생적 등장
2. 아래로부터 무장저항의 발생
3. 범죄행위의 급격한 감소
4. 시민들 사이에 진정한 연대와 협력
5. 계급, 권력, 지위에 의한 서열의 중지
6. 참여자들 사이에 내부적 분열²²⁾

무장저항 속에서 활기넘치는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 파리와 광주의 공통점이다. 이 공동체 속에서 계급과 권력과 지위에 의한 서열이 중지되고 범죄행위가 급격히 감소하며 의사결정이 실제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주권이 소멸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범시민권력대회는 봉기한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투쟁과 자치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집단적 결정의 기관이었다. 여기서 다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적 권력주체로 등장한다. 투쟁의 휴지 시기에 개헌권력이 부상했던 것과는 달리 시민권력대회로 투쟁의 집단의지가 상승하면서 제한권력을 좀더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정운은 5월 항쟁 후기에 절대공동체가 탄생했다고 보는 점에서 카치아피카스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그렇다면 항쟁의 전기에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는 절대공동체의 탄생 이전에 전통적 지역공동체가 투쟁을 이끌었다고 본다.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 광주의 공동체는 거리에서 싸우는 각 시민들에게 내재해 있는 것이었다. 전통적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 싸움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다."²³⁾ 기존의 지역공동체는 무엇에 기초한 것이었는가? 첫째 상공업의 발달이 뒤진 광주 지역에서는 외지 인구의 유입이 거의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농촌공동체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로 저개발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담장이 없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높았다. 셋째 장기간 지속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상대적 차별을 겪고 있음으로 차별당하는 집단으로서의 저항감과 결속감이 더 높았다. 광주에 이미 있던 이 지역공동체가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것이 5월 18일 항쟁을 기폭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시동은 지역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이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 행위가 공동체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인식되고 공동체 전체가 공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공동체는 그것이 기존 질서의 일부인 만큼 한계 또한 갖고 있다. 지역의 민중적 공동체는 현재의 차별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기존 질서 속에서 더 나은 지위를 획득하고 주권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을, 그리고 주권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는 새로운 삶을 생산하는 공간이라기보다 기존의 것을 보존하고 방어하고 확장하려는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그것은 지역의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 즉 유력인사들

21) 조지 카치아피카스, 「파리 코뮌과 광주민중항쟁」, 기관지 『노동자의 힘』 54호

22) 같은 글.

23) 5.18 기념재단, 앞의 책, 263쪽.

이나 지식인들에 의해 커다란 영향력을 받는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는 개헌주의적 흐름에 쉽게 동화된 다. 22일 전후 발생한 시민수습위원회가 신부, 목사, 교수, 지역관료 등의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꾸려졌고 이어 민중들의 상징적 대의자들로 여겨졌던 학생들에 의해 학생수습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층의 민중들 자신은 최일선에서 싸웠음에도 수습위원회의 수습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지역공동체가 자신을 방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수습위원회에 무조건적 투항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낡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계엄군이었다. 전두환의 계엄군은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강제했다.

다르게 살도록 강요당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적절한 변용능력을 발휘했는가? 지역공동체의 중심부위가 아니라 그것의 주변부위, 즉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노동자들, 막노동꾼들, 운전수들, 식당 종업원들, 중국집 배달부들, 어쩔 수 없이 무직으로 지내는 실업자들, 건달들, 여성들, 가정주부들.²⁴⁾ 이들도 내전 광주에서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공분을 느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존의 지역공동체에서,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현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제되며 짓밟혀온 인간적 존엄을 만회할 기회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포를 딛고 일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천명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다. 계엄군이 직접 맞서는 시민군의 다수가 부르주아 사회와 지역공동체에서 낮은 지위에 있거나 배제되었던 여러 형태의 가난한 사람들로 조직되었다. 항쟁의 후기에 조직된, 살아남을 가망성이 거의 없었던 기동타격대는 더욱더 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잡색부대였다.²⁵⁾ 이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는 다른 유형의 공동체로, 현존하는 주권질서와 화해할 수 없는 공동체로, 요컨대 정치적 자치공동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위와 항쟁은 자신의 존엄을 선언하기 위해 모인 다중들의 봉기(蜂起)로 변모한다.²⁶⁾ 존엄을 선언하는 투쟁에서 각자는 직업이나 신분을 벗어나며, 어떠한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전인(全人)으로 다시 태어난다. 혁명은 부르주아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경계들을 넘어서면서 공통됨을 구축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이 순간에 각자는 바로 자신의 지도자이자 모든 사람에 대한 지도자이다. 이 순간에 각자는 법적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달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초인을 달성한다. 이것이 만인들의 만인들에 대한 자기지배로서의 절대적 민주주의이자 초인들의 공동체이다. 초인들의 공동체는 특이성들의 절대적 협동으로서의 사랑에 의해 조직된다.²⁷⁾

그렇다면 주권에 대항하는 이들이 왜 애국가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드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했을까? 그것은 기존의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의 표시였고 그것에 대한 애국적 충성의 표시였는가? 최정운은 이 행위들을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설명한다.²⁸⁾ 만약 이것이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며 국가적 권위에 대한 요구라면 이러한 행위는 인류애와 융합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 민족주

24) 항쟁과정에서 탁월한 선동력을 발휘한 전옥주가 간첩용의자로 몰려 계엄군에 넘겨진 사건은 이념적 편견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편견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뿌리 깊어 내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며, 그것의 극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시사해 준다.

25) 피터 라인보우-마커스 레더거, 『히드라』, 정남영·손지태 옮김, 갈무리, 2008, 331~335 참조

26) '봉기(蜂起)는 인간이 아니라 곤충인 벌들의 무리, 벌떼들의 움직임을 형상화한다.

27) 안토니오 네그리, 『혁명의 시간』, 정남영 옮김, 갈무리, 6장 참조

28)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 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5.18 기념재단, 앞의 책, 231~291쪽).

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지워버린 절대적 존엄을 표현하는 순간에, 민족의 이익이 자리할 공간은 없다. 애국가와 태극기는 국가를 잃어버린 그래서 국가가 없는 사람들의 비주권적 나라사랑의 표현이며 그것에서 나라사랑과 인류사랑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²⁹⁾ 그것은 국가가 분열시킨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시 연결시키는 사랑의 행위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왜 총을 들었으며 폭력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지키고자 했는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³⁰⁾ 무장폭력은 공동체를 무차별 살상하는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저항이며 '전쟁에 대항하는 전쟁'의 형태였다. 자신의 부모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찢리고 귀를 잘리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짓가슴을 잘리우는 상황, 계엄군이 시민들의 행동을 난동으로 몰면서 무차별적으로 발포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였겠는가? 시민군의 폭력은 방어적인 것이었다. 가장 공격적으로 보이는 폭력조직인 기동타격대조차도 '차량통행증과 시내 주유소의 유류를 보급받기 위한 유류보급증, 상황실 출입증 등을 발부하는 한편, 외곽지대에서 자체방위를 맡고 있던 시민군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인 무력관계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계엄군과 무력으로 정면대치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 않은가? 또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적인 대응방식이 아닌가? 만약 퇴로가 열려있었다면 이러한 질문이 일정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희생을 줄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도주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총으로써 타자 및 자기의 생명, 그리고 여러 유형의 부의 파괴를 불러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를 벗어날 퇴로는 없었다. 로마를 빠져나와 지중해를 건너고자 했던 스파르타쿠스의 군대는 로마군이 지중해쪽의 퇴로를 막자 로마로 진격하여 로마군과 대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주의 시민군들은 스파르타쿠스의 군대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었다.³¹⁾ 당시 계엄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외부에서 광주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 7개 지점을 차단, 봉쇄하고 있었으며, 시 외곽의 야산을 중심으로 매복하여 시민군이 통과하려 하면 사격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광주는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서 외부와의 일체의 소통이 끊긴 상태였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나갈 수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없는 포위상태. 광주는 절대적 계엄, 글자 그대로의 포위상태(state of siege)에 있었다. 주권이 포위를 통해 다중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된 순간이었다. 5월 27일 계엄군은 '폭도들은 투항하라', '너희들은 포위됐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생명은 보장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계속했다. 포위하여 투항을 강요하고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권의 논리였다. 생명을 보장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주권에 투항하여 복종하는 자의 무력한 생명뿐이라는 것이 주권의 논리였다.

퇴로는 없었으며 무력으로 승리할 가능성도 없었다. 광주 이외 지역의 민중들이 항쟁에 나설 가능성도 막혀 있었으며 국제적 차원의 민주연대가 현실적인 것도 아니었다.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난동으로 모는 미디어들의 홍보전쟁은 나머지 지역을 항쟁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으며 미국은 전두환과 광주항쟁에 대한 진압을 공모하고 있던 상태였다.³²⁾ 그렇다면 시민군들은 패배가 자명한 상황에서

29)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다중』,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80~83쪽 참조

30) 1980년 5월 25일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에서 발표된 성명서,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31) 조정환,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 갈무리, 2003 서문 참조

왜 총을 들었는가?

무력진압에서의 패배가 필연적이며 자명했다고 보는 것은 사후적 결론을 역사 속에 투사하는 것일 뿐, 당시 항쟁 지도부에게 패배가 자명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다. 기록은, 23일과 24일 쫓기대회 후 YMCA에서 반성 및 평가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상원을 중심으로 정상용, 이양현, 김영철, 정해직, 박효선 등 지도부들은 향후 투쟁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여기서 불철저한 도청의 수습위원회를 혁파하고 새로운 투쟁 조직을 결성하기로 함과 아울러 향후 투쟁 목표로 ①최규하 정부의 퇴진 ②계엄 해제 ③전두환 처단 ④구속자 석방 ⑤시민 명예 회복 및 사상자 피해 보상 ⑥민주 정부 수립 등을 설정했다. 이러한 투쟁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①시민 쫓기 대회의 지속적 개최 ②도청 수습위에 참여하여 강력한 투쟁 지도부를 결성할 것 ③청년 학생들의 무장화 및 무장 시민군과의 합세 ④무기반납 결사반대, 협상반대 ⑤투쟁의 타 지역으로의 확산 등의 투쟁 방향에 합의했다. 이것은, 항쟁 지도부가 투쟁의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당시 항쟁 지도부는 미국 항공모함의 내항을 알고 있었고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들은 미국이 전두환의 살육 만행을 묵인 방조하는 제국주의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지만 한편으로 전두환 일파가 아직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고 미국이 살인 군부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³²⁾

이러한 고려 속에서 들었던 총, 그러니까 26일 이전에 시민군이 들었던 총은 파괴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 계엄군의 만행을 국내외에 알리고 투항을 강요하는 적에 맞서 존엄을 선언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깃발과 같은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 이후 27일을 맞는 총도 실제로는 파괴의 무기일 수 없고 오직 방어의 무기이고 존엄의 깃발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사람들과의 연대를 호소하는 깃발은 더 이상 아니었다. 항쟁 지도부조차도 이미 피의 진압을 예상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청에서 나갈 사람은 나가도 좋다'는 권고는 그것을 함의한다. 투쟁에 참가하기보다 그것을 대의하고자 했던 개헌주의 입장이 하나둘 도청을 떠나고 나서 그곳에 남은 결사항전 대오는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면서 불의의 세력을 파괴하는 자살폭파자와도 다르며, 어떠한 파괴도 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쥔 자들의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로써 불의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비폭력적이고 비파괴적인 세계의 가능성에 대해 증언하는 순교자들의 저항과도 다르다.

다른 한편에서 도청 결사항전 대오는 무기를 들고 무기를 든 적에 대한 저항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자살폭파자들을 닮았다. 총을 든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파괴의 위협이다. 그 파괴의 대상은 반드시 적에 한정되지 않으며 아(我) 쪽으로도 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은 투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동시에 투쟁 대오에 결의에 따른 위계를 도입하면서 전선을 좁히는 기능도 수행한다. 총을 든 쪽과 총을

32) 5월 23일 미국은 항공모함 '코럴시' 호를 축으로 한 미사일 구축함 두 척과 순양함, 보급함등 7척으로 구성된 기동타격군을 한국 주변 앞바다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미드웨이호', 공군정보통계기 'e3e' 두 대를 한국 주변에 급파하였다. 이것들은 신군부가 진압에 실패해 무장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질 경우 주한미군을 직접 동원할 계획이었음을 보여준다.

33)

입낙평,	「윤상원	열사의	삶과	투쟁」,
http://altair.chonnam.ac.kr/~cnu518/board518/bbs/board.php?bo_table=sub6_03_01&wr_id=991&page=5 .				

들지 않은 쪽 사이의 구획의 위험은 비록 그것이 강한 유대감에 의해 균열과 위계화로 되지 않을 때라도 잠재적으로는 실재한다. 총을 든 쪽은 잠재적 권력으로, 잠재적 국가로 기능한다. 민주시민투쟁위원회의 형태가 점차 근대적 국가형태를 닮아 가고 있었던 것은 총과 시민군의 효과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총은 근대성의 동형원리에 오염된 저항 수단이다. 근대에 생산이 공장에 집중되고 폭력이 군대에 집중되었듯이 저항도 시민군과 그 지도부의 형성을 통해 집중의 형상을 띠고 나타난다. 그러나 광주 도청 결사대는 자신들을 기다리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이며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인지 속에서의 목숨을 건 저항은 불의의 폭력을 증언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해 지속될 저항의 가능성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교자들의 저항을 닮았다. 포위라는 조건에서 그들은 도청에 집중했고 총이라는 파괴의 무기를 들었지만 그 총은 적을 파괴하기는커녕 자신을 방어하기에도 너무나 약한 무기라는 것을 그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던가. 이런 의미에서 도청에 포위된 그들에게 총은 자신들을 향한 거대한 폭력이 정당하지 않음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불의의 권력과 화해할 수 없고 또 화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언문이었으며 현재 자신들이 죽더라도 미래에 다른 삶이 가능할 수 있다는 순교자적 증언에 다름 아니었다.

7. 개헌주의와 호헌주의의 야합 속에서의 제한권력의 변형

이 순교가 사랑의 행동이며, 미래를 향해 던져지면서 현재의 주권에 반대하는 구성적 행동이었다는 것, 이것은 5월 항쟁에 이어 이후에 오래 전개된 5월 운동을 통해 입증된다.³⁴⁾ 5월 운동은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을 둘러싸고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5월 운동은 1997년 학살책임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미온적인 사법처리를 계기로 급격히 국가화되어 이제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기념제로 석화(石化)되었다. 항쟁이 주권에 통합된 것이다. 이것은, 5월 사건을 존재의 존엄에 입각한 제한적 사건으로 보기보다 과잉진압과 기존 법질서로부터의 일탈에 의한 탈법으로 규정해온 개헌주의적 관점이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수습위원회가 민주시민투쟁위원회를 누르고 승리한 셈이다. 이것이 5월 항쟁 청산논리의 구조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로 개헌주의가 호헌주의와 더 이상 정치적 변별성을 갖지 않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무의식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저항이었던 5월 항쟁은 개헌주의적 공식 정치일정의 걸림돌 이상이 아니게 되었다. 5월 항쟁은 현재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일로 처리되어야 했고 새로운 구성력으로서가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상처로 정리되어야 했다. 5.18은 이제 더 이상 비극적 주제가 아니라 매해 반복되는 기념제적 희극의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5월 항쟁 이후의 운동들은 (심지어 해외의 운동들조차도) 5월 항쟁에서 상상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략과 전술을 얻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6~9월의 투쟁은, 광주의 투쟁이 고립 속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후 뒤늦게 전국적으로 부활한 사건이다. 5월은 부활했다. 서울 시청은 광주 도청을 닮았지만 섬처럼 포위되지는 않았다. 투쟁이 전국에서의 동시다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전 세계적 시선이 한반도 남단에 쏠린 현실에서 주권이 투쟁들을 포위하는 것이 불가능

34)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다중』, 411~2쪽.

-미완성 초고-

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나는 기억을 두려워합니다. 기억은 결코 선명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항상 재구축됩니다. 즉, 사람들은 항상 유령들 혹은 더 나쁜게는 환영들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Negri: 2006: 111).

1. 다시 518을 기억하며

최근 518의 “국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화”는 점점 축소된 결과, 518의 내포와 외연이 협소화 및 추상화되어 518에서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는(이광일, 2005; 정호기, 2007) 반성에 주목하고 싶다. 국가폭력에 대하여 광주시민사회가 시민공동체를 이루며 무장투쟁으로 나아갔던 518을 자유해방주의적 관점, 혹은 아나키스트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던 필자(김성국, 1998)로서는 매우 반가운 비판이다. 518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의식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전도된 권력관계를 분명하게 재인식하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1968년에 발생하였던 68혁명 40주년을 맞이하여 흥미롭고도 유익한 논쟁이 있었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한 혁명주의 및 반자본주의로서의 68청산론을 비판하면서, “68을 잊어라. 그 과거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68은 이미 세상을 갈아엎고 변화시킨 후 그 속에 묻혀 있다. 68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68의 스타 롱방디 의원의 적극적 청산론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518은 어떤가? 518은 자기실현의 현재진행형인가 아니면 과거완료형인가? 군부 독재의 퇴진과 민주정권의 설립 이후, 매우 당연한 전개이었지만, 웅장하게 때로 화려하게 거행된 기념

했기 때문이다. 광주민중항쟁에서 5월 21일을 분기점으로 개헌주의를 넘는 제헌주의적 흐름이 생성되었듯이 6월 10일의 항쟁도 호헌주의와 개헌주의의 대타협이었던 6월 29일을 분기점으로 개헌을 통해서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흐름으로 독자화된다.

이 투쟁은 호헌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난 5월과는 달리 호헌주의와 타협한 개헌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1987년의 투쟁에서 제헌주의는 노동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독자화되었고 1987년의 투쟁을 1991년 5월까지 끌고가는 연속혁명적 끈기를 보였으나 결국 개헌주의의 주도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제헌주의 흐름의 중심에 놓였던 민주노조 운동은 1990년대 중반을 경유하면서 점차 개헌주의적 흐름의 좌파로 자리매김 되었다.

1997년에 5월 운동이 종료되었다면 그것은 개헌주의적이었거나 개헌주의에 포섭된 시민과 민중의 5월일 뿐이다. 개헌주의는 5월 사건을 항쟁보다는 학살로 규정된 후 그 학살을 호헌주의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관심을 집중했다. 5월 항쟁을 개헌주의적으로 청산한 후, 호헌주의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5월의 이름, 즉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계속 추진한 것은 개헌주의 세력 자신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개헌주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실업자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다중들을 대량 생산했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디아스포라 다중을 회피할 수 없었다. 개헌주의는,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이전의 호헌주의적 주권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군대를 파병하여 그곳의 다중을 억압함으로써 5월 항쟁을 낳은 적대구조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재생산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5월의 적대는 제국 대 다중의 모습으로 확대 재출현한다.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5월 민중항쟁을 낳았다면 신자유주의의 본격화와 심화는 5월 항쟁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반주권적 다중을 매순간 곳곳에서 양산하면서 그 적대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주권과 다중의 적대는 이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범역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출현하고 있다. 대추리의 주민들,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랜드와 KTX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쟁은 FTA에 반대하는 투쟁, 광우병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과 별개의 것들이 아니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개헌주의 세력에 의해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 독재가 재집권한 호헌주의인 이명박 정부에 의해 더욱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5월 항쟁을 낳은 잠재력은 더욱 깊은 곳에서 더 확산된 형태로 내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제헌적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에 대해 아무도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2002년 이래 미국을 규탄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광화문 일대를 수놓았고 6년 뒤인 오늘 청계천과 국회의사당으로 옮겨 밝혀지고 있는 수많은 촛불들이, 신분도 동기도 목표도 다양한 그 잡색의 촛불들이 28년 전에 광주시민들이 들었던 총의 등가물이 아니라고, 아니 탈근대 시대에 새롭게 창출된 제헌주의의 삶정치적 무기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35)

35) 무기를 혁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네그라-마이클 하트, 「다중」, 조정환, 정남영, 서창현 옮김, 세종서적, 2008 3부 3장 '다중의 민주주의' 참조

사업과 합리적 사후처리 방안으로서 보상이 구체화되면서 혹시나 518은 그 진정성의 빛을 잃고 제도화나 세속화의 길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518은 특정 지역으로서 광주를 벗어나 전국의 기억과 꿈이 되었는지? 나아가 518이 민주운동가, 특히 소수 운동주도자나 지식운동가들만의 독점적 역사해석의 무대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518은 분명 세상을 뒤집는 전기가 되었지만 그것을 만족스럽게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

518의 진원인 광주가 오늘날 평화와 문화를 상징하고 갈구하는 아시아의 메카를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다. 그러나 어떤 평화인가? 누구를 위한 문화인가? 국가폭력의 야만성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리고 극복으로서 평화와 문화는 최소한 국가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적 저항과 전복의 '역능'을 강조해야 하고, 518을 기리는 평화의 터에서는 잡초처럼 들꽃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처연히 꺾였던 무명의 외로운 육신들과 영혼들을 위로하고, 기리고, 되살리는 '다중'의 난장굿판과 대동사회의 신명놀이판이 대항문화/반문화라는 깃발을 펴며 펼쳐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518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부터 시간이 다시 흘러 20년, 30년이 지나면 518은 어떻게 기억될까? 아니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이 글은 근대가 발명하고 완성한 폭력적 국가체제와 경쟁적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일찍부터 비판하면서 대안사회를 제시해 왔던 이념인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518을 이해하고, 518의 꿈과 비전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비록 프랑스로 혁명처럼, 68혁명처럼 혹은 한국의 419혁명처럼, 6월혁명처럼. 518도 도식화되는 기념식 축사와 축제의 자기도취적 자축과 성취감 속에서, 그리고 집단기억의 탈추억화 속에서, 나아가 지배 및 반지배 질서에 의해서 상승적으로 도구화되는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이었던 무한한 욕망과 불가능에 대한 도전의식을 잃어버리면서 반란의 열정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은 모든 위대한 인간사사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퇴색하고 변질되는 운명을 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각의 날들을 대비하여 518의 새로운 기억을 위한 하나의 자기충족적 예언을 시도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가치전제가 된다.¹⁾ 물론 이 글은 아나키스트의 과제인 "행동에 의한 선전(propaganda by deed)"을 따라서 여전히 왜곡과 낙인, 오해와 편견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소수파의 이념 아나키즘의 정체성을 회복해 보려는 부수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2. 어떤 아나키즘인가?

아나키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나키즘에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단순화의 위험이 있겠지만,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해방의 확대 및 심

1) 이 글의 기본적 토대는 김성국(1998)이 제공한다.

화를 위해서 강제 혹은 강제의 구조적 속성으로서 폭력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나키즘의 핵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그러므로 반폭력주의로서 아나키즘은 역사적으로, 최소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에는, 당대의 현실에서 최대-최고의 폭력적 조직이었던 기존의 비/반민주적-독재적 국가체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대안적 사회는 자주인으로서 인간들이 자유연합하여 공동체적 조직을 만들어 상호부조와 자주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의 폭력성 혹은 국가폭력은 모든 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원리이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거의 예외없이 국가탄생과 국가유지의 기반이었다. 제도화된 폭력의 정수요 집결체인 군대 없는 국가가 있는가? 평화의 구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대가 필요하다는 기능론적 해석은 "역기능의 기능성"이라는 모순적 현실을 정당화할 뿐이다. 폭력으로서 비폭력, 즉, 평화를 이룩하겠다는 도구적 합리성의 산물이 바로 군대 그리고 전쟁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간디처럼 비폭력으로써 폭력을 제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혹은 들뢰즈와 가타리처럼 유목주의의 전투장(contested terrain)에서 진지전을 펼치며 전쟁기제를 동원하여 국가장치를 마비시키거나 (혹은 국가의 핵심기제를 역이용하기?) 네그리처럼 다중의 대항권력으로서 반란과 전복을 조직화하는 반제국 전쟁의 재구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네트워크사회에 걸맞도록 가스텔의 권유에 따라서 정체성 권력을 새로운 급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든지.

둘째,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선진적이고 성숙한 민주국가라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가폭력을 비장의 보도로서 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대 제국 미국이 야기한 일련의 람보적 전쟁들, 영국에 의한 아일랜드 내전 및 포클랜드 전쟁, 프랑스의 아프리카 내전 개입, 아프리카에서 전개되는 국가권력의 성립과 쟁취를 위한 대학살, 일본 자위대의 가상전쟁 훈련 등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폭력은 전쟁을 그 결정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종차별과 종족학살, 종교탄압과 이단자 처벌,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군수산업의 성장 등에 동원된다. 물론 그 대의명분으로는 독립국가 쟁취라는 민족주의적 과제나 세계평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최후 선택이라는 구실이 자주 사용된다.

아나키즘은 국가폭력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무정부,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무지배를 상징한다. 주지하듯, 바로 이 무정부(에 대한 세속적 오해)로 인하여 아나키즘은 비현실적 낭만주의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주의로 국가체제를 옹호하는 좌우파 모두로부터 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선 모든 위대한 유토피아 사상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없는 무정부 상태를 요구한다. 마르크스주의도 일시적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국가체제를 승인할 뿐이다. 아나키즘이 주창하는 무정부란 현존하는 국가체제에 구조화된 폭력성을 해체한 후 자기조직성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될 새로운 자기통치, 자기결정, 혹은 자유연합에 의한 자주관리의 사회를 의미한다. 만약 국가체제의 지배/엘리트계급이 진실로 국민을, 대중을, 시민을 "머슴이 되어"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러한 국가체제는 이미 질적으로 기존의 국

가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새로운 사회조직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사회조직을 아나키즘은 “아나키(Anarchy = An + Archy = 강제와 폭력을 휘두르는 우두머리/지배자 없는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나키즘이 사회조직의 원리로서 자기조직성(self-organization)을 최고의 가치로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강제와 억압의 대안으로서 자유와 해방의 세계 혹은 자유연합과 자주관리의 조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말 보다는 행동을, 이론보다는 실천을 우선시 하였던 고전적 서구 아나키스트들은 역사적으로 당대에 현존하였던 폭력적-억압적-착취적 기구였던 자본주의체제와 국가체제 양자를 모두 전면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무장투쟁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아나키스트의 행동원리인 직접행동(direct action)은 과거에는 주로 폭력적인 투쟁방식-무장폭동, 암살, 파괴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대파들에 의해서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였다. 우리 조선의 위대한 아나키스트였던 신채호, 유자명, 정화암 등도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테러리즘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어떤 테러리스트인가? 단언컨대, 아나키즘은 결코 무분별한 테러리즘을 옹호하지 않는다.

아나키스트는 이처럼 저항적 직접행동을 통하여 기존 체제나 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혁명주의자였다. 그러나 마르크시스트와는 달리,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권력체제의 구축을 거부하는 점에서 전위당과 전문혁명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적 혁명(political revolution)보다는 대중과 더불어, 민중 속에서, 시민을 위해 새로운 사회조직의 건설을 추구하는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을 더욱 중시한다. 비록 정치혁명이 사회혁명에 선행하여 발생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주의가 설득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혁명이 혁명의 진정한 수단이고 목표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만약 우리가 국가의 폭력적 지배와 획일적 규율 없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 아나키즘, 특히, 크로포트킨 계열의 아나르코 코뮤니즘에 의하면, 코뮌 혹은 작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가 자유연합과 자주관리에 의해서 조직되어야 한다. 단계론적으로 기술하자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부터 분권형 국가, 연방주의국가, 최소국가, 가장 기본적인 자치단위로서 수많은 코뮌들이 다차원적으로 결합하는 네트워크국가 혹은 무정부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끝으로 아나키즘이 상정하는 대안사회 혹은 코뮌사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이 결코 아니다. 도처에서 강력한 국가체제가 엄존하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미 자유인들은 저항의 수단으로서 전복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코뮌들을 형성하여 즐겁게 투쟁하며 살고 있다. 일상의 질서를 벗어난 작은 공동체들을 주위에서 발견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 공동체에서도 갈등과 경쟁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유와 해방을 위한 최소기준 공통분모 위에서 최대추구 공약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아나키즘의 주요 개념을 재구성하여 518의 아나키스트적 분석을 위한 간단한 구조적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518의 아나키스트적 분석구조

518의 구조적 과정			
구조적 조건 → 구조적 반작용 → 구조적 전환 → 구조적 관계 -----> 재구조화			
518의 아나키스트적 해석			
국가폭력 (시민불복종)	→ 무장투쟁 (직접행동)	→ 반란/전복 (무정부)	→ 자기조직성과 공동체적 연대 (상호부조)
-----> 민주화운동			
신군부의 권력장악 논리			
국가권위 (실증법)	→ 동조/규율 (법적 절차)	→ 질서/서열 (일상생활)	→ 도구합리성과 이익추구 연대 (경쟁논리)
-----> 신군부체제			

3. 대하 518을 흐르는 아나키즘의 물결

아나키스트 연구자들은 외롭게 반문해 왔다. 518의 핵심은 국가폭력, 무정부상태와 공동체, 그리고 직접행동으로서 무장투쟁인데 왜 아나키스트적 관점이 이토록 외면되고 있는가? 물론 아나키즘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것, 특히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1980년의 518에서 아나키즘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었거나 아나키스트가 공개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굳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 아나키즘은 아나키스트의 이념적 전유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강제와 억압에 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 본능적 구조처럼 혹은 어떤 역능적 대항생체권력처럼 내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모든 저항적 인간들은 아나키스트다”라는 명제는 그 과장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설득력을 갖는다. 마르크스주의가 애지중지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계급도 한 때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당 수준/단계가

지 아나키스트적 시각을 공유하였다.

과연 518에서 아나키즘은 어떤 현실 혹은 어느 역사적 지점에서 그 열정적 욕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파국적 미학을 완성하였을까? 먼저 신군부의 의도된 국가폭력이 반국가폭력주의로서 아나키즘의 시공간적 편재성을 확인시켜주는 '구조적 조건'이었다면, 다음으로는 이에 무장투쟁으로 저항하였던 시민군의 직접행동은 미완으로 예정된 혁명이 걸어야만 했던 '구조적 반작용'이었으며, 그 결과로 형성된 무정부 상황은 '구조적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공동체적 사회연대, 즉, 시민공동체는 그간 타율적국가가 요구한 경쟁적 효율성의 영역을 거부한 시민들의 자기조직성이 발휘한 상호부조라는 새로운 '구조적 관계'의 형성을 표상한다. 그러나 시민군이 진압되면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지배권력구조는 신군부의 권력장악으로 나아가는 반면, 대항권력구조는 1980년대 민주화투쟁의 급진화-전투화로 발전된다.

이상의 4가지 상호연관된 구조적 개념들을 중심으로 518의 아나키즘적 연관성을 검토해 보겠다.²⁾

이 글의 분석틀로서 비록 거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미시적 차원의 동학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없다. 구조를, 기든스처럼, 규칙으로서의 제약과 자원으로로서의 기회라고 이해한다면 구조분석은 행위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구조적 조건으로 국가폭력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한결같이 518의 원초적 죄악으로서 국가폭력을 거론한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존재 혹은 발생메카니즘을 역사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신군부의 정치적 책략과 군사진압전략의 측면이나 혹은 다소 빗나간 것이지만 자본주의적 (계급)모순구조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아나키즘은 인류역사를 걸쳐 국가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그것이 폭력의 총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국가의 탄생, 국가의 유지, 그리고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의 목표는 폭력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의 폭력성은 독재체제 아래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높은 강도로 일상화되지만, 민주주의체제 하에서도 국가질서가 위기에 처했다고 국가권력이 판단하면 언제든지 그 벌거벗은 야만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국가체제가 존속하는 한 국가폭력은 내재화된 역사구조적 조건이다.

이 야만적 국가폭력은 518의 광주에만 예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 온 20세기가 인류역사상 최고의 "폭력시대(the long century of violence)"였고, 그 폭력의 대부분이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Keane, 1996).

518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은 다차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역사적 저항구조로부터 자본

2) 재구조화의 문제는 이 글에서 거론하지 않는다.

주의적 모순구조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아나키즘은 항상 폭력적 국가체제의 존재를 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가장 직접적인 구조적 요건으로 간주한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518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자 특성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의 논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신군부는 그러한 야만적 폭력을 기획하였는가? 그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모든 국가권력은 거의 예외없이 국가설립(nation-building)과정 혹은 국가권력투쟁에서 대내외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 신군부 또한 대내외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물리적 힘과 합법적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작전으로서 518을 기획한 것이다.

518의 국가폭력은 419처럼 다소 우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기획의 의혹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폭력적이다. 미리 반폭력을 예상하며 사전에 준비된 폭력처럼 더 이상 폭력적인 것이 있겠는가? 이처럼 조직된 기획폭력의 동원은 국가체제와 같이 치밀하고 막강한 자원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제2차세계대전과 항일독립군의 희생을 통하여 획득한 대한민국, 좌우파의 내전과 625전쟁에 의해 공고화된 남북한분단체제, 419유혈혁명에 의한 민주당정권의 성립, 516혁명군에 의한 박정희 정권의 대두와 같이 민주화의 성공 이전에 전개된 한국의 현대 정권수립사에는 언제나 대내외적 전쟁, 혹은 가상적 전쟁에 대한 공포감 조장 등과 같은 국가폭력적 사태가 존재하였다.

국가질서를 국가폭력에 의존하여 유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독재체제라고 한다. 물론 국가폭력은 518과 같이 총검을 앞세운 물리적 힘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지만, 때로는 특히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각종의 상징적 폭력(예컨대, 여론조작과 여론몰이, 허위사실 유포, 가상적 위협과 공포의 확대 등) 또한 널리 활용된다. 과연 현존하는 한국의 국가체제에는 폭력적 요소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제거되었는가? 제왕적 대통령, 문민독재, 포퓰리즘, 문화/언론/운동권력 등 한국적 특유의 폭력성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물론 518은 국가폭력에 의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진압되었지만, 그 패배는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518은 민주화의 쟁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 희생의 폭도 줄였다. 518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더욱 급진적으로, 전투적으로 발전하였다. 국가폭력의 야만성과 정교성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민주화운동은 운동의 전투적 급진화를 통해 되돌려 주었다. 사실 518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특히 일부 세력에 의해서 점차 폭력화되는 성향을 나타내었는데 반(국가)폭력적 운동이 폭력을 운동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 명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2) 구조적 반작용으로서 무장투쟁

무장투쟁은 흔히 민중투쟁의 방식에 있어서 최종적인 혹은 최고의 성숙단계로 간주된다(장울병, 1990). 극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최후의 자위수단으로 선택될 뿐 아니라,

대부분 죽음을 각오하고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많은 아나키스트들은 직접행동의 투쟁방식으로 무장투쟁, 예컨대 봉기와 암살, 파괴 등을 빈번히 사용하였다.³⁾ 특히, 니힐리스트(Nihilist) 성향의 아나키스트들은 부정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생명의)부정을 통하여 불의의 세상을 부정하는 폭력의 미학을 추구하였다.⁴⁾

518 투쟁에 있어서 역시 최고의 역동성이자 최대의 논란 대상이기도 하였던 것은 시민군으로 대표되는 무장투쟁이었다.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국기를 문란시키는 반란 혹은 반역행위에 해당하는 집단적 무장투쟁의 일정 기간 지속은 해방 이후 한국의 민주운동사에서는 희귀한 사례이다. 사회운동에서 경찰에 대항하여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전선을 이루어 일시적인 폭력적 충돌을 하거나, 경찰의 공격에 대응하여 거점을 확보하여 폭력적 저항을 시도하였던 사례가 있기는 해도 518처럼 시정을 점령하여 무기를 소유하고, 국가의 정규군대에 맞서 조직적으로 저항전선을 확보한 경우는 없다. 특히, 무장해제와 투항을 요구하던 각종 세력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끝까지 무장투쟁을 고수하면서 희생을 감내한 투쟁 방식도 예외적인 것이었다.

아나키즘은 무장투쟁의 선구자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제하 독립투쟁의 방략으로서 외교론, 자력갱생론, 문화주의론 등을 비판하면서 무력투쟁론을 주창한 세력이 바로 아나키스트들이었다. 1920년대 초 의열단이 주도한 암살 행위의 배후에는 아나키즘이 작동하고 있었다. 좌우합작을 추구한 신간회가 합법적 틀 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아나키스트들은 비합법적 무장투쟁만이 광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518의 경우에는 무장투쟁만이 유일무이의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장투쟁이 존재하였던 까닭에 518은 민주화운동의 정점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합법적 폭력에 맞서는 비합법적 대항 폭력의 단호함과 비타협성은 바로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직접행동의 논리를 관통하는 것이다. 물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절차적 정의에 따르는 것은 일상적 안정과 평화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한 행동지침이 된다. 그렇지만 엄청난 폭력의 거대한 야만성에 대항하여 자신의 미력한 존재기반에 위축되지 않고 불가피한 희생의 두려움도 버리고 진지를 사수함으로써 진지를 살리겠다는 518의 무장투쟁 전략은 “생즉사 사즉생”의 살신성인의 길이었다. 일제하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들도 모두 죽음을 자청하여 죽어 나라를 얻고자 하였다. 폭력적 시민불복종은 굴종의 길을 거부한 518시민군이 선택한 비장한 자기완결성이었다.

오늘날 518 무장투쟁의 비극적 결과가 개죽음 혹은 무의미한 희생이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일제하 아나키스트 테러행위의 반제국주의의 효과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월남전에서 승려들의 분신자살이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초래하지 않았던가? 518에서 시민군의 최후항전은 그야말로 미리 공언

3) 톨스토이나 간디와 같은 평화주의적 아나키즘도 존재한다.
4) 인식론이나 사회사상의 한 형태로서 니힐리즘을 일반적으로 부정시해서는 안 된다(하이데거, 2000). 그 긍정적 가능성을 인식하는 반면, 생명중심사상이 갖는 세속성과 존재론적 부자유를 또한 자각해야 한다.

된 자살행위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뒤르켐이 말했던 사회적 차원의 자살, 보다 정확하게는 자기가 꿈꾸고 사랑하던 사회에 대한 헌신적 통합이 요구한 자살이었다.

소수자의 무장투쟁은 그 과정의 격렬함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은 언제나 자기희생이라는 비극적 승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나키즘도 역사적으로 항상 실패하고 배반을 당하는 불행의 미학을 연출해 왔다. 그런데 매우 역설적이지만 아나키즘은 이처럼 실패의 역사를 축적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새로운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정치적 성공기회가 그것의 타락과 부패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518에서 사수파가 택한 무장투쟁의 길과 타협파가 택한 무장해제의 길은 둘 다 필요하였던 것이고, 모두 의미있는 길이었다. 다만 전통적으로 아나키즘이 추구하는 길은 직접행동을 표상하는 무장투쟁의 길이다. 518과 같은 극한적 상황에서 합법적-타협적 수단은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길이었다. 비합법적-무력적 수단은 보다 감성적/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특이한 길이다.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평범한 일상의 존재들도 지양과 고양의 자기변신을 이루며 노예적 삶과 무기력한 관행적 질서를 깨고 자신의 영웅, 즉, 자기주인(自主人) 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던가?

3) 구조적 전환으로서 무정부 상황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던 것 같다. 반민주적 혹은 비민주적인 폭력적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타파한다는 이념적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점을 갖는 동시에 생산적 권력이나 역능으로서의 대항권력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 또한 반국가의 명분하에 일괄적으로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비현실적 전략이기 때문이다.⁵⁾

현실적으로 무정부 혹은 무정부적 상황이 국가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나 혹은 공권력의 위용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비리가 번성하는 법의 무법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날 국가체제 속에서 살면서도 도처에서 무정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해 있고, 증가 추세에 있는 탈법과 위법 그리고 체제도전적 세력은 국가질서와 함께 공존하는 무정부적 질서가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무정부는, 역설적이지만, 일상적인 것이다.⁶⁾ 그렇다면 무정부가 크게 위협하거나 불편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현대의 아나키스트들은 무정부가 법이나 국가기구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억압적, 지배적, 착취적, 기만적, 조작적 기능을 수행하는 폭력적인 법과 국가기구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인간의 자유와 사회의 해방을 이

5)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최소한 보통 비밀선거가 안정적으로 제대로 실시되는 민주국가라도 얼마나 될까?
6) 최근 한국의 각종 선거에서 발생하는 투표율의 충격적인 하락추세는 국가권력이 요구하는 정치질서가 고관 혹은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특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무정부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자 실험이다.

군대가 철수하고 시민군이 시청을 점령하면서 518의 광주는 일종의 무정부 상황을 연출한다. 정부가 없는 상황으로서의 무정부는 항상 무질서와 혼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의 카오스이론이 밝히고 있듯이 혼란은 시간의 경과함께 나름대로의 질서를 생성한다.⁷⁾ 어쩌면 혼란 그 자체가 새로운 질서의 원초적 모습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사회적으로 무엇이 가치있는 질서이고 무엇이 위협스런 혼란인가? 위험한 질서와 유용한 혼란은 없는 것인가? 국가탄생 이전의 모든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의 아수라장이었던가?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과 진시황의 통일천하 질서는 어떤 단절과 연속성을 가지는가? 질서는 반드시 좋은 것이고 혼란은 항상 나쁜 것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과 어떤 질서를 말하는가? 혼란을 겪지 않고 위대한 질서가 창조될 수 있을까? 나아가 새로운 질서는 항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가? 사회통합이 사회갈등과 상호대각적 규정을 반복하며 공존하듯이 질서도 혼란의 기반 위에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아마 질서나 혼란은 시공간적 흐름과 함께 존재론적 특이성을 교환하는 가변적 존재일 것이다.

518의 무정부 광주는 혼란과 질서가 상호 견제의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였다. 그것을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는 없다. 워낙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여러 무정부적 상황들은 아나키즘에 자신감을 제공한다. 파리코뮌, 스페인혁명, 항가리폭동, 수많은 자율적 자치공동체 등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질서가 자생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 이 자생적 질서는 기존의 타율적 질서보다도 더욱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점은 공권력의 부재로서의 무정부가 소위 말하는 “공공의 적”이나 “반시민적 세력”들의 활동을 반드시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과 결탁하는 폭력적 세력들이나 공권력의 내부에 발생하는 지극히 사적이고 당파적인 세력들은 오히려 공권력의 소멸과 함께 소멸될 수도 있다. 인간의 자치능력은 국가의 지배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과소평가 되어왔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를 지방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지방의 소수 지배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체제의 성립 이후 인간은 자치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아비판을 강요 받으면서, 자치훈련과 학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4) 구조적 관계로서 공동체적 사회연대

518의 특성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절대공동체(최정운, 1998 역사공동체(정근식, 2003), 체험-기억공동체(정일준, 2007), 시민공동체(김성국, 1998) 등이 제시되었다. 공동체론에 관한 아나키즘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 마르크스주의는 초기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부터 인간(소외)과 공동체

7) 루만(Niklas Luhmann)의 자동생산이론은 체계의 자기조직성을 강조한다. 이남복(2002)을 참고할 것.

(혹은 communism)에 대한 관심을 유보하거나 소홀히 하면서 국가라는 권력투쟁의 장에 몰입하였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는 절대공동체의 개념처럼 “이 곳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생명도 내것 네것이 따로 없었다(최정운, 1998: 305)...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공포를 이성으로 극복한 인간으로서 해후하고 축하의 의식을 통해 연대감을 확인했다. 시민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성회복은 개인의 요감한 투쟁에 대한 자기 확신 외에 동료 인간들의 인정,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 절대공동체로부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상동: 319)...이 절대공동체는 절대적 적에게 증오심을 모으고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상동: 322)...절대공동체의 형성은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다가온 성스러운 혁명이었다(상동: 323)”라고 518의 공동체를 신성화·미화하지 못한다.⁸⁾

특히, 518의 절대공동체를 “무소가 시민사회와 주권을 동일시했듯 국가권력이 절대공동체와 밀착되어 서로 소외되지 않는 곳(상동: 322)”으로 고양시키면서, “현세의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공통점이 없는 짧은 시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상태의 국가”라고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적·윤리적 원칙 언어의 속박으로부터 몸, 생명의 해방이 이루어진 유토피아로서 다시 갈 수 없는 곳(상동: 323)”으로 절대화·신비화하는 방식에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분석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절대공동체를 형성시킨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은 분명히 인간생명 혹은 인간존엄성의 파괴와 재생을 위한 ‘감격과 승화의 드라마’로 재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국가)폭력과 (공동체적-저항적) 연대”라는 구조적 관계를 이루며 인류역사를 통해 거의 보편적으로 처절한 희생을 치르며 반복되고 있는 ‘비애와 부정의 일상적 삶’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절대공동체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⁹⁾ 모든 반혁명의 거리에서 승리의 축제에서 그와 같은 “체험의 원초적 순수성(상동: 324)”을 표상하는 열정과 헌신은 항상 존재하였다. 여기서 더욱 본질적인 것은 그러한 일시적 해방은 결코 518의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지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폭력에 대항한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투쟁들은 일시적 카타르시스나 해방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양식으로서 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였다. 절대적 공동체의 유토피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아나키스트 공동체가 전제하는 현실적 유토피아는 파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조/재창조된다는 점이 다르다. 공동체는 이상향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국가 없이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적이다(Taylor, 2006).

아나키스트의 공동체는 일상적·세속적이며, 현실 속에 살아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므로 재발견과 재복원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사회의 공동체화는 국가체제의 성립 이후 국가화라는 지배적 권력작용에 의해 역사적으로 축소의 위기를 맞아오고 있다.

8) 최정운(1998: 315)에 의하면 절대공동체는 “성스러운 초자연적 체험이었다”.

9) 훨씬 짧은 순간이지만, 과거 우리는 주변 시민들의 목시적 혹은 직접적 격려를 받으며 데모대열에 끼어서 거리를 점령하여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최루탄에 맞서 화염병과 돌맹이를 던지며, 부상자를 도우는 과정에서 518의 절대공동체적 체험을 공유하지 않았던가? 특히, 동지의 죽음을 알고 싸웠을 경우에는. 부마항쟁에서 학생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전진하던 그 순간 순간들에도 절대공동체적 열정과 사랑이 존재하였다.

놀랍게도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무정부 상황의 광주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공동체적 사회연대가 형성되었다. 이미 앞 절에서 무정부가 곧 혼란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질서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적 연대가 발생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경쟁과 협동의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나 후자가 전자보다도 더욱 기본적인 것이다.¹⁰⁾ 특히, 인간이 본성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발전시켜 온 상호부조(mutual aid)적 협동관계는 위계적 지배에 기반을 두는 국가권력체계가 성립하면서부터 상호갈등적 경쟁관계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주도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오늘날 세계는 경쟁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아나키스트들은 현대 복지국가의 탄생도 그것이 자본주의적 불평등 분배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는 인정하나, 인간들의 자발적인 상호부조 능력과 기회를 “조세부담을 통한 복지예산”의 확보라는 관료적 제도와 복지전담기구의 소관으로 이전시켜 버림으로써 자본주의적 효율성을 재확인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한다.

사실 인간들은 자본주의적 무한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형태의 상호부조적 협동관계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거나 지속시키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관계, 직장내 동료관계, 취미클럽이나 봉사단체, 의도적 공동체 관계 등 비경쟁적 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수많은 결사조직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한다. 경쟁적 관계가 발생시키는 긴장과 피로, 허무와 좌절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도우는 사회적 책임의 즐거운 수행으로서도 상호부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생존원리이다.

따라서 무정부라는 새로운 극한상황에서 공동체적 연대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발견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지배체계가 작동하는 무정부 이전의 광주는 일상의 관행에 따라서 경쟁적 삶을 주축으로 하여 영위될 수 있었지만, 국가라는 일상의 안전판 혹은 보호장치가 사라진 518의 광주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길의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면서 새로운 집합의식과 집단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동체적 협력관계는 인간의 생존본능 혹은 생존원리로서 인간진화와 함께 축적 내장된 인간성의 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사회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근대와 함께 모든 공

10) 크로포트킨이 제시한 “평등과 우애를 기초로 한 자유로운 결사체”(이진경, 2001: 60)로서의 증세도시가 아나키스트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전형이 된다. 일제하 이회영이 만주에서 설립하고자 하였던 생산과 교육 그리고 투쟁의 공동체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공동체주의와 코문주의의 발생론적 진화론적 차이를 구별하려는 이진경(2001)의 존재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지만, 아나르코 코뮤니즘을 통해서 아나키즘과 사회주의가 최종적 순간(in the last instance)에 즐겁게 화해하는 구조적 조건을 중시하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를 “특이성의 복수성을 설명하고 허용하는 공통성”(Negri, 2006: 113)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동체적 관계나 연대가 파괴절멸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약화되거나 변형되었을 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기복구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자동생산 기제이다. 그래서 특수한 공동체인 절대공동체는 쉽게 파괴되거나 사라지겠지만, 원형으로서의 공동체적 연대는 인간사회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결합적 관계(Association)로서 사회는 바로 공동체적 연대를 기능적 필수요건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핵심은 연대(Solidarity)이다.¹¹⁾

4. 518의 아나키스트적 미래

이제 518을 다시 발명하자. 그것은 518이 지녔던 의식적-무의식적 욕망들을 일깨우고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길의 하나가 국가폭력을 철저히 제거하고 공동체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추세의 518의 국가(의례)화는 518을 이대로 서서히 안락사 시킬 위험성이 적지 않다. 국가는 역시 획일화, 통일화, 표준화를 생산하는 기존 질서의 대명사요 대변인이기 때문이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탈근대사회에서 아나키즘은 518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함께 살아 갈 수 있을까?

다소 추상적이지만, 이 심포지엄의 기획의도처럼, 518의 잡종화(Hybridation) 혹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가 필요한 시점이다. 518의 지배담론을 대항담론과 결합시키고, 518을 광주로부터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투쟁으로부터 해방시켜보자. 그 해방의 여정을 위해 아나키스트들은 분권국가, 연방국가, 최소국가를 위시하여 자주관리나 코문/공동체주의와 같은 좌표를 세울 것이다.

특히, 518에서 최후의 밤을 지킨 직접행동의 전사들을 위해서 비폭력 평화주의 아나키즘과 허무주의 아나키즘의 창조적 재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518 최후의 밤은 구조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고 만들어 낸 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나키즘은 자기확대적 시민사회 혹은 전지구적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주목할 것이다.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로서 광주의 518은 419 미완성 시민혁명을 완결시키는 전환점이 아닌가? 518을 통해 탄생한 오늘의 한국 시민사회가 여전히 계급적으로 분열되고,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518의 공동체적 연대와 시민적 저항은 여전히 우리의 주요한 모델이다. 아나키즘은 신사회운동의 재급진화를 통해서 시민사회의 방어와 확장을 동시에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따라서 법치주의의 틀 내에 구속되어 쉽사리 작동하지 못하는 처지이다. 그러나 타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이 전쟁의 형태로서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518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하나가 평화가 되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실 국가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 그러나 국가체제 자체를 당장 소멸시킬 수 있는 이유도 방도도 없는 것이므로, 탈

11) 하버마스도 체계의 권력 및 화폐논리에 대각을 이루는 생활세계의 연대성에 주목한다.

국가주의의 시대적 조류를 따라서 세계시민사회와 사해동포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민족국가의 민족적 국민으로부터 세계시민사회의 탈국가적 시민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다중?)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민족적 차이를 넘어 타민족과 동고동락하는 탈민족주의적 잡종화, 국가권력이 그어 놓은 주권적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유목하며 세계시민이라는 생산적인 정체성권력을 형성하는 탈국가주의적 탈영토화는 아나키즘과 518이 즐겁게 공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다.¹²⁾

<참고문헌>

- 김성국, 1998,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 pp. 91-159,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편, 나남출판.
- 이광일, 2005, “지구화시대 한국의 진보운동과 518 민중항쟁의 현재적 재구성”, 『민주주의와 인권』 5-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이남복(역), 2002,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사상』, Walter Reese-Schaefer(저), 백의.
- 이진경, 2001, “공동체주의와 코문주의-코문주의의 공간성에 관하여”, 『문학과 경계』 통권 3호/겨울호: 56-84.
- 장을병, 1990, “광주 5월민중항쟁에서의 무장투쟁”, 『광주 5월민중항쟁』, 현사연(편), 풀빛.
- 정근식, 2003, “518의 경험과 코뮌적 상상력”,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김진균 편저, 문화과학사.
- 정호기, 2007, “저항의례의 국가화와 계승 담론의 정치: 518 민중항쟁의 추모의례”, 『경제와 사회』 76: 10-38.
- 최정운, 1998,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 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pp. 269-327,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편, 나남출판.
- Heidegger, Martin, 1961, *Nietzsche: Der Europäische Nihilismus*, Klett-Gotta. (『니체와 니힐리즘』, 박찬국 역, 철학과 현실사, 2000.)
- Keane, John, 1996, *Reflections on Violence*, Verso.

12) 그러나 이 글의 서두에서 인용한 네그리의 경고처럼 필자도 아나키즘의 유행과 518의 망령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위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518의 아나키스트적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그리의 반제국 투쟁은 필자의 세계시민사회 구축론과 저항적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그의 유물론적 다중(multitude)과 필자의 탈물질/탈세속주의자 세계시민은 다소 상이한 유토피아를 갖는 것 같다.

- Negri, Antonio, 2002, *Du Retour de Antonio Negri*, Calmann-Ley. (『귀환』, 윤수종 역, 이학사, 2006.)
- Taylor, Michael, 2000, *Community, Anarchy & Lib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공동체, 아나키, 자유』, 송재우 역, 이학사, 2006.)

<주최 단체 연락처 및 소개>

■ (재) 5·18기념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관
Tel. 062-456-0518 / E-mail. master@518.org
URL. <http://www.518.org>

5·18기념재단은 5·18민중항쟁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30일, 뜻을 같이하는 광주시민, 해외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 출연 등의 정성이 모여 설립되었다. 각계의 시민들과 5월 민중항쟁 관련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문화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복지사업, 5월 정신 실천자들에 대한 시상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열림관
Tel. 02-2610-4723 / E-mail. democracy@skhu.ac.kr
URL. <http://www.democracy.or.kr>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는 '아래로부터 위로'라는 기본 관점과 '비판적·실천적 사회과학의 지향' 및 '대안적 사회과학의 수립'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을 특성화된 연구 주제로 하여, 이 영역에 대한 체계적 심화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의 우수한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립되었다.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아시아적 전형의 창출과 이론화를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이를 통해 향후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하는 연구소가 되고자 한다.

■ 전남대 5·18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용봉관 1층
Tel. 062-530-3916 / E-mail.
URL. <http://518.ac.kr>

5·18연구소는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학문적 탐색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다. 5·18연구소는 매년 5월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5·18항쟁에 대한 연구논문집·연구총서·자료집·5·18항쟁을 알리는 교재 발간 등을 통해 5·18항쟁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항쟁의 숭고한 이념을 미래 민주주의 가치로 승화시켜내고 있다.

■ 학술단체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44
Tel. 02-747-0338 / E-mail. haksul2004@empal.com
URL. <http://www.haksul.org>

학술단체협의회는 학술연구단체간의 상호교류와 공동연구,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진보적 학문 발전과 사회 민주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1988년 11월 5일 창립되었다. 2008년 현재 26개의 학술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전체 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술단체협의회는 가입 회원단체는 공동연구 및 조사사업,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및 공동협력사업 등 기타 협의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